

www.kicce.re.kr

202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일본	3
● 임신·출산지원	4
● 일·가정 양립	10
● 양육지원	12
● 유아교육·보육	19
● 아동·청소년지원	25
● 기타	30
미국	37
● 임신·출산 지원	38
● 양육지원	43
● 유아교육·보육	46
● 기타	67
독일	77
● 임신·출산 지원	78
● 일·가정 양립	81
● 유아교육·보육	87
● 아동·청소년지원	101
● 기타	112
영국	123
● 양육지원	124
● 유아교육·보육	128



스웨덴 -----	159
● 임신·출산지원-----	160
● 일·가정 양립-----	162
● 양육지원-----	165
● 유아교육·보육-----	169
● 아동·청소년지원-----	175
● 기타-----	187
호주 -----	193
● 임신·출산지원-----	194
● 양육지원-----	196
● 유아교육·보육-----	200
● 아동·청소년 지원-----	227
● 기타-----	232

202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일본

임신·출산지원		
1	2025년 특정 임신부 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공모	4
2	무통분만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5
3	교토시 임신·출산·육아 상담 통합 체계 신설? 교토부·교토시 협력 아래 “SNS 기반 맞춤형 상담 창구” 2025년 7월부터 본격 운영	6
4	기타큐슈시 산후 여성 대상 ‘산후 케어 사업’ 운영	7
일·가정 양립		
1	아침 시간대 아동 돌봄 공간 확보 사업 안내	10
양육지원		
1	아기와 매일이 더욱 행복해진다! 예비 아빠 육아 강좌	12
2	저출산 대책 KPI 검토단	13
3	2025년도 교토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개요	15
4	2025년 한부모가정 등 아동 식사지원사업 공모 안내	16
5	육아 지원 활동 이키이키 센터	18
유아교육·보육		
1	보육 ICT 랩 사업	19
2	취학 전 교육·보육시설 정비 교부금	20
3	보육활동 원스톱 프로젝트	21
4	후쿠오카시 유치원형 입시보육사업 보조금	22
5	2026년도 보육 관련 예산 요구안 개요	24
아동·청소년지원		
1	교토시 『하구쿠미(育み) 플랜 2025-2029』 요약	25
2	도쿄도 오타구와 아동 상담 공동운영 모델 사업 협정 체결	26
3	어린이가정청 × FC도쿄, 스타디움에서 ‘어린이의 고민’에 공감하는 캠페인 이벤트 개최!	28
기타		
1	어린이 사고 방지 핸드북	30
2	후쿠오카시 어린이 주도 활동 지원하는 「어린이의 꿈 응원 사업」시행?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기획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지역 연대를 강화	32
3	아동 성폭력 방지법 시행 준비 검토회 (제8회)	33
4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	35

❖ 임신·출산지원

1. 2025년 특정 임신부 지원 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공모

■ 본 제도는 ‘임산부 등 생활 원조 사업소’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임신부나 출산 후 모자 등(이하 ‘특정 임신부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특정 임신부 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임.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가 본 사업을 시행함.

- 1) 법인격을 가질 것; 복수의 법인이 공동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표 법인을 지정하여 해당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것(단,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복수의 법인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2) 본 제도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을 보유할 것
- 3) 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영 기반을 갖추고, 자금 관리 및 정산 능력이 보장된 경리 시스템을 보유할 것
- 4) 일본 내각부로부터 보조금 지급 정지 또는 지명 정지 조치를 받은 기간 중이 아닐 것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 시행 후 결과 및 효과에 대해 보고해야 함.

- 1) 전국 포럼 개최
 -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강화하며, 임신부 등 생활 원조 사업소의 담당자를 발굴하고 지원 종사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임신부 등 생활 원조 사업소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의 포럼을 개최함.
 - 대면 형식으로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 형식 또는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방식도 가능함.

2) 기타

- 본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활동이 있을 경우,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실시할 수 있음.
- 별첨 1의 『2025년도 특정 임신부 등 지원 기관 네트워크 형성 사업 실시 요강(안)』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2025년 02월 21일

출처 : <https://www.cfa.go.jp/procurement/d3d647fd>

2. 무통분만 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 도쿄도에서는 안심하고 무통 분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한 도민을 대상으로 무통 분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줌.

■ 대상 조건

항목	요건
출산일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자 ※ 단,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무통분만을 예정하고 있던 자가 2025년 9월 30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면 대상에 포함.
분만 방법	경막외 마취 또는 척수 지주막하 경막외 동시 마취로 무통 분만을 받은 자
의료기관	도쿄도가 지정하는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자
거주지	도내 지자체에 임신 신고를 하여 모자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지원금 신청일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기한	출산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엄수)

■ 지원 대상이 되는 비용

- 무통분만 관련 비용으로 출산한 자에게 청구된 금액
- 경막외 마취 비용 및 관리 비용 등, 마취 약제비, 무통 분만과 관련된 일련의 의료 행위에 소요된 비용.

※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입원실 비용·식사비 등

- 문서료 등 의료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 보험 적용이 된 비용(예: 긴급 제왕 절개 등)

※ 긴급 분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전에 이루어진 자비 징수분의 의료행위를 영수증·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원 금액

- 최대 10만 엔
- ※ 10만 엔이 넘는 금액은 자기 부담.
- ※ 무통 분만 관련 일련의 의료행위 1회당 1회만 지원(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 대상 의료 기관

- 대상 의료기관의 목록은 2025년 3월 28일 기준 첨부 파일로 확인 가능.
- 대상 의료 기관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 예정임.

2025년 03월 28일

출처 : <https://www.metro.tokyo.lg.jp/information/press/2025/03/2025032806>

3. 교토시 임신·출산·육아 상담 통합 체계 신설 - 교토부·교토시 협력 아래 “SNS 기반 맞춤형 상담 창구” 2025년 7월부터 본격 운영

■ 정책 개요

- 교토시는 2024년 3월부터 시민이 원하는 시점에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고민을 SNS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음.
- 이후 2025년 7월 1일부터는 교토부와 교토시가 협력하여 <교토 임신부터 육아까지 SNS 상담> 및 <교토 임신 SOS>라는 두 개의 상담 창구를 새롭게 설치·운영하기로 결정했음.
- 이 조치는 임신·육아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임신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하고자 한 정책적 시도임.

■ 주요 제도 신설 내용

항목	교토 임신부터 육아까지 SNS 상담	교토 임신 SOS
내용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한 폭넓은 상담	예기치 못한 임신 등에 관한 특화된 상담
상담 방식	- LINE을 통한 문자 상담 - Zoom을 통한 온라인 대면 상담	- LINE을 통한 문자 상담
응대 시간	- 문자 상담: 365일 24시간 접수, 24시간 이내 회신 - 대면 상담: 사전 예약제 (일·공휴일·연말연시 등 제외)	- 문자 상담: 24시간 365일 접수 ※ 회신 가능시간 월·수: 9시~12시까지 화·금·토: 15시~18시까지 목: 17시~20시까지 (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비용	무료 (통신비는 본인 부담)	무료 (통신비는 본인 부담)

■ 대상자

- 교토부 거주자로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상담을 원하는 자
- 교토부 거주자로서 예기치 못한 임신, 출산 여부 결정, 학업·직장 병행 문제 등 복합적 고민을 가진 자

■ 제도적 확대 및 특징

- 기존에는 0~2세 아동의 부모만이 육아상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3세 이후 아동 양육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음.
- <교토 임신 SOS>는 출산 자체를 고민하는 이들, 특히 미혼, 청소년, 학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등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과 정보 제공 창구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음.
- 비용 부담 없이 문자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며, 상담의 프라이버시와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었음.

2025년 06월 24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342609.html>

4. 기타큐슈시 산후 여성 대상 ‘산후 케어 사업’ 운영

- 산후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피로, 신체 컨디션 저하, 심리적 불안 등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불안정해지기 쉬운 시기임.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립감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함.

■ 이에 기타큐슈시(北九州市)는 출산 후 육아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숙박형, 당일 이용형, 단시간 이용형, 자택 방문형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케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산모가 보다 안심하고 육아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 이용 대상자

- 기타큐슈시 거주자 중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와 아기
- 의료 행위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엄마와 아기 모두 감염 증상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 수유 및 아기 목욕 지도
- 육아 전반 상담
- 산모 건강 관리
- 모유 수유 케어 등

■ 이용 상한

- 서비스 총 이용 일수: 최대 7일
- 당일 이용형은 출산 후 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최대 3일까지 가능

■ 이용 요금 (식사비 포함)

시행내용	일반세대	감면세대
숙박형	3000엔	1000엔
당일이용형	1000엔	300엔
단시간 이용형	500엔	150엔
자택 방문형	1000엔	300엔

■ 주의사항

- 1) 감면 신청 시 제출 서류
 - 생활보호 가정: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사본

- 시민세 비과세 가정: 생계부양자의 시민세 비과세 증명서 사본(4~6월 신청시 전년도 비과세 증명서 사본)
- 2) 이용 요금은 이용 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함
- 3) 숙박형·단시간 이용형의 교통비는 실비 부담
- 4) 자택 방문형은 요금 외에 스태프 파견 교통비 실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금액은 기관별로 상이함

■ 이용 방법

- 1) 신청 및 등록
 - 희망 기관에 연락하여 이용 가능 여부 및 일정을 상담 후, 산후 케어 사업 등록·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2) 이용 시 유의사항
 - 이용 시 모자 건강 수첩을 반드시 지참
 - 일부 사업소는 희망 날짜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이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취소·변경 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소에 연락하며, 취소 수수료 여부는 해당 사업소에 확인해야 함

2025년 07월 28일

출처 : <https://www.city.kitakyushu.lg.jp/contents/11700307.html>

❖ 일·가정 양립

1. 아침 시간대 아동 돌봄 공간 확보 사업 안내

■ 사업 개요

- 맞벌이 등으로 이른 아침에 부모가 출근해야 하는 가정을 위해 등교 전 아동 돌봄 공간을 제공함
- 구립 초등학교 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아동 공간을 마련함
- 전자 신청 접수를 시작함

■ 시행 학교

- 겐지마에 초등학교(源氏前小学校), 도고시 초등학교(戸越小学校), 호요노모리 학원(豊葉の杜学園)의 3개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실시함.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각 학교 교실 입실 가능 시각까지 이용할 수 있음
- 가정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시각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등교 시, 각 가정에서 안전 확보에 유의하도록 안내함

■ 신청 안내

- 오전 돌봄 공간 이용을 위해 신규 등록 및 전자 사전 신청을 받음
- 이용 희망 월의 전월 10일까지 신청받음
- 2025년 5월 이용은 첫 시행 월로, 예외적으로 2025년 5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함

■ 이용료 및 보험

- 이용료는 무료임
- 각종 사고에 대비해 단체종합보장제도 및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함)
- 결석 시, 별도의 연락은 필요하지 않음

■ 운영 내용

- 위탁업체 직원이 상주하여 아동을 관리함
- 아동은 직원에게 학년과 이름을 알린 후 독서나 자습 등 조용한 활동을 하도록 함(공놀이나 달리기 등 운동은 불가함)
- 학습지도는 실시하지 않으며, 위급 시에는 직원이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음

■ 미시행일

-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장기방학(춘계, 하계, 동계 휴업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음
- 개교기념일, 학교 행사로 인한 대체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입학식 및 졸업식 당일에는 운영하지 않음(초중통합학교는 입학식 전날도 포함함)
- 폭우, 폭설, 지진 등으로 인한 휴교일에는 운영하지 않음
- 소속 학교·학년의 학급 폐쇄 기간 중 해당 아동은 이용할 수 없음

2025년 05월 02일

출처 : <https://www.city.shinagawa.tokyo.jp/PC/kodomo/hpg000006093.html>

☞ 양육지원

1. 아기와 매일이 더욱 행복해진다! 예비 아빠 육아 강좌

■ 아이를 낳는 엄마는 임신 중이나 출산 후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 아빠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아빠 자신도 기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불안을 느낄 수 있음.

■ 도쿄는 앞으로 아빠가 될 남성을 위해 부모가 되기 위한 산전 준비와 출산 후 생활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이미 아빠가 된 분들에게도 육아 중인 부부간의 소통 등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아기와의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진다! 예비 아빠 육아 강좌'를 개최함.

1) 일시: 2025년 2월 8일(토) 13시 00분부터 16시 00분까지(접수 시작 12시 30분)

2) 대상자: 임신부의 보호자 남성(부부 참여도 환영)

※ 당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돌봄교실(사전신청제·선착순)이 마련되어 자녀가 있는 사람도 부담 없이 참여 가능.

3) 내용

- 세미나(13시 00분~14시 45분): 선배 아빠, 엄마인 2명의 강사가 육아 체험 에피소드와 부부가 부모가 되기 위한 산전 준비, 아빠의 역할, 아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등에 대해 토크 세션을 진행함. 또한, 참가자끼리 향후 육아와 아빠로서의 육아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룹워크 시간을 마련하였음.

- 미니 세미나(15시 00분~15시 40분): 유아용품 전문가인 강사가 아기와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산전·산후에 어떤 유아용품을 준비하면 좋을지 등을 설명함. 아기에게 편안하고 부모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안기 및 업기 실전 연습 시간도 있음.

• 전문가가 알려주는 앞으로 필요한 유아용품 고르는 법

• 산후 즉시 도움이 된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아기띠 착용 방법과 아기띠 고르는 법

- 상담(15시 45분~16시 00분): 세미나 및 미니 세미나 강사님께서 자녀 양육에 관한 다양한 고민 등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음.

4) 비용: 무료

5) 참여 방법: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Zoom)

6) 기타

- 강좌 종료 후에는 도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세미나 영상을 2월 10일(월)에 공개 예정임.
- 임신과 출산, 가사·육아, 육아 친구와 육아 행정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디지털 북 '아빠 육아 스타트 북'을 공개할 예정임.

2025년 12월 01일

출처 : こども家庭庁×FC東京スタジアムで“こどもの悩み”に寄り添う啓発イベントを開催！ | こども家庭庁

2. 저출산 대책 KPI 검토단

■ 『어린이 미래 전략』(2023년 12월 22일 각료회의 결정)은 모든 아동 및 육아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과 마주하는 기쁨을 최대한으로 느끼기 위한 4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집중 대응 기간에 '가속화 플랜'의 실행 상황과 각종 시책의 효과 등을 검증하기로 함. 더불어 아동·육아 정책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PDCA(계획, 실행, 평가,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의 PDCA 추진 및 저출산 대책 KPI의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단을 설립하기로 함.

■ 저출산 대책 KPI 개요

1) 3대 정책 목표

- 저출산 트렌드 전환
-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희망이 실현되는 사회 구현
-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사회 구축

2) 정책 목표 상황 파악을 위한 지표(예시)

- 희망출생률, 합계 출산율, 부부의 이상적인 평균 자녀 수, 부부의 평균 예정 자녀 수, 결혼 의향 또는 계획을 가진 미혼자의 비율, 미혼자의 평균 희망 자녀 수

3) 가속화 플랜 PDCA 시행 시의 4대 원칙(어린이 미래전략)

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않음.

- 1년 이내에 결혼을 할 경우 '결혼 자금'이 결혼 장벽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 감소를 목표로 함.

- 청년층의 실질 임금 증가를 목표로 함.
 -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를 낳지 않는 이유로 '육아 및 교육비 부담'을 꼽는 비율 감소를 목표로 함.
- ②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음.
- 지역에서 육아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함.
 - '아이의 돌봄이나 간호가 필요한 경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③ 어떤 상황에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안정감이 있음.
- 한부모 가정에 속한 자녀의 진학률 증가를 목표로 함.
 - 입양 위탁률: 영유아 75%, 영유아기 이후의 어린이 50%를 목표로 함.
- ④ 아이를 기르면서 인생의 폭을 좁히지 않고, 꿈(목표)을 추구할 수 있음.
- 첫 아이 출산 이후 여성의 취업 지속률 향상을 목표로 함.
 - 결혼, 임신, 자녀·육아로 따뜻한 사회가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검토단 구성

- 1) 저출산 대책 KPI 검토단은 별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단장은 검토단 내에서 선발되며, 어린이가정청 장관이 지명함.
- 2) 단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3) 검토단의 사무는 어린이가정청 장관 산하 저출산 대책실이 담당함.
- 4) 검토단은 전문가 간 솔직한 의견 수렴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토단에서 이용한 배포 자료 및 회의 주요 내용은 정리 후 공표함. 다만, 좌장은 공표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논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배포 자료 및 회의 주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02월 26일

출처 : <https://www.cfa.go.jp/councils/syoshika-kpi-team>

3. 2025년도 교토시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는 0세 6개월~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
- 보호자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월 최대 10시간까지 어린이집 이용 가능
- 자녀에게 공동생활 경험 제공, 보호자에게는 육아상담 및 지원 제공
- 2025년 4월 1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

■ 실시 개요

1) 대상 아동

- 교토시 거주 아동
- 이용 개시일 기준: 0세 6개월~만 3세 미만
-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 ※ 만 3세 생일 전전날까지 이용 가능
 - ※ 대상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인정어린이집, 소규모·가정적·사업소내·기업주도형 보육 사업소 등

2) 이용 가능 시간

- 아동 1인당 월 최대 10시간
- 시간 이월 불가
- 복수 시설 이용 시에도 총합 10시간 이내

3) 이용료

- 시간당 최대 300엔 (시설에 직접 납부)
- 급식비·간식비·실비 별도
- 생활보호세대, 시민세 비과세 가구: 감면 가능

4) 시행 시설

- 시설별 수용 연령·요일·시간 상이

- 목록 별도 제공

■ 신청 및 이용 절차

※ 2024년 업데이트 내용 반영

- 1) '교토시 스마트 신청' 통해 이용 신청
- 2) 신청 완료 → 이용 결정 통지 메일 수신
- 3) 동시에 'info@mail.cf'에서 회원가입 안내 메일 수신
- 4) '어린이 누구나 통원제도 종합지원 시스템' 로그인
 - 수용 현황·정원 확인
 - 희망 시설에 사전 면담 및 예약 신청
 - 일부 시설은 시스템 외 직접 조율 가능
- 5) 사전 면담 확정 연락 수신 → 약속한 날짜에 면담 진행
- 6) 이용 개시

2025년 04월 16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hagakumi/page/0000338368.html>

4. 2025년 한부모가정 등 아동 식사지원사업 공모 안내

■ 공모 개요

- 어려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식사, 식품·식재료, 학용품, 생필품을 제공하는 '어린이식당 등(어린이식당, 어린이식탁, 푸드팬트리 등)'을 지원함
- 해당 사업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광역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이하 '중간지원법인'이라 함)의 활동을 지원함
- 어린이의 빈곤, 고독·고립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실시 주체

- 본 사업은 중간지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함
- 중간지원법인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임
 - 1)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익사단법인, 일반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기타 법인격을 가질 것(단, 영리 목적 법인은 제외함)
 - 2) 어린이식당 등 사업자에게 운영지원 등 지원활동을 하며, 지원활동·육아지원·한부모가정 지원·취약계층 지원 중 하나에 대해 공모신청 시점 기준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 3) 복수의 지자체에서 실제로 어린이식당 등 지원 활동을 수행할 것
 - 4)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원을 갖출 것
 - 5) 필요한 경영기반과 자금 관리·정산 가능한 회계를 갖출 것
 - 6)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단체가 아닐 것
 - 7) 내각부로부터 지명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 아닐 것
 - 8)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사기, 협박, 뇌물 등) 사실이 없을 것(다만, 비고의적 기입은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 시, 반드시 간사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는 간사자가 제출함(단, 간사자는 사업을 전적으로 위탁 불가함)

■ 제출 기한 및 방법

- 어린이가정청 지원국 가정복지과 어린이 빈곤대책 담당에 공모요강을 확인 후, 안내된 제출서류를 2025년 5월 26일(월) 18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함

2025년 05월 07일

출처 : <https://www.cfa.go.jp/policies/hitori-oya/kodomo-syokuji-koubo/r05-hosei>

5. 육아 지원 활동 이키이키 센터

■ 개요

- 육아 지원 활동 이키이키 센터(교류의 광장)는 육아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육아 상담에 대응하며,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육아 강좌와 같은 사업을 실시함.

■ 시설

1) 벚나무 교류의 집(桜木ふれ愛の家) (사업운영: 사회복지법인 신유복지회(眞友福祉會))

지원내용	○ 육아 부모자녀(주로 영유아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교류·모임 공간 제공 ○ 육아 상담사의 상담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및 육아 관련 강좌 운영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직접 문의 바람.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공휴일·연말연시는 휴무
소재, 연락처	伏見区石田大山町15-5 TEL572-2515 후시미구 이시다 오야마초 15-5 TEL 572-2515

2) 꽃송이 교류의 광장 스마일(はなぶさつどいの広場スマイル) (사업운영: 사회복지법인 시신복지회(志心福祉會))

지원내용	○ 육아 부모자녀(주로 영유아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교류·모임 공간 제공 ○ 육아 상담사의 상담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및 육아 관련 강좌 운영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직접 문의 바람.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공휴일·연말연시는 휴무
소재, 연락처	伏見区醍醐上ノ山町18-9 TEL575-3737 후시미구 다이고 우에노야마초 18-9 TEL 575-3737

2025년 11월 06일

출처 : <https://gw.kicce.re.kr/jsp/user/frame.jsp>

❖ 유아교육·보육

1. 보육 ICT 랩 사업

■ 전국 복수 거점에서 민간사업자 등이 지자체와 연계해 아래 3가지를 패키지로 수행하는 시범 활동(‘보육 ICT 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 ICT 환경 정비에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더 확보함으로써, 부담 경감과 보육의 질적 향상 효과를 보육 현장이 피부로 느끼는 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더불어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의 보육교사를 꿈꾸는 젊은 인재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함.

1) 첨단 보육 ICT 시범화: 일정 지역 내 첨단 보육 ICT를 실천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에 실천 사례 공개나 도입 효과 극대화 등을 통해 시범화하는 활동을 지원함. 사례 발굴 시에는 별도로 실시하는 보육 ICT의 도입 현황에 관한 조사 연구와도 연계를 도모함.

※ 다른 보육 ICT와 관련된 사업에서 지원을 받는 시스템·기능 관련 경비는 본 제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2) ICT에 관한 상담 창구·인재 육성: ICT 도입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 대응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ICT 추진의 핵심이 되는 인재의 육성, ICT 활용에서 협력 지원을 하는 외부 인력 파견에 관련된 경비를 지원함.

3) 네트워크 형성·보급 개발: 포괄적인 ICT화를 실시하는 보육시설 등이나 지자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이러한 활동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보급 개발에 관한 경비(지자체 내에서의 첨단 사례의 종합적 전개, 전국적인 선진 지자체·시설 간의 네트워크 형성·정보 교환 등)를 지원함.

■ 시행 주체: 보육 ICT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민간사업자 등 (공모에 의해 결정)

■ 보조율: 정액

※ 민간사업자 등이 실시 주체가 되어 별도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실시 단체(지자체 및 연계사업자 등)의 시행을 관리함

2025년 01월 23일

출처 : <https://www.cfa.go.jp/policies/hoiku/hoiku-ictlabo>

2. 취학 전 교육·보육시설 정비 교부금

■ 보육 제공 체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보육소 등 보육시설의 신설·수리·개조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자체가 수립한 보육시설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및 소규모 보육소 등의 시설 정비사업 및 방음벽 설치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함.

■ 보육소 정비사업(사립), 유보연계형 인정어린이원 정비사업(사립), 인정어린이원 정비사업(보육소 형·유치원형, 사립), 공립 인정어린이원 정비사업(교육 부분에 한함), 소규모 보육 정비사업(사립·공립), 영유아 통원지원사업(‘아이 누구나 통원제도’) 시행 사업소 정비사업(사립·공립), 방음벽 설치 및 방법대책 강화 사업 등.

■ 시행 주체 및 설치 주체

1) 시행 주체

- (공립시설 이외) 지자체
- (공립 인정어린이원) 도도부현 및 지자체

2) 설치 주체

- (사립 보육소·인정어린이원) 사회복지법인, 일본적십자사,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학교법인
 - ※ 단, ‘시행계획’이 채택된 경우 지자체가 인정한 자(공립시설 제외)도 설치 가능
- (소규모 보육사업시설, 영유아 등 통원지원사업소) 지자체가 인정한 자(공립 포함)
- 도도부현·지자체

■ 대상시설

- 보육소, 유치원(인정어린이원으로 전환 예정 시), 인정어린이원, 소규모 보육소, 영유아 등 통원지원사업(아이 누구나 통원제도) 시행 시설 등

■ 보조 비율

- 1) 기본 보조율: 정부 1/2, 지자체 1/4, 설치주체 1/4.

2) 보조율 상향 (1/2 → 2/3)

3)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 보조율을 상향하여 적용함. 정부 2/3, 지자체 1/12, 설치주체 1/4.

- 상향 적용 조건

- 대기아동 대책 : 대기아동이 1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자체로서, '보육 제공체제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이 채택된 경우 정원을 20명 이상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 인정어린이원의 경우, 상향은 '보육소 부분'에 한함.
- 인구감소 대책: 인구 과소 지역 중 보육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지자체로서, '보육 제공체제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이 채택된 경우 시설의 통폐합 또는 다기능화에 따른 정비사업.
※ 인정어린이원의 경우, 상향은 '보육소 부분'에 한함.
- 영유아 통원지원사업('아이 누구나 통원제도') 관련 시설 정비: 본 제도를 시행하는 시정촌으로서, '보육 제공체제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채택한 경우

2025년 09월 09일

출처 :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14cacce-0305-4ce9-a120-355df90cf035/d2fe0d35/20250909_policies_hoiku_yosan_24.pdf

3. 보육활동 원스톱 프로젝트

■ 도쿄도는 도내 19개 지자체, 1,276개 보육시설에서 보육활동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의 정보 검색, 견학 예약, 입소 신청 및 관련 절차 정보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통합 시스템임.

- 민간 보육활동 사이트 '엔사가쉴♪(えんさがそっ♪)', 'hoicil', 그리고 도쿄도가 운영하는 '보육활동 원스톱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함.

■ 보호자가 보육시설 정보를 검색하고, 견학을 예약하며, 입소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육활동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발생하는 행정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 본 서비스에는 도쿄도의 19개 자치체가 참여하고 있음.

- 미나토구, 고토구, 시부야구, 스기나미구, 이타바시구, 아다치구, 에도가와구, 하치오지시,

오메시, 아키시마시, 조후시, 마치다시, 히노시, 고마에시, 히가시아마토시, 기요세시, 무사시 무라야마시, 다마시, 니시도쿄시가 이에 해당함.

- 2025년 9월 17일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 시설이 기존 1,070개원에서 1,276개원으로 확대됨.

■ 보육활동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한 주요 기능

- 보육시설 정보 검색
- 지도 기반 및 조건 설정을 통한 어린이집(보육소) 검색
- 지자체 및 시설이 제공하는 최신 시설 정보의 통합 수집
- 보호자 의견을 반영한 보육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및 추가 제공
- 시설 견학 예약
- 입소 신청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지자체가 제공하는 입소 절차 정보를 손쉽게 열람 가능, 지자체 입소 신청 페이지로 직접 연동 접속 가능
-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소 신청 절차 완료 가능

2025년 09월 17일

출처 : <https://www.digitalservice.metro.tokyo.lg.jp/business/2030vision/kodomodx/hokatsu>

4. 후쿠오카시 유치원형 임시보육사업 보조금

■ 제도 개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유치원 및 인정 어린이집에서 후쿠오카시에 거주하는 아동을 임시로 돌보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

■ 제도 대상: <후쿠오카시 유치원형 임시보육사업 시행 요강>에 규정된 실시일, 운영 시간, 직원 배치 등 실시 요건을 충족하여 임시보육사업을 실시한 경우.

■ 보조 대상 사업자

-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 설립자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보육 등의 종합적 제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정 어린이집 설립자

■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아래 ① 및 ②의 합산액을 예산의 범위로 설정하여 결정함. (자세한 내용은 <후쿠오카시 유치원형 임시보육사업 보조금 교부 요강 별첨 1 및 별첨 2> 참조)

1) 기본 산정 방식

- 별첨 1※의 보조기준액 + 별첨 2※에 규정된 추가금과 보조대상 경비(인건비·관리비·기타 경비)의 실제 지출액 합계에서 수입(보호자에게서 징수하는 연간 이용료)을 뺀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적용함.

※ 별첨 1: 평일 일반아동 기준= 1인당 400~880엔 수준, 이용자 수가 많을수록 단가 고정 (440/880엔 등); 주말·공휴일 기준= 1인당 800엔; 특별지원 아동 기준= 평일 4,000엔, 휴일 및 장기휴업일 8,000엔 (특수교육·장애인수첩 보유 등 해당 시)

※ 별첨 2: 초과 이용시간을 2시간 미만, 2시간~3시간, 3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각 150엔, 300엔, 450엔을 추가 징수; 단, 보조금액의 상한은 연간 10,223,000엔으로 산정함.

2) 추가 가산 항목

- 보육 시스템 확충 가산(2,892,400엔 또는 1,446,200엔)
- 취업지원형 시설 가산(1,383,200엔 또는 691,600엔)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별도로 해당 가산액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사항

- ※ 사업을 연도 중에 시작하거나 중단한 경우, 월할 계산하며 1,000엔 미만의 단위는 절사 처리함.
- ※ 위 (1), (2)의 보조금은 전체 이용자 수(시내 거주자 + 시외 거주자) 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함.

2025년 10월 27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fushimi/page/0000086411.html>

5. 육아 지원 활동 이키이키 센터

■ 개요

- 육아 지원 활동 이키이키 센터(교류의 광장)는 육아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 육아 상담에 대응하며,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과 육아 강좌와 같은 사업을 실시함.

■ 시설

(1) 벚나무 교류의 집(桜木ふれ愛の家) (사업운영: 사회복지법인 신유복지회(眞友福祉会))

지원내용	○ 육아 부모자녀(주로 영유아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교류·모임 공간 제공 ○ 육아 상담사의 상담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및 육아 관련 강좌 운영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직접 문의 바람.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공휴일·연말연시는 휴무
소재/연락처	伏見区石田大山町15-5 TEL572-2515 후시미구 이시다 오야마초 15-5 TEL 572-2515

(2) 꽃송이 교류의 광장 스마일(はなぶきつどいの広場スマイル) (사업운영: 사회복지법인 시신 복지회(志心福祉会))

지원내용	○ 육아 부모자녀(주로 영유아를 둔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교류·모임 공간 제공 ○ 육아 상담사의 상담 ○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및 육아 관련 강좌 운영 ○ 지역의 육아 관련 정보 제공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직접 문의 바람.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공휴일·연말연시는 휴무
소재/연락처	伏見区醍醐上ノ山町18-9 TEL575-3737 후시미구 다이고 우에노야마초 18-9 TEL 575-3737

2025년 11월 6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fushimi/page/0000086411.html>

❖ 아동·청소년지원

1. 교토시 『하구쿠미(育み) 플랜 2025-2029』 요약

■ 개요

- 교토시가 어린이와 청년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 5개년 육아·교육 종합계획
- ‘모든 아이와 청년이 사랑받고 성장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
- 정책 내용을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일러스트를 활용한 쉬운 해설판도 함께 발행

■ 계획의 기본 방향

1) 계획 성격

- 아동·청년 관련 법정 계획(지자체 어린이 계획 등)과 교육 분야 기본계획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2) 계획 기간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간

3) 기본 이념

-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동·청년이 교토의 문화를 체험하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회에 참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행복한 지역 공동체 실현
-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임신 전부터 청년기까지 끊임 없는 지원 체계 강화
- 육아 당사자 및 지원자 중심의 포괄적 육아·교육 환경 확충
-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랑받는 교토’ 실현

4) 지향하는 도시상

- ‘모든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중심 가치로 설정
- 행정 구역 간 협력 강화→ ‘어린이 중심 도시, 교토’, ‘육아·교육환경 일본 NO.1 도시’ 실현

■ 5대 목표

- 1) 아동·청년 친화적 지역 사회 만들기
 - 비 오는 날에도 놀 수 있는 놀이터, 공원 정비, 의료비 지원 등 포함
- 2) 아동·청년의 목소리 반영
 - 학교, 아동관, 청소년센터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이 쉬운 구조 마련
- 3) 머물고 싶은 공간과 시간 만들기
 - ‘더 있고 싶고’, ‘재밌는’ 공간 확충
- 4) 교토의 전통 체험 기회 확대
 - 다도, 꽃꽂이 등 지역 고유 문화·예술 체험 강화
- 5) 다양한 고민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 심신 건강, 관계 문제 등 아동·청소년의 복합적 고민에 대응
 - 분야 간 협력 통한 문제 해결 및 친근한 상담 창구 운영

■ 기타 특징

- 일본 『어린이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마련된 아동·청년 종합계획
- 책정 과정에서 아동·청년 당사자의 직접 의견 청취 활동 실시

2025년 04월 07일

출처 : <https://www.city.kyoto.lg.jp/hagukumi/page/0000337415.html>

2. 도쿄도 오타구와 아동 상담 공동운영 모델 사업 협정 체결

■ 도쿄도가 2025년 7월 14일, 오타구와 ‘지역 아동 상담 공동운영 모델 사업’ 실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이번 협정은 아동학대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세심한 아동 상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해 오타구 어린이·가정지원센터 내에 도쿄도 시나가와 아동상담소의 위성 오피스(연계 거점)를 설치했음. 해당 거점은 2026년도 개소 예정인 ‘도쿄도 오타 아동상담소(가칭)’와 연계하여 새로운

아동 상담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 설치 장소

- 오타구 어린이·가정지원센터 2층

■ 주요 업무

1) 정기 및 필요 시 수행 업무

- 아동·보호자 면접, 가정 방문 등 아동 상담 전반 실시했음
- 아동학대 관련 조사 수행했음
- 가정 복귀를 위한 조정·지도했음
- 입양 가정 홍보 및 상담 지원했음
- 지역 지원 강화 관련 업무 수행했음
-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지원했음

2) 아동상담소 개설을 위한 오타구와의 연계 업무

- 긴급 접수 회의 참가 및 지역 합동 긴급 접수 회의 시범 운영했음
- 신고 접수 시 대응 기관 배정의 시범 운영 및 검증했음
- 지역 합동 진척 관리 회의 시범 운영했음
- 지역 합동 인재 양성 추진했음
- 지역 관계 기관과의 연계 강화했음
- 기타 지역 합동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했음

■ 업무 개시일: 2025년 8월 1일(금)

■ 문의처: 복지국 어린이·육아지원부 사업조정 담당 ☎ 03-5320-4093

2025년 07월 14일

출처 : <https://www.metro.tokyo.lg.jp/information/press/2025/07/2025071402>

3. 어린이가정청×FC도쿄, 스타디움에서 ‘어린이의 고민’에 공감하는 캠페인 이벤트 개최!

■ 개요

- 일시 및 장소: 12월 6일(토), 도쿄도 조후시에 위치한 아지노모토 스타디움(Ajinomoto Stadium)
- 행사 배경: 2025 메이지야스다 J1리그 제38회차 ‘FC도쿄 vs 알비렉스 니가타’ 경기
- 주최 및 목적: 어린이가정청 ‘어린이의 고민을 수용하는 장(場)에 관한 프로젝트팀’(이하 ‘프로젝트팀’)이 관객을 대상으로 캠페인 이벤트를 실시함. 해당 이벤트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 FC도쿄의 협조하에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함.
- 주요 활동:
 - 입장 게이트에서 프로젝트팀이 제작한 홍보 만화 2만 부 배포
 - 경기장 앞 ‘아오아카 파크’ 특별 부스에서 관객 참여형 콘텐츠 운영
 -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프로젝트팀 제작 영상 상영

■ 일시

- 2025년 12월 6일(토) (2025 메이지야스다 J1리그 제38회차 경기 FC도쿄 vs 알비렉스 니가타)

■ 장소

-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아오아카 파크 (도비타큐역에서 경기장까지 이어지는 메인 거리)

■ 상세내용

- ① 부스 운영 (10:00 ~ 킥오프 14:00)
 - 관객 참여형 콘텐츠: “불안이나 고민, 고민스러운 감정을 어떤 어른에게 상담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가족/학교 선생님/기타 어른/상담을 하지 않는다/모르겠다]의 선택지 중 해당하는 박스에 어린이들이 공을 던져 의사를 표현하는 투표형 콘텐츠 운영.
 - FC도쿄 굿즈 제공 추첨 행사 병행.

② 프로젝트팀이 제작한 비전 영상 상영

- 스타디움에서 경기 전 2회, 하프타임 1회 (총 3회 상영)

③ 홍보 만화 2만부 배포

-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이야기 들어주기를 주제로 프로젝트팀이 기획·제작한 홍보 만화 제공.

■ ‘어린이의 고민을 수용하는 장(場)에 관한 프로젝트팀’에 대하여

- 목표: 어린이가정청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에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 중심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고민이나 불안을 안고 있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설립: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24년 11월, 젊은 직원들과 지자체 등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멤버로 구성된 ‘어린이의 고민을 수용하는 장에 관한 프로젝트팀’을 발족시킴.
- 활동: 어린이가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전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홍보·캠페인 활동과 상담 창구의 실태 파악 등을 진행하고 있음.

2025년 12월 01일

출처 : <https://www.cfa.go.jp/press/ac672b7d-599d-48a2-843e-425ba22a7c1c>

❖ 기타

1. 어린이 사고 방지 핸드북

■ 일본 어린이가정청에서 0세에서 6세(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 어린이에게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 쉬운 사고와 사고 예방법, 만일의 경우 필요한 대처법을 정리하여 발행한 책자임.

■ 어린이 주변 어른들이 안전한 제품의 선택, 올바른 이용으로 어린이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있음. 밝고 즐거운 육아와 일상생활을 위해 자녀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올바른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발행함.

■ 어린이 사고 방지 핸드북 목차

- 1) 질식·오음 사고: 엎드려 자다가 침구에 질식되는 사고, 침대와 벽 사이에 끼이는 사고, 가족 신체 일부에 압박되는 사고, 분유토에 의한 질식 사고, 술 오음, 원형 건전지와 자석 등의 섭취 사고 등
- 2) 물 관련 사고: 목욕 시 익사 사고, 세탁기, 세면대 빠짐 사고, 수영장, 바다 및 강가 사고 등
- 3) 화상 사고: 뜨거운 음료, 컵라면, 전기 포트, 전기 밥솥, 난방기구, 가습기, 조리기구, 다리미, 라이터, 불꽃놀이 등에 의한 사고
- 4) 추락·낙상 사고: 베란다, 창문, 어른용 침대와 소파, 의자, 테이블, 계단 추락 사고, 아이띠, 유모차, 쇼핑카트, 키보드 떨어짐 사고 등
- 5) 자동차·자전거 관련 사고: 자동차 문 창문 끼임, 차량 내 열사병, 카시트 미사용 및 오사용으로 인한 사고, 도로상 교통사고, 기계식 주차장 사고 등
- 6) 끼임, 끊김, 기타 사고: 면도기, 칼에 의한 찔과상, 문이나 창문 끼임 사고, 테이블이나 가구에 타박상, 소도구를 코나 귀에 넣는 사고 등

■ 만일에 사태에 사용하는 응급 처치 방법 안내

-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열사병 응급 처치, 하임리히법, 화상 응급 처치법 등에 관한 설명과 관련 그림,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 QR 코드 첨부

転落・転倒事故

ベランダなどからの転落 1歳以上

【注意ポイント】

1. ベランダをこどもの遊び場にしないようにし、こどもだけでベランダに出ないように注意しましょう。
2. ベランダから身を乗り出すと転落する危険があることを教えましょう。
3. ベランダに植木鉢、椅子などの踏み台になるものを置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エアコンの室外機は手すりから60cm以上離して設置するか、上からつるしましょう。
4. こどもだけを家に残して外出することは避けましょう。



窓や出窓からの転落 1歳以上

【注意ポイント】

1. 窓に補助錠やストッパーをつけて、大きく開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2. 窓の近くにベッドやソファなど踏み台になるものは置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3. 網戸に寄りかかると落ちて転落するおそれがあるので、窓を開ける幅を制限できない場合は、網戸に寄りかかれないよう柵を設置しましょう。



大人用ベッドやソファからの転落 0歳~1歳くらい

【注意ポイント】

1. こどもは寝ている間も寝返りをしたり、動きまわったりして、ベッドから転落し、頭部などにけがをすることがあります。敷らかすぎるクッションなどは窒息のおそれがあるため、転落防止のためであっても周りに置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2. 寝かしつけの時に、添い寝をすることは多いと思いますが、2歳になるまでは、できるだけ大人用ベッドは使わ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またソファで寝かせ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ベビーベッドやおむつ替えの時の台からの転落 0歳~1歳くらい

【注意ポイント】

1. ベビーベッドを使用する時は、常に柵を上げて使用しましょう。
2. ベビーベッドやソファ、施設にあるおむつ交換台などの高さのある場所でおむつ替えをする時は、事前に準備し、片付けやゴミ捨てはこどもを降ろした後にしましょう。備え付けのベルトを使用しても確実な転落防止にはなりません。



椅子やテーブルからの転落 0歳~1歳くらい

【注意ポイント】

1. 椅子やこども用ハイチェアの上で立ち上がった後、座ってテーブルを蹴ったりさせ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2. ハイチェアの安全ベルトは、必ず締めましょう。
3. 椅子で遊ばせ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階段から転落、段差での転倒 0歳~1歳くらい

【注意ポイント】

1. ハイハイをする頃から、階段からの転落が起きるので、転落防止の柵を付けて、閉め忘れのないようにし、こどもが開けられないようにロックを掛けましょう。
2. 玄関の段差での転倒や、そのほかにつまづきやすい段差がないか注意しましょう。



2025년 03월 11일

출처 : <https://www.cfa.go.jp/policies/child-safety-actions/handbook>

2. 후쿠오카시 어린이 주도 활동 지원하는 「어린이의 꿈 응원 사업」시행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기획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지역 연대를 강화

■ 사업 개요

- 후쿠오카시는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적인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꿈 응원 사업(子どもの夢応援事業)」을 시행해왔음.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동 주도 행사나 활동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자율성과 표현력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대상 단체

- 후쿠오카 지역 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학군 단위로 활동하는 아동 육성 단체
- 지역 아동회(어린이회), 청소년 연합회 등,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 신청 및 지원 방식

- 모집기간: 매년 4월 1일 ~ 5월 31일 (단,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까지) ※ 모집 기간 연장 가능
- 지원 금액: 보조 대상 경비의 2/3 이내, 최대 6만 엔까지 지원
- 활동 예시: 자연 체험 캠프, 어린이 축제, 미니 운동회, 교류 하이킹, 창작 그림책 만들기, 비밀 아지트 만들기, 야외 요리 콘테스트, 연극 공연 등의 다양한 창의활동
- 주요 활동 사례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기준)
 - “꿈을 날리자! 로켓 교실” (청소년 육성 연합회 주최) - 2022년 8월 27일 실시
 - “리틀 서머 페스티벌” (어린이 연합회 주최) - 2021년 10월 3일 실시
 - “방재 캠프” (청소년 육성 연합회 주최) - 2021년 10월 23~24일 실시
 - “시트러스 리본 운동” (어린이 육성 연합회 주최) - 2020년 9월 ~ 2021년 3월 실시
 - “와시로동 가을 수확제” (청소년 육성 연합회 주최) - 2020년 10월 실시

2025년 06월 06일

출처 : <https://kodomo.city.fukuoka.lg.jp/info/2388/>

3. 아동 성폭력 방지법 시행 준비 검토회 (제8회)

■ 개요

- 일시: 2025년(令和7년) 10월 9일(목) 오전 10시 ~ 정오 12시
- 장소: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 14층 대회의실

■ 회의 안건

- 가이드라인 사항의 주요 논점에 대하여
- 가이드라인 사항의 주요 논점① (제도 대상)에 대하여
- 가이드라인 사항의 주요 논점② (인정 등)에 대하여
- 아동 성폭력 방지법의 하위 법령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공개 의견 수렴) 안에 대하여

■ 아동 성폭력 방지법에 대하여

1) 법 제정 경위

- 2024년(令和6년) 6월 19일, 제213회 국회에서 <학교 설치자 등 및 민간 교육·보육 등 사업자에 의한 아동 대상 성폭력 등의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 (2024년 법률 제69호, 이하 '본 법')이 가결됨. 같은 해 6월 26일 공포.
-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 기한은 2026년(令和8년) 12월 26일임.

2) 본 법의 취지

- 아동 등에게 교육·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 설치자 등 및 인증을 받은 민간 교육·보육 등 사업자에게 교원 등 및 교육·보육 종사자의 아동 대상 성폭력 등의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함.

3) 개요 및 정의

- 학교 설치자 등 → 의무 대상이 되는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함.
- 교원 등 → 위 시설 등의 장(기관장) 또는 사업소의 관리자 및 각 시설 등에서 아동과 접촉하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민간 교육·보육 등 사업자 → 인증 대상이 되는 학원,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함.

- 교육·보육 등 종사자 → 위 시설 등의 장 또는 사업소의 관리자 및 각 시설 등에서 아동과 접촉하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 특정 성범죄 → 본 법에서 정한 성범죄를 의미함.
- 특정 성범죄 사실 해당자 → 특정 성범죄의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 중 일정 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4) 학교 설치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 등

- 학교 설치자 등은 일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함.
 - 교원 등의 연수 실시
 - 아동 대상 성폭력 등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
 - 아동 등이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또한 재범 방지 대책으로서, 교원 등에게 업무를 맡기기 전에 범죄사실확인서(특정 성범죄 사실 해당자인지 여부가 기재된 서류)에 따라 해당 인물이 특정 성범죄 사실 해당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범죄사실확인”을 실시해야 함. 그 결과, 아동 대상 성폭력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을 교원 등으로 본래의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거나 기타 성폭력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취해야 할 조치: 학교 설치자 등은 교원 등에 의한 아동 대상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함.

※ 범죄사실확인 기록 등의 관리에 관한 조치 등

- 학교 설치자 등(범죄사실확인을 수행하는 도도부현·시정촌 교육위원회 및 시설 운영자를 포함, 이하 “범죄사실확인 실시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범죄사실확인 기록 등의 적정한 관리
 -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록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5) 향후 검토의 진행 방향

- 대상 사업 및 직종 등의 범위

- 안전 확보 조치 및 정보 관리 조치의 세부 내용
- 인정(인증) 제도 및 범죄사실 확인 제도의 구조
- 그 후 하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필요한 시스템 구축, 집행 체제의 확보 등을 진행하고 일정한 홍보·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됨.

2025년 10월 07일

출처 : <https://www.cfa.go.jp/councils/koseibo-jumbi/a4e23221>

4.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

■ 개요

- 목적: 아동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정부(어린이가정청 포함)와 다양한 민간 단체·개인·기업이 연계하여 활동하는 새로운 플랫폼 구축
- 내용: 아동 중심 활동 주체 간 논의·정보 공유·연계 네트워크 강화 등
- 회원 모집 시작일: 2025년 11월 20일(목)

■ 플랫폼 킥오프 이벤트 개최(온라인)

- 일자: 2025년 11월 20일(목) 17:30-19:00
 - 프로그램: 개회인사, 내빈 인사; 어린이 정책 해설(어린이 가정청); 본 플랫폼에 대한 소개; 패널토론 <모두가 그리는 '아동 중심 사회'의 미래>; 올해 활동 예정과 회원 모집; 폐회 인사
- ※ 참가비 무료

■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이란?

-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은 아이·청년 및 양육 당사자들과 함께 정부(관)와 민간(민)이 대등하게 논의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한 과제·지식 공유, 정보 제공, 연계 네트워크의 강화·확대 등을 실시함.
- 대표적인 예로는,
 - ① 관민, 그리고 민과 민이 교류할 수 있는 이벤트 및 네트워크 형성 회의.

- ② 아동·청년과 양육 당사자, 여러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수회와 정보 교류회.
- ③ 어린이가정청의 정책 등에 관한 최신 정보와 플랫폼 회원이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벤트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
- ④ 기타, 회원들의 제안을 받아 다양한 활동 기획 등.

■ 조직·운영 체계

- ① ‘아동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NPO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개인이 회원으로 참여함.
- ② 연 1회 개최되는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의 운영 방침, 규약 개정, 간사 단체의 선출·해임 등을 의결함.
- ③ 민간단체 6개 단체와 어린이가정청의 총 7개 단체가 간사 단체로서 간사회를 구성함. 이들이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함.
- ④ 아동 중심 사회 실현 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설치함. 해당 사무국은 어린이 가정청의 업무 위탁 형태로 설치함.

■ 간사 단체 목록

- ① 일반사단법인 사회적 양육 지역지원 네트워크
- ② 공익사단법인 세이브 더 칠드런 재팬
- ③ 어린이가정청
- ④ G7 / G20 Youth Japan
- 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팬 유스 플랫폼
- ⑥ 인증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전국 어린이식당 지원센터, 무스비에
- ⑦ 인증 NPO법인 CLACK

2025년 11월 06일

출처 : <https://www.cfa.go.jp/policies/platform>

미국

임신·출산 지원		
1	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후 모성 건강 프로젝트 성과	38
2	뉴욕을 가족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시행	38
3	미국소아과학회, 전국 신생아 전문 병원 지정 프로그램 출범... 최초 두 병원 인증	41
양육지원		
1	아동가족청, 건강한 결혼과 책임감 있는 아버지됨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지원	43
2	뉴욕주 기초생활수급가구 신생아 1명당 1,800달러 일시금 지급	44
유아교육·보육		
1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에 관한 트럼프 행정명령	46
2	과도한 스크린 시간, 유아의 언어 발달 저하와 연관	47
3	오하이오주 보육 예산안(2025년 4월) - 총 2억 1,300만 달러 규모	49
4	2019년 미국 영유아 보육 및 교육(CCEE) 참여와 공공재정 지원 현황	51
5	가정 기반 어린이집(FCC)의 공공 Pre-K 통합 가속화 - NIEER, FCC 통합을 위한 정책 요약 시리즈 발표... 평가·재정 구조까지 통합 기반 확대 추진	53
6	헤드스타트 영양 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55
7	2025년 세제 조정안의 보육 지원 강화	56
8	캔자스 주지사, 영유아지원청(Office of Early Childhood) 이행팀 발표	57
9	만 4세 무상유아교육 참여, 부모 소득 장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58
10	뉴멕시코 미국 최초로 보편적 무상 보육 제공	59
11	뉴욕시 만 4세 영재 판별 논란	62
12	펜실베이니아주, 2025-26년도 예산안에 보육인력 지원을 위한 신규 투자 강조	63
13	네브라스카주의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의 보육 지원 강화 방식	65
기타		
1	보건복지부(HHS), 웨스트버지니아 학교 급식 유해 색소 금지 법안 지지... 2025년 8월부터 시행	67
2	미국 FDA, 어린이용 불소 복용제 시장 유통 중단 조치 추진	68
3	미국 대통령 위원회, 아동 만성질환 주요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69
4	아버지의 식습관, 자녀 식생활 형성에 장기적 영향 미쳐 - 청소년기 식습관이 향후 부모 역할과 아동의 영양에까지 영향 준다는 연구 결과 발표	71
5	땅콩 알레르기, 영아 식단 지침 변화 후 급감	72
6	모든 아이에게 집을(A Home for Every Child) 계획	74

❖ 임신·출산 지원

1. 협력 활성화를 통한 산후 모성 건강 프로젝트 성과

- 2024년 2월,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산후 건강 개선을 목표로 산후 모성 건강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1년 동안 운영함. 이 프로젝트에는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멕시코의 6개 주가 참여함.
- 각 주의 프로젝트팀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여줌. 정부, 건강보험 계획, 지역 의료 기관을 포함한 다부문 간 새로운 관계 구축,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화 아이디어 및 개선 방안 마련, 그리고 심혈관 건강과 행동 건강을 위해 신속한 측정과 개선 주기를 활용하여 개입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최적화함.
- 산후 기간은 모성과 영아의 의료 서비스가 산부인과와 소아과로 분리되어 있어는 경우가 많음. 이처럼 기존의 소통 창구가 부족하거나, 보다 나은 의료 지원을 위한 상호 운용 건강 기록 전자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후 건강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주의 팀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함.
- 산후 건강 관리 기간은 의료비 지급 방식이 분절되어 있어 단일 의료 제공 시스템이 이를 총괄하는 구조가 아님. 따라서 새로운 지급 및 총괄 모델이 산후 건강 결과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함.
- 결과적으로 질 향상 학습 네트워크의 구조와 방법은 조직과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산후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확인됨.

2025년 01월 13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5/01/13/fact-sheet-hhs-secretary-becerras-postpartum-maternal-health-collaborative-effectively-mobilizes-state-local-partnerships-improve-outcomes.html>

2. 뉴욕을 가족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시행

-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 뉴욕을 육아 친화적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신규 계획 발표: 2025년 주정 연설에서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뉴욕을 더욱 육아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함. ▲ 가족을 계획하는 이들을 위한 불임 치료 보험 확대 ▲ 임신 및 출산 시 부모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여성·영유아·아동(WIC)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을 확대를 통한 뉴욕 WIC 등록률 증가 ▲ 필수 육아 자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부모 지원 센터' 홈페이지 개설

■ 10만 명의 신생아에게 무료 기저귀 및 필수 육아 용품 제공; 뉴욕시는 빈곤층 어린이 100만 명에게 필수 용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Baby2Baby와 협력하여, Medicaid(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한 모든 임산부 및 저소득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병원을 통해 '산모 건강 및 신생아 용품 상자'를 제공할 계획임.

- 해당 상자에는 기저귀, 셀프케어 제품, 교육 자료 및 육아 관련 정보가 포함됨.
- 이 정책을 통해 약 10만 명의 신생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 가정에 수백만 개의 기저귀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모성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고위험 지역 산부인과 내 정신건강 서비스 공동 배치를 통해 기존 투자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 출산 지원금(BABY 혜택) 도입: 뉴욕시는 저소득층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지원금(BABY: Birth Allowance for the Baby's First Year) 도입을 추진함.

- 법안이 시행되면 공공 지원을 받는 뉴욕 거주자는 임신 중 매월 100달러, 출산 시 1,200달러를 지급받게 됨.
- 이를 통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수천 개의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불임 치료 접근성 확대: 미국에서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 중 10% 이상이 불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용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인 보험 가입자는 불임 보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Medicaid 가입자는 암 치료 등으로 인해 불임 보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뉴욕 주정부는 2002년부터 불임 치료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자격 요건이 엄격하여 많은 환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뉴욕 주지사는 불임 치료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더 많은 뉴욕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부모 지원 프로젝트' 신설: 많은 부모가 출산 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육아는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부모들이 보조금, 가정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주 차원의 지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

- 뉴욕 주지사는 '부모 지원 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함.
- 아동 발달 및 학교 준비 관련 정보 제공.
- 산부인과 및 소아과와의 협력을 통한 지원 정보 제공.
- 2025년 여름부터 주립 공원에서 야외 문해력(리터러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지원 확대:** 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더 많은 아동이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욕 주정부는 보육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1억 달러 규모의 자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보육서비스 사막(childcare desert)' 지역에 새로운 보육 시설 개조 및 신축 지원.
-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1,000만 달러 추가 지원하여 시설 보수 및 개선 지원.

■ **아동보육 '대체 풀(Alternate Pool)' 도입:** 보육 시스템 내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육 '대체 풀'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임.

- 보육 교사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 풀에 등록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보육을 대신 제공하는 시스템.
- 이를 통해 뉴욕 주 전역의 가정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70만 명 이상의 학생을 위한 무상 학교 급식 제공:** 뉴욕 주지사는 모든 학생(약 270만 명)이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는 정책을 발표함.

- 이 정책은 생활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됨.
-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뉴욕 어린이들의 식사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어머니와 아동을 위한 필수 영양 프로그램(WIC) 접근성 확대:** 지난 50년 동안 여성·영유아·아동(WIC)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은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2020년 이후 WIC 프로그램이 약 25% 확대되어 현재 44만 5천 명 이상의 등록자가 혜택을 받고 있음.
- 주지사는 WIC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여 등록 대상자를 47만 5천 명까지 늘리고, 더 많은 뉴욕 주민이 영양가 있는 식품 및 필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25년 01월 14일

출처 :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hochul-launches-new-programs-make-new-york-best-most-affordable-place-start-family>

3. 미국소아과학회, 전국 신생아 전문 병원 지정 프로그램 출범... 최초 두 병원 인증

■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이하 AAP)는 최고 수준의 신생아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전국 신생아 지정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함.

- 본 프로그램은 병원들이 신생아 치료에 있어 적절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 결과의 향상, 건강 형평성 제고, 정보의 투명성 확대, 모든 아동의 건강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 AAP는 신생아 치료 분야의 핵심 기관임.

- 「신생아 치료 수준(Levels of Neonatal Care)」 정책 성명서, 「출산 전후 치료 지침(Guidelines for Perinatal Care)」, 「신생아 치료 수준 기준(Standards for Levels of Neonatal Care: II, III, IV)」 등을 통해 국가 수준의 표준을 제시해온 바 있음.
- 2016년 이후 텍사스, 조지아, 미주리 등 일부 주에서 제3자 인증 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프로그램의 전국적 확대를 통해 '미국 내 모든 50개 주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 대해 최고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됨.

■ AAP 태아 및 신생아 위원회 위원장인 에릭 아이켄월드 박사는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아동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병원 인증 및 지정 과정을 모든 주에 제공함으로써 AAP는 각 지역사회가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 치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 현재 미국 내 모든 주는 의료시설을 규제하지만, 신생아 치료 수준에 대한 규정은 주마다 상이함.

- 2021년 기준, 전체 50개 주 중 절반만이 관련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20%의 주만이 제3자 기관 또는 보건당국에 의한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AAP의 전국 표준 채택과 이번 신생아 병원 인증 프로그램은 정책이 부재하거나 불균형한 상태에 있는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치료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함.

- AAP의 인증을 통해 병원은 신생아의 상태와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과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게 됨.

■ 이번 출범과 함께 아이오와주 소재 스테드 패밀리 어린이 병원과 미주리주 카디널 글레논 어린이 병원이 최초로 AAP의 공식 신생아 전문 병원으로 인증을 받았음.

■ 스테드 패밀리 어린이 병원의 신생아학과장 패트릭 맥나마라 박사는 “우리 병원은 조산아 치료와 신생아 혈액학 분야에서 오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고, 신생아 전문 병원으로 인증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이는 우리 팀이 위급한 신생아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인증을 통해 환자 안전, 품질 개선, 모든 신생아의 가능한 최고의 시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AP가 신생아 치료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함.

■ 카디널 글레논 어린이 병원의 병원장 호세인 마란디 박사 또한 “인증 과정은 우리 병원의 임상 및 관리팀이 조사자들과 협력하여 환자 치료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성을 추구하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환자 안전 실태, 문화 개선 가능성, 성과를 보인 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고 말함.

2025년 03월 12일

출처 : <https://www.aap.org/en/news-room/news-releases/aap/2025/the-american-academy-of-pediatrics-launches-national-neonatal-designation-program-recognizes-two-hospitals/>

❖ 양육지원

1. 아동가족청, 건강한 결혼과 책임감 있는 아버지됨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지원

■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은 미국 전역 38개 주의 109개 기관에 총 1억 달러(한화 약 1,350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건강한 결혼과 책임감 있는 아버지됨(Healthy Marriage and Responsible Fatherhood, HMRF)’ 보조금 사업을 발표함.

- 최근 전통적 가족 구조가 사회문화적 도전과 변화를 겪는 가운데, 이번 투자는 가족 안정성 회복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 촉진을 핵심 목표로 함.
- 트럼프 행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건강한 결혼과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 확산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정된 가족 구조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정책의 배경 및 근거

- 연구 결과, 두 부모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빈곤, 불안정한 영양공급, 위험행동 노출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버지 본인은 삶의 만족도, 목적의식, 심리적 안정감이 높으며, 부부가 갈등 예방과 해결 기술을 갖출 경우 결혼 생활의 안정성·만족도가 향상됨.
- 이에 따라 HMRF 사업은 근거 기반(evidence-based) 접근을 활용하여, 미국 내 아버지·부부·청소년이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관계와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관계자 발언 요약

- 앤드류 그래디슨(Andrew Gradison) 보건복지부 아동가족청 대행 차관보는 “건강한 미국은 아버지의 가정 내 역할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비롯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안정된 결혼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고 말함.

■ HMRF 보조금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1. FORGE Fatherhood (Family, Opportunity, Resilience, Grit, Engagement)

- 아버지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부자 관계(father-child relationship)를 촉진하

며, 건강한 부부 관계를 지원함.

- 또한 경제적 안정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버지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함.

■ HMRF 보조금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2. HEART (Helping Every Area of Relationships Thrive)

- 건강한 결혼과 관계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상호 존중과 관계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함.
- 부부가 장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기술, 갈등 해결 교육을 포함함.

■ HMRF 보조금의 세부 프로그램 구성 3. READY4Life (Relationships, Education, Advancement, Development for Youth for Life)

- 14~24세 청소년(예비 부모 및 이미 부모가 된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함.
- 관계 기술, 양육 지식, 금융 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가족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25년 09월 30일

출처 : <https://acf.gov/media/press/2025/over-100-million-healthy-marriage>

2. 뉴욕주 기초생활수급가구 신생아 1명당 1,800달러 일시금 지급

■ 정책 발표 및 시행

- 발표 기관: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OTDA,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 발표 일자: 2025년 10월 23일
- 혜택 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신생아 출생 시 아동 1명당 1,800달러(한화 약 260만원) 일시금 지급
- 법적 근거: 2025년 제56장 법률 및 관련 규정 개정
- 적용 시점: 2025년 11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

■ 정책 도입 배경

- 저소득 가구의 아동 빈곤 감소
- 영아 건강 증진
- 출산 및 초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청 요건 및 절차

- 신고 기한: 출생 후 90일 이내 신생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로 신고해야 함
- 제출 서류: 출생 증명 관련 서류, 시민권 증빙, 사회보장번호(SSN) 신청 관련 서류 등
- 다태아 출산 시: 쌍둥이·세쌍둥이 등 각 아동별로 일시금 개별 지급
- 수급 불가 사례:
 - 아동 출생 당시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아닌 경우
 - 출생 후 새롭게 기초생활수급가구로 등록된 경우

■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

- BABY 혜택은 기존 복지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됨
- 1,800달러 일시금은 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난방지원 프로그램(HEAP,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에서 소득 또는 자산으로 산정되지 않음
- 기타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가구의 수급 자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됨

■ 정책 의의 및 향후 계획

- 뉴욕주가 저소득 가구의 출산·영유아 양육지원을 강화하는 대표적 조치
- 임시·장애지원국은 기존 총족 가구가 누락 없이 BABY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2025년 11월

출처 : <https://otda.ny.gov/policy/directives/2025/ADM/25-ADM-07.pdf>

❖ 유아교육·보육

1. 교육의 자유와 기회 확대에 관한 트럼프 행정명령

■ 트럼프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부여된 권한으로 시민들의 교육, 복지, 미래 성공을 위해 다음의 행정 명령문을 발표함.

■ 1장 목적

-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원하고 받을 자격이 있음.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K-12 공립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올해 전국 교육 성취도 평가(NAEP)에 따르면, 8학년 학생들의 70%, 72%가 각각 낮은 국어, 수학 성취를 보임. 또한, 주소지 기준에 의한 학교 배정은 선호 학군의 주택 비용을 증가시켜서, 많은 미국 가정이 재정적 부담을 겪게 함.
- 이러한 이유로, 열두 개 이상의 주가 보편적 K-12 장학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가 아닌 가족들이 자녀를 위한 최상의 교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해당 주들은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가족에게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소지 기반으로 배정된 공립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조했음. 또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동시에 인근 공립학교의 성과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2장 정책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선택하고 지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임.

■ 3장 주 기반 K-12 교육 선택 지원에 대한 지침

-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은 주들이 K-12 교육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공식 기금(formula funds)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함.

■ 4장 임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자유 장려

- 교육부 장관은 가능한 수준에서 교육 자유를 우선순위로 포함해야 함.

-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임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 임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국의 가족과 교사의 교육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할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5장 근로 가족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족과 자녀를 위한 아동 보육 및 발달 보조금(CCDGB) 등 보조금을 받는 주들이, 해당 보조금을 교육 선택권 확대, 공립학교 외 사립학교 및 종교/법인학교처럼 다양한 교육 대안을 선택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함.

■ 6장 군인 가족 지원

-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은 군과 연계된 가족들이 국방부 기금을 활용하여 사립, 종교/법인, 공립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포함하여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2025-26학년도부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및 수행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7장 인디언 아동 지원

-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무부 장관은 인디언 학교에 다닐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가족들이 연방 기금을 활용하여 사립, 종교/법인, 공립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을 포함하여 원하는 교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2025-26학년도부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및 수행 계획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장관은 현재 인디언 학교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근처 지역의 가능한 교육 기관들을 조사해야 함.

2025년 01월 29일

출처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expanding-educational-freedom-and-opportunity-for-families/>

2. 과도한 스크린 시간, 유아의 언어 발달 저하와 연관

- 유아의 스크린 노출 시간과 언어 발달 간의 연관성 연구: 국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의 스크린 노출 시간이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는 TV와 스마트폰인 것으로 조사됨.

-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언어 발달 점수가 낮았던 반면, 책 노출과 성인과 함께 스크린을 공유하는 시간은 언어 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COVID-19 이후 증가한 유아의 스크린 사용과 발달 문제: COVID-19 팬데믹 이후, 유아들의 스크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초기 인지 및 운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전 연구에서도 스크린 사용 시간과 초기 언어 습득, 사회·정서적 발달, 자기 조절 기술 간의 부정적인 연관성이 보고됨.
- 이에 따라 소아과 협회는 2세 미만 영아의 스크린 노출을 반대하며, 유아의 경우에도 제한적이며 성인의 감독 하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연구 개요: PLOS ONE 학술지 게재; PLOS ONE 학술지에 발표된 ‘유아의 언어 및 운동 능력에 대한 스크린, 책 및 성인의 상호작용 사용: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양한 19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 연구진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12~48개월 유아 1,878명의 데이터를 분석함.

- 연구 참여자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 공유 미디어 참여, 책 노출, 언어 능력 및 발달 이정표를 부모 보고 설문을 통해 평가받았음.
- 사회경제적 환경은 기본적인 필요 사항,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직업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석됨.

■ 연구 결과: 스크린 노출과 언어 발달 간의 관계

- 연구에 따르면, TV 시청 및 TV가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환경이 가장 흔한 미디어 사용 형태였으며, 평균 일일 스크린 노출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함.
- 가장 많이 소비된 콘텐츠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으며, 그 뒤를 음악 및 교육 프로그램이 이음.
- 디지털 기기 노출 시간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취약계층에서는 책 사용률이 낮고 교육 자료가 부족한 경향을 보임.

■ 스크린 노출과 언어 발달: 부정적 연관성

- 연구에서는 스크린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됨.
- 특히 TV 시청 및 TV의 지속적인 노출이 어휘 수준 저하 및 언어 발달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책 노출과 성인과의 디지털 기기 공유는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디지털 기기 사용과 운동 발달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이번 연구 결과는 과도한 스크린 노출이 초기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함.
- 연구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성인과 함께 사용하거나, 적절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스크린 사용 시간이 더욱 증가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험적 연구 설계를 통해 변수들을 통제하고 개별적인 영향을 구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2025년 02월 07일

출처 : https://medicalxpress.com/news/2025-02-excessive-screen-linked-language-toddlers.html#google_vignette

3. 오하이오주 보육 예산안(2025년 4월) - 총 2억 1,300만 달러 규모

■ 예산안 개요

- 오하이오 하원이 보육 분야에 총 2억 1,300만 달러(약 2,918억 원)를 지출하는 예산안 승인
-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이 요청한 기존 프로그램 지원 + 신규 2개 프로그램 신설 포함
- 예산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심의 예정

■ 릭 카파냐(Rick Carfagna) / 오하이오 상공회의소 수석 부사장은 “보육은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문제다. 오하이오 주의 입법부가 이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함.

■ 주요 보육 정책 1) 보육 바우처 프로그램 - 2억 달러 (약 2,740억 원)

- 대상: 연방 빈곤선 145% 이하 가정 (4인 가구 연소득 약 46,617달러)
- 기존 수혜: 5,300가구 / 8,000명 아동
- 최근 확대: 빈곤선 146~200% 가구까지 확대 (4인 가구 약 64,300달러 기준)
- 문제점: 연방 예산 만료 예정 → 주 예산으로 대체 필요, 드와인 주지사 빈곤선 기준을 160%로 상향 제안했으나, 하원에서 거부
- 배정 방식: 연 1억 달러씩 2년간 분할 지원
- 재원: 워싱턴 D.C.에서 주 정부로 송금되는 저소득층 지원 기금 활용

■ 주요 보육 정책 2) 보육비 분담 프로그램(Tri-share Program) - 1,000만 달러 (약 137억 원)

- 구조: 고용주 40% + 근로자 40% + 주 정부 20% 분담
- 참여 기준: 연방 빈곤선 400% 이하 가정까지 대상 확대 →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28,600 달러(약 1억 7천만 원), 고위 임원 등 고소득자는 제외
- 주지사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거 공화당 법안과 유사
- 고용주 자율 참여 방식

■ 주요 보육 정책 3) 보육 인력 유치 및 멘토십 지원금 - 320만 달러 (약 43억 8,400만 원)

- 목적: 가정 내 보육 등 신규 진입자 지원
- 지원 대상: 은퇴자, 육아 중인 부모 등 보육사업 창업 희망자
- 필요성: 면허 취득 및 규정 준수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해소, '보육 사막(childcare deserts)' 해소에 기여
- 효과: 보육 공급 확대 → 보육 비용 안정화 기대

■ 정책 시사점

- 오하이오주는 보육을 노동시장 인프라로 인식하며 실질적 예산을 투입
-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간소득층까지 점진적으로 대상 확장
- 보육 공급과 수요 양측에 동시에 개입하는 구조적 접근이 특징
- 미국 내 지역 기반 보육 개혁의 모델 사례로 평가 가능

2025년 04월 14일

출처 : <https://www.limaohio.com/news/2025/04/14/ohio-house-approves-213-million-for-child-care-in-budget-bill/>

4. 2019년 미국 영유아 보육 및 교육(CCEE) 참여와 공공재정 지원 현황

■ 연구 개요

- 본 보고서는 2019년 미국 내 만 5세 미만 아동의 보육 및 유아교육(CCEE) 참여 중, 공공 재정이 지원된 비율을 분석한 자료임

■ 공공 재정 지원 여부 판단 기준

- ① 부모가 공공기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
- ② 센터 보육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0'이라고 응답한 경우

■ 보육 유형별 정의

1) 센터 기반 보육 (Center-based CCEE)

- 정의: 비거주 공간(non-residential setting)에서 주 5시간 이상 돌봄 제공
- 포함 유형: Head Start, 공립 Pre-K(만 4세 대상), 종교기관 유치원, 사립 유아교육기관 등
- 제외 사례: 등하교 전후 보육, 일시적/비정기 보육, 단일 활동 중심 보육

2) 유급 개인 보육 (Paid Individual CCEE)

- 정의: 가정 기반 환경에서 돌봄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돌봄을 받는 경우
- 예시: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 베이비시터(지인 또는 비지인), 유료 친족 보육 등
- 주요 재원: 보육 보조금(subsidy), 일부 Head Start 및 공립 Pre-K의 개인 제공 형태

■ 주요 통계 결과 요약

- 미국의 2012년과 2019년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공공 재정이 지원되는 센터 기반 보육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특히 36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모든 소득 계층에서 공공 재정이 지원되는 센터 보육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 저소득층의 경우 4.0%에서 7.8%로, 고소득층은 2.4%에서 4.7%로 상승하였음.
- 한편 36~59개월 아동의 경우, 전체 센터 기반 보육 이용률은 13.9%에서 17.3%로 증가하였으나, 이 증가세는 주로 고소득 가정에서 두드러졌음. 고소득층은 6.9%에서 13.6%로, 맞벌이 고소득층은 8.0%에서 14.7%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이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이는 공공 재정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층 간 보육 접근성의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함.
- 반면, 유급 개인 보육의 전체 이용률은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렀음. 특히 36개월 미만 아동의 이용률은 16.8%에서 13.7%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공공 지원 포함 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36~59개월 아동의 경우 전체 이용률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공공 재정이 지원된 유급 개인 보육의 비율은 0.9%에서 2.4%로 증가하여 일정 부분 공적 지원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종합적 시사점

- 미국 내 공공 재정은 점차 센터 기반 보육에 집중되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가정에서도 공공 보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 보육이 소득계층을 넘는 보편적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저소득층 아동의 센터 이용률은 정체되어 있는 점에서, 형식적인 보편화 뒤에 가려진 접근성의 불균형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이는 향후 공공 보육 정책 설계 시 형평성 강화와 실제 접근성 개선을 병행할 필요성을 보여줌.
- 유급 개인 보육은 이용률이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며, 공공 재정 지원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영역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보육 서비스 다변화 전략과의 연계가 요구됨. 공공 보육이 센터 중심으로만 확장될 경우, 유연성과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보육 모델을 아우르는 포괄적 보육정책 설계가 필요함.

2025년 04월 02일

출처 : <https://acf.gov/opre/report/nsece-snapshot-how-much-childrens-child-care-and-early-education-participation-2019-was>

5. 가정 기반 어린이집(FCC)의 공공 Pre-K 통합 가속화 – NIEER, FCC 통합을 위한 정책 요약 시리즈 발표… 평가·재정 구조까지 통합 기반 확대 추진

■ 개요

- 미국 유아교육연구소(NIEER,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는 가정 기반 어린이집(Family Child Care, 이하 FCC)이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만 4세 유아교육 프로그램(Pre-K)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정책 요약자료 3건을 새롭게 발표했음.
- 이 자료는 FCC 통합에 있어 운영 법령, 프로그램 평가, 재정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FCC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음.

■ 정책 사업 배경 및 추진 경과

- 2024년, NIEER는 Home Grown의 지원을 받아 *FCC 통합 기반 Pre-K 강화 사업(EPIC FCC)에 착수했음.
- 이 사업에서는 앨라배마,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의 Pre-K 운영자 및 FCC 교사들과 협력하여, FCC가 Pre-K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단위 시스템 점검 및 정책·재정 구조 설계를 진행했음.
- 이번에 발표된 3건의 요약자료는 NIEER의 ‘FCC & Pre-K 정책 가이드 시리즈’의 일부로, 현장 논의와 실증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 주요 정책 요약자료 내용 ① 법·제도 분석: 콜로라도 사례

- 콜로라도 주는 공공 Pre-K 전달 체계를 혼합형 모델로 정의하고 FCC를 공식적인 유아교육 시스템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FCC가 Pre-K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주요 정책 요약자료 내용 ② 프로그램 평가: 오리건주 사례

-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FCC 포함 Pre-K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개선 가능성을 확보함.
-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는 주민투표로 승인된 Pre-K 사업에서 FCC 교사를 평가계획에 포함시켰으며, FCC 환경에 적합한 코칭 및 전문성 개발 전략을 함께 설계했음.

■ 주요 정책 요약자료 내용 ③ 재정 구조: 메릴랜드 사례

- FCC 제공자는 주정부와 직접 계약하거나 가정보육 연합을 통해 Pre-K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메릴랜드주는 FCC의 소규모 운영 특성을 반영한 자금 통합(blended fund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 확보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향후 몇 개월 이내로 추가적인 정책 자료가 발표될 예정임.

■ 주요인사 발언

- NIEER 기술지원 부국장인 Weisenfeld 연구원은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은 아동은 유치원 입학 시 학교 준비도가 높고, 학업 성취 및 사회·정서 발달에서도 장기적 긍정 효과를 보이고, FCC 교사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 많은 아동에게 공공 유아교육의 혜택을 확산하고, 그동안 시스템에서 배제되었던 보육 인력을 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강조함.
-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공공 Pre-K 모델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마련 중이며, 이는 FCC를 포함한 혼합형 유아교육 시스템(Mixed Delivery Model)을 실현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 공공 Pre-K 접근성 격차

-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전체 4세 아동의 37%, 3세 아동의 8%가 주정부 지원 Pre-K에 등록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아동이 공공 Pre-K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질 높은 프로그램 부족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었음.

■ 정책적 과제 및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

- 법적 지위 명시: FCC가 공공 Pre-K 시스템 내 공식 구성원으로 명시되어야 참여 확대가 가능함.
- 맞춤형 평가 및 코칭 지원: FCC의 환경과 규모에 적합한 전문성 개발 모델과 모니터링 체계 필요함.

- 재정 구조의 유연성 강화: 자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단순화는 FCC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함.
- 혼합형 전달체계(Mixed Delivery Model)의 제도화: 다양한 유형의 유아교육 제공자를 포괄하는 구조가 공공성 확대의 핵심이 될 수 있음.

2025년 06월 03일

출처 : <https://nieer.org/research-library/new-policy-snapshots-provide-guidance-integrating-family-child-care-homes-public>

6. 헤드스타트 영양 서비스 강화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개요

- 미국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부모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ACF는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과 가족의 영양 서비스 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일회성 추가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영유아기부터의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 교육 투자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MAHA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중 하나임.

■ 주요 인사 발언

- 앤드류 그래디슨(Andrew Gradison) 차관대행은 “MAHA 정책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해로운 초가공 식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 부모 대상 영양 교육을 강화하고 신선 식품과 영양 밀도가 높은 식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ACF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밝힘.
- 로리 토드 스미스(Laurie Todd-Smith) 영유아발달 부차관보는 “영양은 헤드스타트가 제공하는 포괄적 서비스의 초석이고, 저희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해 온 건강 악순환을 끊고,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익히도록 돕고 있다.”라고 언급함.

■ 이번 일회성 자금 지원을 통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 영양 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 급식 서비스 개선: 주방 시설 현대화, 신선·지역산 식품 공급, 전용 모유 수유 공간 마련
- 자료·소모품·장비 지원: 상업용 주방 기기, 식품 준비 도구,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to-table) 프로그램용 정원 가꾸기 용품 제공
- 영양 교육 자료 개발: 영양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가족 대상 영양·건강 워크숍 개최
- 전문 인력 컨설팅: 등록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의 식단 개발 및 영양 상담 자문

2025년 07월 29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4/03/08/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utahs-medicaid-chip-postpartum-coverage-expansion.html>

7. 2025년 세제 조정안의 보육 지원 강화

■ 개요

- 2025년 7월 4일, ‘하나의 큰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H.R.1)’이 최종 서명됐음.
- 이번 세제 조정안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세 가지 주요 세금 정책 개정을 포함함.
- 이번 개정은 수십 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확대·강화하는데 의의가 있음.
- 미국 내 5세 이하 아동의 약 66%가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임.

■ 1.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 공제 확대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 기존 제도: 자녀 1명 기준 연 최대 \$3,000(약 390만 원), 2명 이상은 \$6,000(약 780만 원)까지 보육비 공제 가능. 소득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저소득층은 최대 35% 환급 가능.
- 개정 내용: 보육비 한도는 동일하나, 저소득층 최대 환급률을 50%로 상향.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 단계적 감소. 약 400만 가구에 혜택 확대(맞벌이 연 소득 \$206,000, 외벌이 \$103,000 이하).

■ 2.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 공제 개선 (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

- 기존 제도: 보육 관련 비용의 25%를 기준으로 최대 \$150,000(약 1억 9,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최대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600,000 이상 지출 필요.
- 개정 내용: 최대 세액 공제와 공제율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조정. 소규모 기업의 공제율 및 한도 확대. 다수 고용주의 공동 계약 절차 간소화.

■ 3. 부양가족 보육 지원 계획 확대 (Dependent Care Assistance Plans, DCAP)

- 기존 제도: DCAP 참여 근로자는 연간 최대 \$5,000(약 650만 원)을 세전 소득에서 공제 가능.
- 개정 내용: 세전 공제 한도를 연간 \$7,500(약 975만 원)으로 확대.

2025년 07월 10일

출처 : <https://www.ffyf.org/resources/2025/07/toplines-tax-package/>

8. 캔자스 주지사, 영유아지원청(Office of Early Childhood) 이행팀 발표

■ 2025년 8월 12일, 로라 켈리 주지사는 하원법안 2045호 이행을 감독할 범정부 전환팀과 전환 책임자를 임명했음.

- 이 법안은 캔자스 주 내 영유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영유아지원청(Office of Early Childhood)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4월에 켈리 주지사가 서명한 하원법안 2045호는 최근 15년간 본 주(州)의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입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현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잭 빈센트(Zach Vincent)가 앞으로 영유아지원청 전환 책임자를 겸임하게 됨.

- 그는 주지사실 소속으로, 영유아지원청으로의 프로그램 이관을 주도하고 전환팀을 관리하게 될 것임.
- 켈리 주지사는 “잭 빈센트는 지난 4년간 행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의 노력 덕분에 캔자스의 영유아 시스템을 혁신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이번 역할 수행을 통해 캔자스의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빈센트는 2021년 켈리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로 교육 관련 정책과 입법을 총괄해왔고, 주의회와 수년간 협력하여 하원법안 2045호 통과 및 영유아지원청 설립에 기여했음.

- 잭 빈센트는 “켈리 행정부와 캔자스 시민들을 위해 영유아지원청 전환 책임자로 봉사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영유아지원청은 고품질·저비용 영유아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정부 운영 효율을 높이고 가족·교사·사업체에 보다 간소화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함.

■ 영유아지원청 전환팀은 주정부 8개 기관 지도부로 구성되며, 내각급 고위 인사와 영유아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이 포함될 것임. 법률에 따라 이 전환팀은 여러 프로그램을 영유아지원청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지원함.

- 하원법안 2045호는 현재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약 20개의 주정부 프로그램을 영유아지원청으로 통합하도록 함.

- 영유아지원청은 2026년 중반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아동보육 인가, 보육료 지원, 가정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캔자스 아동위원회 및 신탁기금(Kansas Children’s Cabinet and Trust Fund)을 관할하게 됨. 또 주 차원의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접근성 확대를 책임짐.

■ 영유아지원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 상원의 승인을 받은 청장(director)이 운영할 것임.

- 주지사실은 2025년 가을에 영구 청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며, 2026년 1월까지 임명자를 발표할 예정임.

2025년 08월 12일

출처 : <https://www.governor.ks.gov/Home/Components/News/News/744/55>

9. 만 4세 무상유아교육 참여, 부모 소득 장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 2025년 8월 6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 4세 무상유아교육(Pre-Kindergarten, 이하 무상유아교육) 참여가 부모의 소득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서 수행된 “부모의 소득과 무상유아교육의 경제적 효과 연구(Parents’ Earnings and the Returns to Universal Pre-Kindergarten)”는 종일제를 포함한 저렴한 고 질 높은 유아교육 접근이 부모의 소득을 자녀 재학 기간뿐 아니라 최소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

■ 연구에 따르면 무상유아교육에 참여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주당 평균 11.3시간, 즉 하루 약 2.26시간 더 많은 교육 시간을 확보했음.

- 연구진은 이 추가 시간이 부모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소득 일자리 유지와 업종 전환 가능성 감소로 이어져 노동시장 참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했음.
-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도 뚜렷하여, 무상유아교육 프로그램 참여 1~2년간 부모 소득이 평균 21.7% 증가했으며, 이는 부모 1인당 연간 약 5,464달러(한화 약 740만 원)의 추가 소득에 해당했음.

■ 이 효과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점까지 지속되었음.

- 무상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모는 이후 6년 동안 연평균 42,394달러(한화 약 5,700만 원)의 소득을 기록한 반면, 이용하지 않은 부모는 35,920달러(한화 약 4,800만 원)에 그쳐, 연간 평균 6,474달러(한화 약 9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음.
- 이는 무상유아교육이 부모의 장기적인 직업 안정성과 소득 향상에 기여했음을 보여줌.

■ 또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된 보조금은 부모 소득 증가로 인한 세수 확대를 통해 상당 부분 충당될 수 있음이 밝혀졌음.

- 투자 대비 편익을 1달러당 약 10달러로 추산했으며, 이번 결과는 연장 보육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보육이 가정의 경제적 기반에 미치는 단기·장기적 긍정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2025년 08월 06일

출처 : <https://www.ffyf.org/2025/08/06/research-finds-preschool-enrollment-can-increase-parent-income/>

10. 뉴멕시코 미국 최초로 보편적 무상 보육 제공

■ 뉴멕시코 주지사 미셸 루한 그리섬(Michelle Lujan Grisham)과 영유아교육·보육부(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Department, ECECD)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미국 최초로 모든 가정에 무상 보육(universal child care)을 제공한다고 발표함.

- 이번 결정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뉴멕시코 주민이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보육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가정 부담금(co-payment) 면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함.

■ 정책의 의미와 배경

- 이번 발표는 2019년 주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부(ECECD)를 설립할 당시 주지사와 주 의회가 약속한 핵심 공약이 실현된 것임.
- 뉴멕시코주는 이미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의 400% 이하 소득 가구까지 무상 보육을 확대해 수만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왔음.
- 이번 조치로 모든 가정이 보육비 면제 대상에 포함되며, 아동 1인당 연평균 약 12,000달러(한화 약 1,656만 원)의 양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됨.

■ 미셸 루한 그리섬 주지사는 “보육은 가족의 안정, 노동력 참여, 그리고 뉴멕시코의 미래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보육에 대한 투자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 경제를 지원하며, 모든 아동이 성장하고 번영할 기회를 보장하는 길이다”고 말함.

■ 닐 하폰(Neal Halfon) UCLA 소아과·공중보건·공공정책 교수는 “뉴멕시코는 건강, 학습, 복지 전반에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이 접근은 데이터 기반이며 지역사회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다. 뉴멕시코 모델은 미국 전역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함.

■ 미셸 칸(Michelle Kang),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 회장 겸 CEO는 “뉴멕시코는 영유아, 교사, 가족을 위한 공공투자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 비용의 고품질 보육·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보편적 무상보육 시행 결정은 아동·가정·사업체·교육자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함.

■ 주요 정책 추진 내용

- 뉴멕시코주는 보편적 무상보육 제도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추진함.

■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 시설 건설·확장·개보수를 위해 1,270만 달러(약 175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기금 설립.
- 2027 회계연도 예산에 추가로 2,000만 달러(약 276억 원) 요청 예정.

■ 취약계층 아동 지원 강화

- 영유아, 저소득 가정, 특수아동 중심으로 성장 지원 사업 집중 추진.

■ 보육 선택권 확대

- 기업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일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보육 선택권 제공.

■ 가정 기반 보육 활성화

- 인허가를 거친 가정 기반 어린이집(Home-based Child Care) 확대를 위한 주 전체 캠페인 전개.

■ 보육비 단가 현실화

- 실제 돌봄 비용을 반영하여 보육비 상환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지속가능성 확보.

■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 초임 교직원에게 최저 시급 18달러(약 2만5천 원) 이상 지급.
- 주 5일, 하루 10시간 운영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인력 수요 및 향후 전망

- 뉴멕시코주는 보편적 무상보육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00명의 영유아 교직원 추가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이번 제도 시행은 미국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육 접근권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타 주(州) 확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음.

2025년 09월 08일

출처 : <https://www.governor.state.nm.us/2025/09/08/new-mexico-is-first-state-in-nation-to-offer-universal-child-care/>

11. 뉴욕시 만 4세 영재 판별 논란

■ 논란의 배경

- 뉴욕시는 유치원 입학 전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재 판별을 실시하는 미국 내 유일한 대도시 중 하나임.
- 과거에는 아동에게 표준화된 영재 판별 시험(gifted assessment test)을 치르게 했으나, 시험의 공정성과 발달적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현재는 교사 추천 및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변경됨.

■ 현재 제도의 구조와 한계

- 교사가 '재능이 있다'고 판단한 유치원생을 추천하면, 추천된 아동 중 일부가 추천으로 영재 프로그램에 배정됨.
-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고 평가함.
- 또한, 영재 프로그램이 일반반과 교육과정상 명확한 차별화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 일부 학군은 심화 커리큘럼을 적용하지만, 뉴욕시는 대부분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정책·정치적 쟁점

- 2026년 1월 취임 예정인 뉴욕시장 선거 후보들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조흐란 맘다니(Joughran Mamdani) 후보는 유치원 영재반 운영을 “너무 이르다”고 비판하며, 현행 제도를 3학년부터 시작하는 별도 영재 트랙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제시함.
-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후보는 반대로 영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춰 조기 선발을 강화하자는 입장임.

■ 전문가 관점

- 대다수 미국 학군은 2학년 이후에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치원 단계의 분리는 극히 드뭄.
- 대부분의 지역은 먼저 공통의 기초교육을 제공한 뒤, 이후 성취도·관심도에 따라 영재를 선발함.

- 일부 주(예: 텍사스, 캘리포니아)는 학년별 재진입 기회를 열어 지속적 평가와 유연한 선발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 현황 및 과제

- 현재 뉴욕시 전체 초등학생 중 약 5%만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비율은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음.
- 비판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리한 가정의 자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함.
- 교육평등론자들은 다음 시장이 선발 중심의 영재 정책에서 ‘도전 기회 중심의 보편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맥락 요약

- 뉴욕의 사례는 “영재 판별 연령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교육정책의 핵심 난제를 상징함.
- 조기 판별은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인지 발달의 개인차가 큰 4세 시기에는 판별 오류와 불평등 심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2025년 10월 28일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5/10/28/nyregion/schools-grapple-with-a-hard-problem-who-is-gifted.html>

12. 펜실베이니아주, 2025-26년도 예산안에 보육인력 지원을 위한 신규 투자 강조

■ 2025-26년도 예산안과 보육인력 지원

- 펜실베이니아주 샤피로(Shapiro) 주지사가 서명한 예산안은 주 전역의 보육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 2,500만 달러(한화 약 367억 5천만 원) 규모의 ‘보육인력 채용 및 유지 프로그램(Child Care Staff Recruitment and Retention Program)’을 신설함.
- 주요 내용: 자격증을 보유한 보육인력 1인당 450달러(한화 약 66만 원)의 보너스를 2026년 초부터 지급하며, 약 5만 5천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정책 목표 및 배경

- 펜실베이니아주 복지부 장관은 'Little Learners CDC Academy'를 방문하여 이번 신규 투자 계획을 조명함.
- 목표: 보육 인력의 채용과 유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접근성 확대,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지속을 통한 가정 경제 안정 기여.
- 현황: 펜실베이니아 영유아교육 시스템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그 중 약 9만 4천 명은 주·연방 공동 재원 프로그램인 'Child Care Works(CCW)'를 통해 지원받음.

■ 보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성

- 인력난: 현재 약 3,000개의 보육 일자리가 미충원 상태임. 이 공백이 메워질 경우 25,000명의 아동이 추가로 이용 가능하며, 부모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문제점: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한 인력난은 교실 운영 중단, 등록 정원 제한, 신규 등록 중단으로 이어짐. 적정 임금 경쟁력 없이는 전문 인력 유치와 유지가 어려워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함.

■ 예산안의 추가 투자 내역

- Pre-K Counts 프로그램: 750만 달러(한화 약 110억 3천만 원) 추가 투자(기관 임금 인상 지원 및 인력 안정화).
- 영아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 1,320만 달러(한화 약 194억 원) 증액 (이 중 1,000만 달러는 서비스 제공 단가 인상에 활용).

■ 세제 혜택 및 기타 지원 확대

- 기본 환급단가 인상: 2023년 이후 CCW 참여 기관에 대한 환급단가를 사립 보육비 기준 75분위까지 인상(연방 권고 반영).
- 아동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 주 매칭 비율을 기존 30%에서 100%로 확대. 가구당 최대 공제 혜택이 630달러(약 92만 원) → 2,100달러(약 308만 원)로 대폭 인상됨.
- 고용주 보육비 분담 세액공제: 고용주가 보육비 부담을 분담할 경우, 1인당 최대 500달러(약 73만 원) 한도 내에서 적격 분담금의 30%까지 세액공제 청구 가능.

- 근로자 세액공제 신설: 2026년 세금 신고 시기부터 약 94만 가구에 총 1억 9,300만 달러(약 2,837억 원) 감면 혜택 제공.

2025년 12월 04일

출처 : <https://www.pa.gov/agencies/dhs/newsroom/shapiro-administration-highlights-budget-investments-to-support->

13. 네브라스카주의 사례로 살펴보는 기업의 보육 지원 강화 방식

■ 배경: 경제활동과 보육의 상관관계

-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는 가정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임. 미국 내 영유아의 약 3분의 2가 맞벌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은 필수적임.

■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공제(45F) 제도

- 개요: 기업이 보육 기관과 협력하거나 직접 보육 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상쇄해 주는 제도.
- 효과: 2025년 세제 법안 내에서 확대된 45F는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추고 민간 부문의 보육 투자를 촉진함.

■ 사례: 네브라스카주 기업 ‘Hudl’

- 활용: 링컨(Lincoln)에 본사를 둔 Hudl은 세액공제를 활용해 보육시설 설립 파트너십을 구축함. 지역사회에 개방하되 직원 자녀에게 우선 등록권 및 보육비 감면 혜택을 제공.
- 재무 효과: 45F 제도는 Hudl의 연간 법인세 부담을 최대 150,000달러(한화 약 2억 2천만 원)까지 낮추었고, 이를 통해 직원들의 보육비 부담을 현저히 경감함.
- 조직 효과: 37명의 근로 가정이 자녀를 등록함. 직무 만족도, 조직 애착 증가, 사무실 출근 문화 회복, 근속연수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 확인.

■ 기업의 45F 제도 활용 방식

- 지역 보육 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기업 본부 부지 내 보육기관 설립 및 운영

- 제3자 중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 기업 규모별 공제 혜택 (재무 관점)

- 대기업: 45F 공제를 통해 최대 500,000달러(한화 약 7억 원)까지, 또는 지출의 40%한도 내에서 세제 완화 청구 가능.
- 소규모 기업: 최대 600,000달러(한화 약 9억 원)까지, 또는 지출의 40% 한도 내에서 세제 완화 청구 가능.

2025년 12월 02일

출처 : <https://www.fyf.org/2025/12/02/how-45f-helps-employers-strengthen-child-care-options-a-look-at-hudl-and-primrose-in-nebraska/>

❖ 기타

1. 보건복지부(HHS), 웨스트버지니아 학교 급식 유해 색소 금지 법안 지지... 2025년 8월부터 시행

■ 미국 보건복지부(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마틴스버그 소재 세인트 조셉 학교에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패트릭 모리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에서 유해 식용 색소 7종을 금지하는 법안 서명을 기념함.

- 해당 법안은 2025년 8월부터 주 내 학교 영양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유해 식품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향후 일반 유통 식품에도 이를 적용할 예정임.

■ 모리시 주지사는 또한 ‘저소득층 영양보충 프로그램(SNAP)’을 통해 제공되는 세금 지원금이 탄산음료 구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연방 농무부(USDA)에 면제를 요청할 계획임을 함께 밝힘.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식품 공급을 정확하고 SNAP에서 탄산음료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선도적이다. 저는 24개 주가 ‘미국건강증진법(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을 추진하여 식품 시스템 정확, 학교 급식 개선, SNAP 면제 제출, 환자 선택권 확대에 힘쓴 것을 높이 평가한다. 저는 모든 주지사가 웨스트버지니아의 선례를 따라 USDA에 면제를 제출하여 SNAP에서 탄산음료 구매를 제외하기를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탄산음료 보조금을 없애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이번 웨스트버지니아 주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7종의 합성 식용 색소 및 2종의 보존제 사용을 금지함.

- 합성 색소: 적색 염료 3호, 적색 염료 40호, 황색 염료 5호, 황색 염료 6호, 청색 염료 1호, 청색 염료 2호, 녹색 염료 3호
- 보존제: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프로필파라벤
- 이와 함께, 2025년 8월부터 시행되는 조항에 따라 학교 급식 및 영양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식품에서도 동일한 물질의 사용이 금지됨.
-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반영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됨.

■ 패트릭 모리시 주지사는 “웨스트버지니아는 MAHA 운동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우리는 음식에서 정크푸드를 제거하고, 신체운동을 장려하며, SNAP을 통한 영양보급을 강조합니다. 차세대 미국인인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신 보건복지부 및 농무부 장관께 감사드립니다.”고 발언함.

2025년 03월 28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west-virginia-morrissey-ban-food-dyes-schools-snap.html>

2. 미국 FDA, 어린이용 불소 복용제 시장 유통 중단 조치 추진

■ 주요 내용

-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2025년 5월 13일, 어린이에게 처방되는 불소 복용 제품의 시장 유통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함
- 해당 조치는 치약이나 가글처럼 구강 내에서 사용한 뒤 뱉어내는 제품이 아닌, 삼켜서 체내에 흡수되는 형태의 불소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 문제의 불소 복용 제품은 FDA의 공식 승인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배경 및 연구 동향

- 최근 연구에서, 체내에 흡수된 불소가 장내 미생물 균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이 밝혀짐
- 이러한 변화는 특히 장내 미생물군이 형성되는 유년기에 더욱 우려를 야기함
- 일부 연구에서는 불소와 갑상선 질환, 체중 증가, IQ 저하의 연관성이 제기됨

■ FDA 및 보건복지부 입장

- 마티 마카리(Marty Makary) FDA 국장은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소가 치아의 박테리아뿐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 장내 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음을 시사함”이라고 밝힘
- 의약품 평가연구센터에 해당 불소 처방제의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지시함
- 부모 및 의료계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함
- FDA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 검토와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 퇴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 미국 보건복지부는 장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아동 구강 관리 모범 사례를 제시할 예정임

■ 정책의 방향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공약의 실천”이라고 밝힘
- 불소 복용제 중단 조치는 영유아 건강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 정책임
- 현재 미국 내 여러 기관에서는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있음
- 유럽과 세계 다수 국가에서도 수돗물 불소 첨가를 시행하지 않음
- 이번 FDA의 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영유아 건강 환경 조성 캠페인의 일환임

2025년 05월 13일

출처 : <https://www.hhs.gov/press-room/fda-to-remove-ingestible-fluoride-drug-products-for-children.html>

3. 미국 대통령 위원회, 아동 만성질환 주요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 보고서 개요

-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 위원회(MAHA)”는 2025년 5월 22일 아동 만성질환 위기의 핵심 요인을 규명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98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평가(Make Our Children Healthy Again Assessment)”를 지시함에 따라 작성됨
- 보고서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부적절한 식단, 환경 독소 축적, 신체 활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과잉의료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이번 평가는 MAHA 위원회와 협력 기관들이 실질적 정책 개입 지점을 도출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함

■ 주요 인사 발언

-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 만성질환 위기의 단순한 증상 관리에 그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함. 모든 정책은 과학적 기준을 준수하며, 아동의 건강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업 분야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이 건강한 식품 공급체계 구축에 기여했음을 설명함. 케네디 장관 및 MAHA 위원회와 협력하여 국가 건강 증진에 계속 힘쓸 것임을 밝힘.”
-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국장: “아동 만성질환 위기는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함. 환경보호청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화학물질 안전 규제의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언급함.”

■ 주요 통계 및 현황

- 미국 6세 이상 아동 5명 중 1명 이상이 비만임(1970년대보다 270% 이상 증가)
- 십대 청소년의 당뇨 전단계 유병률은 4명 중 1명 이상으로, 2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함
- 소아암 발생률이 1975년 이후 약 40% 증가, 특히 0~19세 아동에게서 증가 추세임
-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8세 아동 31명 중 1명 수준임
- 십대 우울증 유병률이 2009~2019년 약 두 배로 증가, 2022년 기준 4명 중 1명 이상의 십대 여성이 1년 내 주요 우울 에피소드를 경험함
- 2023년에는 약 300만 명의 고등학생이 자살을 고민한 것으로 조사됨
- 1997~2018년 사이 아동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88% 증가함

■ 차기 조치

- MAHA 위원회는 이번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82일 이내에 “우리 아이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Make Our Children Healthy Again Strategy)”을 마련할 예정임

2025년 05월 22일

출처 : <https://www.hhs.gov/press-room/maha-commission-childhood-chronic-disease-root-causes.html>

4. 아버지의 식습관, 자녀 식생활 형성에 장기적 영향 미쳐 - 청소년기 식습관이 향후 부모 역할과 아동의 영양에까지 영향 준다는 연구 결과 발표

■ 개요

- 2025년 미국영양학회(American Society for Nutrition)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식습관이 자녀의 식생활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 영향은 자녀 출생 전 청소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본 연구는 특히 청소년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한 남성이 이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식생활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음.

■ 연구 방법 및 설계

- 해당 연구는 1990~2000년대에 식습관 조사를 받은 669명의 남성을 추적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 2021년~2022년에 1세~6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어떤 식생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음
- 연구 대상은 간호사 가정의 자녀들로, 장기간에 걸쳐 동일 집단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Healthy Eating Index(건강한 식사 지수)를 활용하여 식단의 질을 평가했으며, 해당 지수는 과일·채소·통곡물·유제품·저지방 단백질의 섭취 비율과 정제 곡물·포화지방·첨가당·나트륨의 제한 여부에 따라 점수를 산정했음.

■ 주요 연구 결과

- 연구에 참여한 남성 중 44%는 청소년기에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보였고, 40%는 식습관이 악화, 16%는 청소년기 이후 식습관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청소년기 식습관이 개선된 집단은 자녀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직접 보여줄 가능성이 90% 더 높았으며, 자녀의 식단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가능성도 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아버지의 자녀는 과일과 채소를 하루 권장량만큼 섭취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음.

■ 연구진 발언 및 시사점

- 연구를 이끈 보스턴 컬리지의 마리안스 드 올리베이라(Marianne De Oliveira) 박사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한 남성은 이후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며, 건강하지 않은 음식 섭취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단순한 개인 건강 차원을 넘어, 세대를 잇는 영양습관 형성과 아동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하였음.

■ 정책적 및 사회적 시사점

- 식습관 형성 시기를 청소년기까지 확장하여, 남성 청소년의 영양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식생활 관리 역량 제고는 아동 비만 예방과 가족 건강 증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 청소년기 식생활에 대한 개입은 자녀 세대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 투자’로 해석될 수 있음.
- 향후 영양정책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모계 중심 접근을 넘어 부계의 영향력과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5년 06월 02일

출처 : <https://www.usnews.com/news/health-news/articles/2025-06-02/dads-help-shape-eating-habits-of-their-children>

5. 땅콩 알레르기, 영아 식단 지침 변화 후 급감

■ 연구 개요

- 미국 소아과학회 공식 학술지 Pediatrics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2017년부터 시행된 조기 식품 노출 지침(early introduction guideline)이 아동의 식품 알레르기 발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연구진은 전국 50개 이상의 소아과 의원에서 약 12만 5천 명의 3세 미만 아동을 추적 관찰하고, 진단 기록과 에피펜(EpiPen) 처방 데이터를 통해 알레르기 유병률 변화를 측정함.

■ 지침 변화 배경

- 2000년대 초까지는 영아의 식단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땅콩, 달걀 등)을 피하는 것이 권장되었으나, 2015년 영국에서 실시된 대규모 임상시험(LEAP 연구)이 이 관행을 바꿨음.

- 해당 연구는 생후 4~6개월 무렵 땅콩 제품을 일찍 섭취한 영아에게서 땅콩 알레르기 발생 위험이 8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제시함.
- 이를 근거로 2017년 미국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는 조기 노출(early introduction)을 공식 권장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영아식 지도 원칙이 바뀌게 됨.

■ 연구 결과

- 새로운 지침 시행 전(2012~2015년)과 시행 후(2017~2020년)를 비교한 결과, 전체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1.46%에서 0.93%로 감소했으며, 특히 땅콩 알레르기의 발생률은 약 43% 급감한 것으로 확인됨.
- 이로써 달걀이 땅콩을 제치고 영유아의 가장 흔한 알레르기 원인 식품으로 나타남.
-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전국 지침 개정의 효과임을 강조하며, 지침 도입으로 약 57,000명 이상의 아동이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했을 것으로 추정함.

■ 전문가 의견

-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힐(Dr. David Hill)은 “영아기의 면역체계는 학습 가능한 상태에 있다”며 “이 시기에 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을 노출하면, 면역이 그것을 ‘무해한 물질’로 인식하도록 훈련된다”고 설명함.
- 제나 라이언(Dr. Jeanna Ryan) 박사는 “제왕절개 분만, 조기 항생제 사용, 과도한 위생적 생활환경이 알레르기 증가의 배경 요인일 수 있다”고 지적함.
- 루치 라초-산체스(Dr. Ruchi Latchoo-Sanchez) 박사는 “생후 4~6개월 시기에 완두콩 크기의 땅콩버터 한 점이나 스크램블 에그 한입을 주 2~3회 먹이는 방식으로 면역체계를 안전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과정은 반드시 의료진의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임.

■ 최신 국가 지침(2021, NIAID)

- 생후 4~6개월 영아부터 주요 알레르기 유발 식품(땅콩, 달걀 등)을 소량 섭취하도록 권장함.
- 중증 아토피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 영아의 경우, 전문의 상담 후 단계적 도입을 권함.

- 이 지침은 면역체계가 알레르기 항원을 ‘위협이 아닌 단백질’로 인식하도록 학습시키는 예방 접근을 기본 원리로 함.

■ 결론

- 땅콩 알레르기 유병률의 뚜렷한 감소는 조기 노출 지침이 실질적인 공중보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문가들은 향후 달걀, 우유, 밀 등 다른 식품에도 유사한 조기 노출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영유아 알레르기 전반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25년 10월 20일

출처 : <https://www.nytimes.com/2025/10/20/well/peanut-allergy-drop.html>

6. 모든 아이에게 집을(A Home for Every Child) 계획

■ 「모든 아이에게 집을(A Home for Every Child)」 계획 발표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
- 발표 일자: 2025년 11월 24일
- 정책명: “모든 아이에게 집을(A Home for Every Child)”
- 정책 배경: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미국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 양육 (Fostering the Future for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및 멜라니아 여사의 위탁아동 지원 강화 의제

■ 정책 도입 배경 및 문제 인식

- 미국 위탁보호 체계의 위탁가정 부족 심각
- 위탁보호 필요 아동 100명당 허가된 위탁가정 57가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일부 아동이 사무실 건물·호텔 등 비가정적인 공간에서 생활
- 형제자매가 공간 부족 때문에 분리 배치되는 사례 발생

■ 정책 목표

- 미국 모든 주에서 '위탁가정 대 아동 비율'을 1:1 이상으로 달성

■ 주요 추진 전략 (1) 위탁가정 확충

- 적극적인 위탁가정 모집
- 친족 위탁(kinship foster care) 우선 배치
- 기존 위탁가정 유지 및 지원 체계 강화
-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행정 장벽 제거
- 신앙 기반 기관 등과의 파트너십 확대

■ 주요 추진 전략 (2) 위탁 진입 감소

- 위탁 보호가 필요해지기 이전 단계의 예방 서비스 강화
- 아동을 영구적 가정(permanent family)과 더 빠르게 연결하는 서비스 확대

■ 재정 및 지원 체계

- 연방 자금 114억 달러 규모(연간 위탁보호·아동복지 예산)를 기반으로 추진
- 각 주(州) 아동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개입 방안 설계, 자율성·유연성 제공, 및 기술적 지원 확대

■ 기대 효과

- 위탁가정 공급 확대
- 비가정적인 임시 생활 문제 완화
- 형제자매 분리 배치 감소
- 예방 중심 아동복지 강화로 위탁보호 필요 아동 수 감소
-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 연결 촉진

2025년 11월 24일

출처 : <https://acf.gov/media/press/2025/acf-unveils-new-initiative-strengthen-american-families-home-every-child>

독일

임신·출산 지원		
1	독일 모성 보호법 및 모성 급여 제도 안내	78
일·가정 양립		
1	아빠의 재택근무가 자녀돌봄에 끼치는 영향	81
2	“육아 시간의 변화: 아버지는 늘고 있지만, 엄마는 여전히 두 배”	82
3	조건 충족시, 엄마들은 더 일하고 싶어함	83
유아교육·보육		
1	출산율 하락이 어린이집의 변화로 이어질까?	87
2	외국 자격 보유 인력, 독일 보육시설 인력난에 제한적 완화 효과	88
3	독일 연방정부, 교육 및 돌봄에 65억 유로 특별 투자 결정? 2029년까지 장기적 재정 계획을 통해 교육 인프라 및 보육 체계 경쟁력 강화	90
4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91
5	영유아 보육 서비스 수요, 다시 증가	93
6	연방정부는 유아교육에 4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함	94
7	높은 교육수준, 높은 스트레스: 인력 부족과 결근이 독일 교사들에게 여러 부담을 줌	96
8	초등학교 종일반 확대에 관한 제3차 보고서	98
아동·청소년지원		
1	어린이 4명 중 1명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여 있음	101
2	4분의 1의 아동 및 청소년이 빈곤이나 사회적배제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	102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 시행	103
4	정신질환·중독 부모를 둔 아동·청소년 지원 - ‘헬프 온 더 넷’ 캠페인 전개	105
5	통합기관을 통한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와 지원	107
6	연구를 통한 독일의 아동 보호 강화	108
기타		
1	EU 비교: 독일에서는 이혼 후 공동 돌봄이 여전히 일반적이지 않음	112
2	“아동과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수록,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114
3	독일 청소년연구소(DJI) 아동보호 관련 최신 연구 요약 (2025)	115
4	2024년 독일 낙태 통계 분석 요약	117
5	아동 4명 중 1명, 세 자녀 이상 다동이 가정에서 성장 - 이민 배경 가족과 부모 구성 유형에 따라 자녀 수에 뚜렷한 차이 확인	119
6	가족 갈등 및 이혼 시 디지털 서비스 지원	120

❖ 임신·출산 지원

1. 독일 모성 보호법 및 모성 급여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직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직장에서의 건강 위험, 해고, 소득 손실 등으로 부터 포괄적 보호를 받음
- 모성 보호 제도의 목적은 임신 중, 출산 후, 모유 수유 시기에 여성과 (태아)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임신·출산·모유 수유기에 차별 방지 보호도 제공함
- 보호 대상에는 직장 여성뿐 아니라 학생 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이 포함됨
- 다만, 모성 보호법(Mutterschutzgesetz)은 자영업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모성 보호법의 주요 내용

- 직장 내 건강 보호
- 출산 전후 특정 기간 동안의 업무 금지
- 해고에 대한 특별 보호
- 직장 업무 금지 기간 중의 소득 보호
- 건강검진 및 모유 수유를 위한 유급휴가(노동시간 인정)

■ 직장 내 보호 및 업무 금지

- 출산 예정일 6주 전부터 출산 후 8주까지의 보호 기간을 규정함
- 이 기간 동안 직장 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출산 전에는 본인 의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음
- 2025년 6월 1일부터 임신 13주 이후의 유산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 임신 13주부터 유산 시 최대 2주, 17주부터 6주, 20주부터 8주까지 보호 기간을 보장함
- 보호 기간 이용 여부는 본인이 결정함

■ 폭넓은 보호 및 고용주 의무

- 모성 보호는 보호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모든 여성 근로자에 대해 임신 가능성 포함해 고용주는 근무환경 위험 평가를 실시함
- 고용주는 임신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 및 자녀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보호 조치를 마련·시행해야 함
- 무거운 짐 운반, 야간·일요일·공휴일 근무 등은 일반적으로 금지함
- 업무환경 재정비나 전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업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모성 보호 위원회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모성 보호 관련 지침, 연구결과, 실무 자료 등을 제공함
- 고용주가 실제로 모성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해고 보호

-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혹은 임신 12주 이후 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됨(몇 가지 예외 존재)
- 해고 관련 상세 정보는 연방 노동사회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감독 당국

- 모성 보호법의 집행은 연방 각 주의 감독기관에서 담당함
- 고용주는 임신 또는 수유 사실 파악 시 즉시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함
- 해고 금지 기간 중 계약 종료 등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감독기관은 모성 보호법 관련 건강·해고 보호 문제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제공함

■ 모성 급여(Mutterschaftsgeld), 고용주 추가수당(Arbeitsgeberzuschuss) 및 모성 보호 급여(Mutterschutzlohn)

- 보호 기간 중 고용된 여성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양한 모성 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법정(공공) 건강보험 가입 여성: 출산 수당(최대 일 13유로)과 고용주 추가수당을 받음
- 비가입 여성(사보험, 가족보험): 총 210유로의 출산 수당 및 고용주 추가수당을 받음

- 보호 기간 외 업무 금지에도 모성 보호 급여로 기존 평균 수입을 보장함
- 공무원은 보호 기간과 업무 금지 시 전액 급여를 수령함
- 자영업자는 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고용주 환급 제도

- 직장 업무 금지 등으로 고용주가 지급한 출산 급여 또는 모성 보호 급여는 건강보험 기금 U2 절차를 통해 환급받음
- 고용주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유급 건강검진 및 모유 수유 휴가

- 고용주는 법정 건강검진 및 모유수유(출산 후 12개월) 시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함

■ 연방 모성 보호 재단 지원

-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여성은 연방모자재단(Bundesstiftung)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재단은 임부복, 신생아 초기 용품, 의식주, 가구, 돌봄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제공함
- 신청은 지역 임신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함

2025년 05월 12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mutterschaftsleistungen/mutterschutz-und-mutterschaftsleistungen-73754>

❖ 일·가정 양립

1. 아버지의 재택근무가 자녀돌봄에 끼치는 영향

■ 아버지의 재택근무 기회는 부모 둘 간의 육아 부담의 평등을 촉진할 수 있음.

- 고용연구소(IAB)와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돌봄 노동이 평등하게 분담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재택근무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음.

-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히 아버지들을 위한 재택근무 기회가 육아에 있어 더 평등한 육아 부담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엄마가 아닌 아버지에게 재택근무 기회가 주어진 가정에서는 팬데믹 절정기 이후에도 육아 책임이 더 평등하게 분담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크리스티나 볼 박사와 시몬 솔러 박사로 이루어진 연구진과 고용연구소(IAB)의 다나 뮐러와 크리스토퍼 오시안더 박사가 함께 연구한 ‘재택근무와 부모 육아 부문: 코로나 19 팬데믹 2년간의 고증 (Working from Home and Parental Childcare Division: Evidence from Two Years of the COVID19 Pandemic)’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사회 정치 (Social Politics) 저널에 게재했음.

- 이 연구는 IAB의 종단 조사 고빈도 온라인 개인 패널(High-Frequency Online Personal Panel 줄여서 IAB-HOPP)의 약 600쌍의 부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
- 이전 연구와 달리 이 연구는 팬데믹 초기 단계에서 2022년 봄까지 오랜 역학 관계를 보여줌. 연구진은 1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부부를 관찰한 결과 엄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경우가 27%에서 23%로 약 4%p 감소했다고 함.

■ DJI의 가족 및 가족 정책 부서장인 크리스티나 볼은 “재택근무로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어느 정도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히 아버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강조함.

- 장기적으로 남녀 평등한 구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택근무의 확대가 특히 아버지들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함.
- 또한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활성화, 배우자 분할 육아휴직 폐지, 방과 후 돌봄 확대 등의 정책적

조치가 평등한 역할 분담 추진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언급함.

- 연구에서는 재택근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2025년 01월 16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32-homeoffice-moeglichkeiten-von-vaetern-koennen-partnerschaftlichere-aufteilung-der-kinderbetreuung-foerdern.html>

2. “육아 시간의 변화: 아버지는 늘고 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두 배”

■ 아버지의 육아 참여 증가: AID:A 설문조사 결과 요약

- 독일 청소년연구소(DJI)의 ‘독일에서의 성장: 일상의 세계(Aufwachsen in Deutschland: AID:A)’ 설문조사(2023)는 아버지의 육아 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자녀가 있는 이성 부부 2,294쌍을 대상으로 분석함.
- 아버들은 평일 평균 2.26시간(2시간 16분)을 자녀 돌봄에 할애함.
- 이는 2019년보다 약 9분, 약 7% 증가한 수치임.

■ 가족을 우선시하는 아버지들 증가

- 직업적 성공보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아버지들이 늘어남.
- 아버지들은 가사와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하려 노력함.
- 파트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려는 태도를 보임.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의 ‘아빠 보고서 2023’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여전히 큰 육아시간 격차

- 2023년 기준, 어머니들은 평일 평균 4.76시간(4시간 46분)을 육아에 사용함. 이는 아버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시간임.
- 어머니들의 육아 시간은 2019년 대비 약 25분, 약 7% 감소함.
-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경향이 높아 아버지와 어머니 간 시간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남.

- 어린이집 등 가정 외 돌봄은 엄마들의 직업활동에 있어 핵심 기반으로 작용함

■ 가족 내 비교: 차이는 작지만 격차는 여전함

- 같은 가족 내 아빠와 엄마의 육아 시간을 비교하면, 부부가 육아 시간을 균등하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어 전체 평균보다는 차이가 작게 나타남.
- 2023년에는 엄마가 아빠보다 약 45%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사용함. 이는 2019년의 68% 격차보다 감소한 수치임.
- 육아 시간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세대 간 아빠 역할 개념 변화: 독일-폴란드 협력 연구

- 폴란드 브로츠와프대학교와 독일 연구진은 공동으로 세대 간 아빠 역할 개념의 변화를 조사하고 있음.
- 한 가족 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인터뷰하여 정치 체제 변화가 부성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 중임.
- 본 연구는 독일연구재단(DFG)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음.
- 초점은 각 세대의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으며, 그 경험이 자신의 아빠 역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있음.

2025년 05월 26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76-betreuungszeiten-von-vaetern-und-muettern-gleichen-sich-langsam-an-der-unterschied-bleibt-jedoch-gross.html>

3. 조건 충족시, 엄마들은 더 일하고 싶어함

■ 기업 네트워크 ‘성공 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개요

- 이번 연구는 독일 경제회관(Haus der Deutschen Wirtschaft)에서 열린 기업 행사 ‘성공 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짐.
- 9월 19일 개최된 본 행사에서는 정치계와 경제계가 전문 인력 확보, 엄마들의 경제활동, 가족과 직업의 양립에 대해 논의함.

- 연방가족부 장관 카린 프리엔(Karin Prien)과 독일상공회의소(DIHK) 회장 피터 아드리안(Peter Adrian)이 참석했으며, 핵심 주제는 Prognos AG의 새로운 연구 결과 「더 많은 것이 가능하다! 기업이 엄마들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렸다」(Mehr ist möglich!)였음.

■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근무 조건 개선

- 본 연구 결과는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전문 인력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독일 내 파트타임으로 근무 중인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1,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설문조사 결과임.
-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여성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파트타임 근무 여성의 약 45%가 근무 조건(유연성, 의사소통, 경력전망 등)이 개선된다면 근무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이는 약 1,400만 시간의 추가 근로시간, 즉 약 35만 명의 추가 풀타임 인력과 맞먹는 경제적 잠재력을 의미함.

■ 연방가족부 장관 카린 프리엔 발언

- “엄마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많은 엄마들은 신뢰할 수 있는 키타(Kita, Kindertagesstätte)와 돌봄 서비스, 유연한 근무시간, 가정 내 진정한 파트너십이 보장된다면 더 많이 일할 의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정부와 고용주가 함께 협력한다면 가족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방정부는 향후 수년간 키타와 학교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육아휴직 수당 제도를 통해 부부가 평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도록 더욱 장려할 것입니다.”

※ 키타(Kita, Kindertagesstätte)는 독일의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위한 통합형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 한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괄하는 개념임.

■ DIHK 회장 피터 아드리안 발언

- “부모, 특히 엄마들이 점진적으로 직장에 복귀하고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가족, 기업,

그리고 노동시장이 모두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잠재력은 수십만 개의 풀타임 일자리와 맞먹습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삶의 균형이 개선되면 노동력이 증가하고, 이는 곧 사회적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자녀를 둔 여성의 91%는 국가뿐 아니라 고용주도 일·가정 양립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응답함.
- 대부분의 엄마들은 현재 근무시간에 만족하고 있으나, 17%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8%는 줄이길 원함.
- 근무조건이 개선된다면 45%의 엄마들이 근무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독일의 엄마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33시간 근무를 이상적인 목표로 제시함.
- 근무시간 연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근무시간 설계의 유연성을 꼽음.
- 많은 엄마들이 근무시간 증가 시 가정 내 역할과의 병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 일정 기간 시범운영(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함.
- 추가 전제조건으로는 직장 내 의사소통 개선과 경력 발전 기회 확대가 제시됨.
- 38%의 엄마들은 고용주가 근무시간 연장을 제안만 해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나,
- 실제로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에 불과함.
- 41%의 엄마들이 근무시간 확대 이유로 자기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음.

■ 가족과 직업의 균형을 이룬 9,000개 기업 네트워크

- 이번 행사에서 카린 프리엔 연방가족부 장관과 페터 아드리안 DIHK 회장은 뮌헨 박람회(Messe München GmbH)를 “성공 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네트워크의 9,000번째 회원사로 환영함.
- 해당 기업은 이미 직원들의 가족·직업 균형(family-work balance)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관련 활동을 더욱 확대할 예정임.

■ 기업 네트워크 ‘성공 요인 가족(Erfolgsfaktor Familie)’ 개요

- “성공 요인 가족”은 독일 최대의 가족친화적 인사정책 네트워크로, 현재 9,00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음.
- 2007년 연방가족부(BMFSFJ)와 독일상공회의소(DIHK)가 공동 설립하였으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과 일·가정 양립 촉진을 목표로 함.
- 가족친화 정책을 지지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이 무료로 회원가입할 수 있음.

2025년 09월 19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muetter-wollen-mehr-arbeiten-wenn-die-bedingungen-stimmen-270366>

❖ 유아교육·보육

1. 출산율 하락이 어린이집의 변화로 이어질까?

■ KomDat 최신 호의 핵심 주제는 최근 발생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확장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적인 전문 인력 부족임.

■ 어린이집의 수요는 출산율의 추이에 따라 크게 달라짐. 2021년까지 몇 년 동안 출생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어린이집의 대규모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했음.

- 어린이집 자리에 관한 법적 권리는 자녀의 첫 번째 생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2022년, 2023년, 2024년 1~3분기에 출생아 수가 크게 감소했음.

- 2021년에는 거의 80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지만, 2023년에는 7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로 불과 2년 만에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어린이가 더 적게 태어났음을 의미함.

-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동독의 어린이집 수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구 서독의 경우, 이는 향후 어린이집 시설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어린이집에 대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어린이집들이 개원하고 추가 교사 및 인력들이 채용되고 있지만, 2024년에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어린이집 자리가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음.

- 동독의 지방 도시들에서는 잘 구축된 시스템과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DJI 조사에 따르면, 공급과 부모의 수요 사이의 기존 격차로 인해 서독 지역의 지방 도시들과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높은 공급 부족이 예상됨.

- 이 지역에서 전문 인력 부족 또는 최근의 출산율 하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예상됨.

- 이것이 어린이집 시스템 변화의 첫 신호인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함.

■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의 인력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 및 청소년 복지 통계 외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교사, 아동 돌보미 또는 사회복지사의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1~2%에 달함.
- 그럼에도 이 분야에 비교적 많은 수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고용청은 보고함.
- 이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분야의 필요 전문 인력을 채우는 것이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줌.
- 또한 처음으로 6개 건강보험회사의 전국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종사자의 병가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함.
- 이는 이 분야 시스템 가동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전문 인력 자리가 충원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직원 결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

2025년 01월 14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29-fuehren-die-geburtenrueckgaenge-zu-einer-kita-wende.html>

2. 외국 자격 보유 인력, 독일 보육시설 인력난에 제한적 완화 효과

■ ‘초기교육 숙련인력 바로미터(Fachkräftebarometer Frühe Bildung)’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보육 교사 자격 인정 신청 4건 중 1건은 반려되었음.

- 독일의 어린이집(Kita)에서는 수년 전부터 심각한 보육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서부 독일 지역의 상황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독일청소년연구소(DJI)와 도르트문트공과대학교(TU Dortmund) 공동연구팀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51,000명에서 88,000명에 이르는 보육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더불어 2026/27 학년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돌봄에 대한 법적 권리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해외 자격을 보유한 숙련 인력을 국내 보육현장에 통합하는 방안이 인력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활발히 논의되어 왔음.
- 그러나 초기교육 숙련인력 바로미터의 최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 자격을 가진 이들이 제출한 보육교사(Erzieher:in) 자격 인정 신청 중 약 25%가 불승인되었음. 이는 해외에서

취득한 자격이 독일의 다년제 보육 전문학교(fachschulisch) 훈련과정과 동등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임.

■ 해외 자격 인정 신청, 2018년 대비 65% 증가

- 2023년 한 해 동안 약 2,800명이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를 바탕으로 각 주의 법적 절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 인정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2018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였음. 신청자는 총 90개국 출신으로, 스페인 출신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터키)가 이었음.
- 분석 시점까지 2,400건의 신청이 처리되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신청자가 국가공인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음. 전체의 약 25%는 독일 자격과의 완전한 동등성이 인정되어 정식 근무 자격을 획득하였고, 약 절반은 보완 교육과정(Anpassungslehrgang) 이수 또는 적성검사(Eignungsprüfung)를 거쳐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
- 나머지 25%는 자격의 범위, 지식, 기술 및 역량 측면에서 동등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음. 반면, 보조 보육사(Kinderpflege), 사회보조사(Sozialassistentz), 유아교육학 전공자(Kindheitspädagogik) 등 기타 관련 직종에서는 신청 건 중 약 10%만이 거절되었음.

■ 맞춤형 보육교육 및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연구 책임자인 카트야 틸만(Katja Tillmann)과 파스칼 하르트비히(Pascal Hartwich)는 “해외에서 취득한 유아교육 관련 자격이 독일의 Erzieher:in 자격과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해외 자격 체계의 이질성과 다양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들은 특히 “보건의로 분야와 달리, 유아교육 직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의 공통 최소 교육기준(EU-wide minimum standards)이 존재하지 않아, 독일의 체계적인 전문학교 교육과 해외 자격 간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분석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자는 외국인 숙련 인력이 독일 보육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음.
- 이들은 “더 많은 신청자들이 보육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정보 제공 확대는 물론, 낮은 진입 장벽을 유지하면서도 신청자의 배경에 적합한 맞춤형 보육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음.

2025년 03월 06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53-fachkraefte-mit-auslaendische-n-abschluessen-lindern-personalnot-in-deutschen-kitas-nur-bedingt.html>

3. 독일 연방정부, 교육 및 돌봄에 65억 유로 특별 투자 결정? 2029년까지 장기적 재정 계획을 통해 교육 인프라 및 보육 체계 경쟁력 강화

■ 개요

- 독일 연방 내각은 2025년 제2차 예산안과 2029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승인했음. 해당 계획에는 교육 및 아동 보육 분야에 대한 대규모 특별기금 투입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교육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
- 연방 교육부와 가족부가 통합된 새 정부 하에서, 카린 프리엔(Karin Prien) 연방 교육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음: “이번 특별 인프라펀드를 통해 연방정부가 교육과 보육에 65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사실은 교육 역사상 괄목할 성과입니다. 연방주정부도 총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활용해 기타와 학교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하며, 최근 개정된 ‘부채 제동장치(Schuldenbremse)’로 주정부들이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교육 및 돌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 아동보육 특별기금: 총 40억 유로
 - 연방정부는 아동 돌봄 품질 향상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간 매년 4억 유로, 총 40억 유로를 보육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음.
 - 이는 연방 가족부가 예산 기획 단계에서 지속가능하고 구조적인 품질 개선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성과로 평가됨.
- 디지털 협정 2.0 (DigitalPakt 2.0): 총 25억 유로
 - 기존 디지털 교육 정책(2019~2024년)의 연장선상에서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새롭게 ‘디지털 협정 2.0’을 수립했음.
 - 연방정부는 25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22억 5천만 유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직접 사용될 예정임.
 - 연방주정부는 이에 상응하여 전체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약 20억 유로는 이미 수립된 각 주정부의 계획과 연계되어 집행될 예정임.

■ 디지털 협정 2.0의 세부 추진 방향

- 연방 교육부와 연방 상원은 '디지털 수업 및 학습'을 핵심 목표로 다음 세 가지 조치에 합의했음:
 - 모든 학교에 고성능 Wi-Fi 인프라 구축
 - 최신형 디지털 단말기(노트북, 태블릿 등) 보급 확대
 - 학교 단위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 개발 및 확산
- 연방정부는 총 22억 5천만 유로를 연방주에 분배하여 인프라 투자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연방주정부는 5억 유로의 신규 재정 투입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2025년 06월 25일

출처 :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6-5-milliarden-euro-aus-dem-sonderverm-oegen-fuer-bildung-und-betreuung-266442>

4.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2025년 8월 1일 독일 청소년연구소(DJI)는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 이는 2026년 8월 1일부터 초등학교 연령 아동(1~4학년, 보통 만 6세~10세)을 대상으로 종일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리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임.
- 새 학년도부터 초등생 학부모들은 돌봄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당 권리는 우선 신입생에게 적용된 후 매년 한 학년씩 확대되어 2029~30학년도에는 1~4학년 전체 아동에게 보장될 예정임. 이를 위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DJI의 2023년 아동 돌봄 연구(KiBS: Kinderbetreuungsstudie) 대표 데이터 분석 결과, 전국 초등학교생의 돌봄 수요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소폭 증가하여 75%를 기록했다.

- 이는 3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임.
- 학년별로는 1학년 학부모의 82%, 2학년 학부모의 79%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했음. 학년이 높아질수록 돌봄 서비스 수요와 이용률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음.

■ **돌봄 수요 증가는 주로 점심시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데 기인함.**

- 반면 오후 2시 30분 이후의 종일제 학교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시설 및 기타 서비스 수요는 2020년 이후 6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지난 20여 년간 독일은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확대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나, 2023년 조사 결과 서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부모의 4%는 돌봄 자리를 구하지 못했으며, 또 다른 3%는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보다 주당 5시간 이상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음. 이에 따라 서독 지역에서는 전체 초등학생의 7%를 위한 신규 돌봄 자리를 마련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또한 민주주의 학습은 종일제 수업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대다수 학부모들은 직업 활동으로 인해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하지만, 종일제 학교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역량 개발, 민주주의 교육과 같은 사회적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됨.

■ **DJI 연구 종일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Demokratiebildung im Ganztag)은 종일반 수업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었음.**

- 연구진은 전쟁, 기후 위기, 반인류적·반민주적 행위 등 사회적 이슈를 오후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대해 장기적인 경험 학습, 가치 형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성 개발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민주주의 교육이 교과과정과 학교 발전 과정 속에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들이 오후에도 학교에 머무르는 종일제 시간에 민주주의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음.

■ **DJI 아동 돌봄 연구(KiBS) 개요**

- iBS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자녀를 둔 약 33,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전국 대표 설문조사임.
- 주요 조사 항목은 돌봄 상황, 학부모의 교육 및 돌봄 요구, 서비스 질 평가, 돌봄 유형 선택 이유 등임.
- 연방가족부(BMBFSF)가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교육 연구 개요

- DJI 연구진은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안할트, 바이에른의 8개 종일제 초등학교를 조사했음.
- 수업 시간, 오후 활동, 쉬는 시간, 전환 상황 등에서 참여 관찰과 영상 기반 관찰을 진행했으며, 교사·전문가·학생 그룹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의 실행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었음.

2025년 08월 01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619-nachfrage-nach-ausserunterrichtlichen-bildungs-und-betreuungsangeboten-fuer-grundschulkindern-steigt.html>

5. 영유아 보육 서비스 수요, 다시 증가

■ 2025년 8월 21일 발간된 독일 연방가족부의 정기 간행물 「Kindertagesbetreuung Kompakt(영유아 보육·교육 요약 통계 간행물)」 제10호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Kita, Kindergarten, Kindertagespflege 포함) 이용률이 다시 상승했음. 그러나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약 38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음.

-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가정 외 보육·교육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번 통계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키타(Kita), 가정보육(Kindertagespflege) 등을 포함한 가정 외 돌봄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동시에 서비스 공급과 부모의 실제 수요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

■ 주요 인사 발언

- 카린 프리엔(Karin Prien) 연방 교육·가족부 장관: “키타는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합니다. 이곳에서 학교와 직업 생활에서의 향후 성공을 위한 초석이 다져집니다. 3세부터 취학 전까지 거의 모든 아이가 키타를 이용하고 있으며, 3세 미만 아동의 가정 외 보육·교육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키타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저는 키타를 통한 돌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현대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특별기금에서 교육과 보육을 위해 총 65억 유로를 지원합니다. 이 중 약 38억 유로는 키타 교육 투자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든 아이는 좋은 출발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 「Kindertagesbetreuung Kompakt」 주요 결과

- 이용률 증가: 2024년 기준 3세 미만 아동의 37.4%가 키타를 이용했으며, 이는 2023년 (36.4%) 대비 증가한 수치임. 출산율 감소를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임.
- 지역 차이: 동독은 기존 시설 유지가 핵심 과제인 반면, 서독은 신규 확충이 시급함.
- 부모 수요: 거의 모든 부모(98%)가 자녀가 3세부터 취학 전까지 키타를 이용하기 원했으며, 실제로 91.6%가 키타나 가정보육을 통해 자리를 확보함.
- 3세 미만 격차: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격차는 14.6%포인트에 달함.

■ 연방정부의 대응과 제도 개선

- 연방 내각은 인프라 및 기후중립 특별기금에서 총 65억 유로를 보육 및 디지털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음. 이 가운데 약 38억 유로가 키타 교육 투자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임.
- 또한 연방정부는 「Kita-Qualitätsgesetz(키타 환경법)」을 통해 주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매년 약 20억 유로가 배정됨. 주 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키타 시설 개선, 교사 인력 확보 등 질적 개선에 투자할 수 있음. 향후 연정 협정에 따라 「Qualitätsentwicklungsgesetz(환경개선법)」으로 대체할 계획임.

■ 전문 인력 확보의 중요성

- 전문 교사 확보는 키타 확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
- 서독: 신규 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교사 부족으로 부모들이 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휴원·운영시간 단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독: 공급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교사 부족으로 서비스 질 개선이 제한됨.
- 따라서 교사 인력 확보와 유지는 키타 환경 개선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음.

2025년 08월 21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bedarf-an-kindertagesbetreuung-ist-erneut-gestiegen-269148>

6. 연방정부는 유아교육에 4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함

■ 연방교육부 장관은 키타 환경 및 참여개선법(Kita-Qualitäts- und Teilhabeverbesserungsgesetz,

KiQuTG)에 관한 제16차 연방-주 협정을 체결함.

- 이번 협정을 통해 키타 환경 개선, 유아교사 확보 및 언어 교육 강화를 위해 총 40억 유로(4 Billion Euro)가 투입될 예정임.

■ 협약 체결 및 추진 경과

- 연방 교육부 장관 카린 프리엔(Karin Prien)은 9월 26일 마지막 주(州)와의 협약 체결을 완료함으로써, 연방과 16개 주정부 간 모든 협정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발표함.
- 각 주정부는 향후 2년간 키타의 교육 및 환경 서비스 질 향상과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시했으며, 연방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2026년 동안 총 40억 유로를 주정부에 지원할 예정임.

■ 연방 교육부 장관 발언 요지

- “양질의 유아교육은 성공적인 생애교육의 기초이며, 초기 단계부터 기회균등을 촉진합니다. 키타의 질 향상에 대한 투자는 아동과 가족뿐 아니라 교사와 전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40억 유로를 투입해 유아기 교육·돌봄·양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하여 키타 환경 및 참여개선법(KiQuTG)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개발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체제 하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키타 돌봄 서비스 환경 개선의 주요 내용

- 2024년에 통과된 제3차 키타 환경발전 및 참여개선법(KiQuTG)을 바탕으로, 연방정부는 키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KiQuTG는 키타 환경 개선의 7대 핵심 실행 분야를 중심으로 전국적 질 기준 확립을 목표로 함.
- 각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아래의 우선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수요 기반 키타 자리 확충 (수요에 맞춘 공급 활성화)
 - 유아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자격을 갖춘 전문교사 확보 및 유지
 - 키타 원장 및 부원장 역량 강화

-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 및 충분한 신체활동 장려
- 언어 교육 강화
- 유아돌보미 서비스(Kindertagespflege) 지원 강화

■ 전문 유아교사 확보 및 언어 교육 강화

- 2025년부터 각 주정부는 전문 유아교사 확보와 언어교육 강화 두 분야를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함.
- 이는 키타 질 개선의 핵심 요소가 교사 역량과 언어교육에 있음을 반영한 것임.
- 각 주는 2025~2026년 KiQuTG 시행 시 이 두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설정함.

■ 법 개정 및 후속 제도 발전 방향

- KiQuTG의 추가 개선안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 그리고 2024년 3월 전국 통일 키타 환경 기준 수립을 위한 유아교육 전문가팀(AG Frühe Bildung)의 권고를 토대로 마련됨.
- 주요 목표는 키타 돌봄 서비스의 물리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동서독 간 격차를 해소하며, 향후 제정될 환경개발법(Qualitätsentwicklungsgesetz)에 명시될 전국적 질 기준을 구축하는 것임.

■ 재정 조달 구조

- 최근 체결된 연방-주 간 협약으로 자금 조달 조건이 충족됨.
- 각 주정부는 2025년과 2026년에 수직적 부가가치세 배분(vertikale Umsatzsteuerverteilung, vertical VAT distribution) 변경을 통해 추가 재정을 확보하게 됨.

2025년 09월 26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investiert-vier-milliarden-euro-in-fruehe-bildung--271020>

7. 높은 교육수준, 높은 스트레스: 인력 부족과 결근이 독일 교사들에게 여러 부담을 줌

■ 개요: OECD TALIS Starting Strong 2024 연구 결과

- 2024년 봄, 17개국 25,000명 이상의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OECD 연

구의 초기 결과가 발표됨.

- 독일에서는 독일청소년연구소(DJI) 산하 ‘국제 유아 교육·돌봄·양육 센터(ICEC)’ 주도로 약 2,000명의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주요 문제점: 인력 부족과 결근

- 양질의 유아교육·보육(FBBE)은 기회 평등의 전제 조건이나, 독일은 인력 부족과 교사의 결근(병가 등)이 이를 저해하고 있음.
- 설문 결과:
 - 원장의 약 80%: 교사의 결근이 아동 발달 및 학습 환경 제공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
 - 원장의 절반 이상: 아동 수 대비 교사 부족을 우려함.
 - 이는 조사 대상국 대부분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이며, 3세 이상(Ü3) 및 3세 미만(U3) 시설 모두에 해당됨.

■ 높은 직무 스트레스

- 동료의 결근으로 인한 추가 업무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임.
- 스트레스 경험 비율: 3세 이상 시설 교사의 76%, 3세 미만 시설 교사의 79%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응답 (타 국가 대비 매우 높음).
- 영향: 높은 스트레스는 건강 문제나 이직(해당 분야 이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
- 제언(다니엘 투라니, DJI): 출산을 감소로 수요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 투자는 지속되어야 함.

■ 직무 만족도와 사회적 인정의 괴리

- 만족도: 높은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3세 이상 93%, 3세 미만 87%)는 직업에 만족하며 학부모·아동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느낌.
- 급여 만족도: 2018년 대비 15%p 상승한 42%로 개선되었으나(공공 부문 임금 인상 영향), 여전히 절반 이상은 더 나은 급여를 원함.
- 사회적 인정: 많은 교사가 더 높은 사회적 인정을 필요로 함.

■ 교육 및 연수 필요성

- 다양성 대응: 교사 4명 중 1명은 다문화(비독일어 사용) 아동 지도법에 대한 지식을 원함.
- 특수 교육: 3분의 1 이상이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도에 대한 연수 필요성을 표명함.
- 연수의 딜레마: 독일 교사의 전문성(대졸자 비율 등)과 연수 참여율(약 85%)은 높으나, 응답자의 약 절반이 연수 시 대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고 사항

- 본 결과는 OECD 보고서 및 독일 국가 보고서에 게재되었으며, 2025년 12월 4일 웨비나를 통해 발표됨.
- 연구는 유럽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독일 연방 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
- 관련 링크: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results-from-talis-starting-strong-2024_20af08c0-en.html

2025년 12월 9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677-gut-ausgebildet-und-gestresst.html>

8. 초등학교 종일반 확대에 관한 제3차 보고서

■ 개요: 초등학교 종일반 확대 현황

-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종일반(또는 종일제) 확대가 진행 중이며, 연방정부·주정부·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방 내각은 12월 3일, '초등학생을 위한 종일 교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현황에 관한 제3차 보고서'를 발표함.
- 법적 권리 시행 일정:
 - 2026년 8월 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종일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리 시행.
 - 2029/2030 학년도: 1학년~4학년 모든 아동이 종일반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됨.

■ 주요 인사 발언: 카린 프리엔 연방 가족부 장관

- “종일반 교육은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아이들을 교육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현대적인 종일반 교육은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의 장이며 더 나은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동시에 종일반 교육은 가족과 직업의 양립, 특히 엄마들에게 가족과 직업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게 합니다. 연방 정부는 주 및 지방 자치단체와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아동에게 적합한 종일반 교육 및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내년에 1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법적 권리는 진정한 이정표입니다. 세 번째 현황 보고서에서 수용 인원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종일반 자리와 학부모 수요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 자치단체가 함께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아동에게 적합한 종일제 돌봄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 주들이 2026/27 학년도 수용 인원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이용 현황 및 수요 예측

- 이용 현황: 2023/2024 학년도 기준, 전체 6~10세 아동 중 약 190만 명(57%)이 종일반 학교나 방과 후 돌봄시설(호르트, Hort)을 이용함 (전년 대비 1%p 상승).
- 수요 예측 및 필요 좌석 수:
 - 2029/30 학년도까지 수요 충족을 위해 평균 약 264,000개의 추가 자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연방 정부 지원 하에 주 및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자리를 확충해 온 덕분에, 예상되는 확충 수요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함.
- 시나리오별 예측:
 - 수요 일정 유지 시: 약 166,000개 추가 필요.
 - 수요 대폭 증가 시: 약 284,000개 추가 필요.
 - 평균: 약 225,000개 추가 필요.
 - 양적 확장은 주로 서독의 광역 도시에 집중되며, 동독 지역은 주로 질적 확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1학년 대상 법적 권리 시행 준비 (2026/27 학년도)

- 2026년 8월 1일 법적 권리가 적용되는 1학년을 위해, 수요가 일정할 경우 최대 30,000명,

증가할 경우 최대 65,000명의 추가 정원이 필요함.

- 주 정부 관계자들은 법적 권리 시행 시 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재정 지원 및 법적 근거

- 보고서 제출: '종일반 지원법(GaFöG)'에 따라 연방정부(가족부 주관)는 매년 연방의회에 확대 현황 보고서를 제출함.
- 재정 투자:
 - 인프라 확장: 지방 교육 인프라 확장에 35억 유로 투자 예정.
 - 운영비 지원: 법적 권리로 인한 주정부의 추가 운영 비용은 연방정부가 '재정균등법' 개정을 통해 부담.
 - 부가가치세 분배 조정: 2026년부터 주정부에 유리하게 매년 증가하여, 2030년부터는 연간 1억 3,500만 유로에서 최대 13억 유로까지 조정될 예정.

2025년 12월 03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dritter-bericht-zum-ganztagsausbau-an-grundschulen-beschlossen-276684>

❖ 아동·청소년지원

1. 어린이 4명 중 1명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놓여 있음

■ 독일의 국가 실행계획, “독일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

- 독일의 국가 실행계획인 “독일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는 2030년까지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아교육, 돌봄 및 양육, 학교 활동 및 여가 활동, 의료, 건강한 식사, 적절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첫 번째 진행 상황 보고서는 빈곤과 사회적 불이익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독일 내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 현황

- 독일에서는 350만 명 이상의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음.
-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 4명 중 1명(24%)이 금전적 빈곤의 위험에 있거나, 물질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
-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 형제자매가 많은 가정, 장애가 있는 아동, EU 외 국가 출신 이민자 및 난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됨.
- 이 분석은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국가 실행계획 서비스 및 모니터링 센터 연구진이 작성한 ‘2024 독일 유럽 아동 보장 이행 보고서’에서 제시된 결과 중 일부임.
- 이 보고서는 연방 내각에서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됨.

■ 국가 실행계획 이행 보고서 개요

- 국가 실행계획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는 2년마다 작성되며, 2024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국가 실행계획 서비스 및 모니터링 센터 연구진이 수행한 질적 연구와 광범위한 문헌 검토 결과.
- 불우한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활용.

■ 2024년 보고서 주요 내용

- DJI 연구팀이 작성한 경험적 분석
- 국가 실행계획 서비스 및 모니터링 센터 소속 청소년팀의 의견 (이 팀은 14~25세 청소년 약 20명으로 구성됨)
- 실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가 검토한 ‘도시 빈곤 예방’을 핵심 주제로 한 분석.

2025년 02월 05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39-fast-jedes-vierte-kind-in-deutschland-ist-von-armut-oder-sozialer-ausgrenzung-bedroht.html>

2. 4분의 1의 아동 및 청소년이 빈곤이나 사회적배제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

■ 배경 및 발표 개요

- 9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앞두고, DJI(독일 청소년연구소) 산하 서비스 및 모니터링 기관 ServiKiD가 연구잡지 DJI Impulse를 통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약 330만 명(22.9%)이 빈곤 또는 사회적 배제 위험(AROPE)에 처해 있음.
- ServiKiD는 국가행동계획 「Neue Chancen für Kinder in Deutschland(독일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설계·이행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아동 빈곤·배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학자 Dr. Gerlinde Janschitz(ServiKiD 책임자)는 “이들의 자립적 삶의 전망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함.

■ 빈곤 및 사회적 배제 위험 지표(AROPE)

- 금전적 빈곤(monetäre Armutsgefährdung): 전체 아동의 15.2% 가 세후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가정에서 생활.
- 매우 낮은 취업 강도(sehr niedrige Erwerbsintensität): 전체의 10.4% 가 성인 구성원이 노동력의 20% 미만을 활용하는 가정에서 성장.
- 물질적·사회적 결핍(materielle oder soziale Entbehrung): 전체의 7.4% 가 주거난방·휴가 등 기본생활 13항목 중 최소 7가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에 거주.

- 세 항목은 모두 EU AROPE(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지표에 포함됨.

■ 주요 분석 결과

- 가구 유형별: 한부모 가정 아동의 44% 가 AROPE 위험군에 속함(부부가정 21%).
- 부모 학력별: 부모 모두 낮은 학력 → 아동의 61% 가 위험군
한 명이라도 중등학력 이상 → 약 24%
한 명 이상 고학력 → 11% 로 현저히 낮음
- 이주 배경별: 비EU 출신 부모의 아동 · 청소년: 위험률 60%
EU 출신 이민자 가정: 43%
독일 태생(2세대) 중 비EU 부모 포함 시: 36%
이민 배경 없는 아동: 14%에 불과

■ 연구진 발언 및 해석

- Janschitz, Wolfram, Leßmann 연구진은 “이민과 빈곤의 상관관계를 단순 동일시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일수록 차별화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ServiKiD는 향후 국가행동계획 내에서 학력·고용·이민 배경에 따른 아동빈곤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2025년 09월 19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634-fast-ein-viertel-der-minderjahrigen-ist-von-armut-oder-sozialer-ausgrenzung-bedroht.html>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 시행

■ 시행 개요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방지 구조를 강화하는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성폭력 치료에 대한 사안이 법적으로 정착됨.
- 카린 프리엔 (Karin Prien)연방 가족부 장관과 케어스틴 클라우스 (KerstinClaus)연방 아동 성폭력문제 독립위원장 (UnabhängigeBundesbeauftragte für Fragen des sexuellen Kindesmissbrauchs: USBKM)은 아동과 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법이 중요하다

고 강조함.

- 이 법은 조기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적인 아동 보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이 법은 처음으로 UBSKM, 피해자위원회(Betroffenenrat) 및 독립치유(극복)위원회(unabhängige Aufarbeitungskommission)를 법에 명시하고 있음. 성적 학대 관련 도움 전화 및 포털과 같은 기존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유지됨.

■ 주요인사 발언

- 카린 프리엔(Karin Prien) 연방 가족부 장관: “이번 법 시행은 독일에서 아동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적 폭력과 학대 근절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약속입니다. 2024년 경찰 통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이 1만8,000건 이상 보고된 것은 긴급 대응의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법 시행으로 예방, 지원, 사후 처리 등 전 영역에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폭력 연구센터 설립은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케어스틴 클라우스(Kerstin Claus) UBSKM 위원장: “아동학대 스캔들이 공개된 지 15년 만에 독일은 이 법으로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법은 피해자 예방·개입·지원에서 UBSKM의 역할을 강화하며, 모든 부처에서 피해자 보호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가해자 위협에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 법의 핵심 내용 개요

- 중앙적 구조 강화
 - UBSKM, 피해자위원회, 독립치유위원회에 법적근거와 장기적 안정성 부여
 - UBSKM은 연방정부 제안 후 연방의회에서 선출
- 연구 및 보고 의무
 - 새로 설립된 아동·청소년 성폭력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성폭력 실태·영향에 관한 정기 보고서 제출
- 피해자 참여 확대
 - 피해자위원회 지속 운영, 정책 형성 과정에 피해자 목소리 반영

- 치유·극복 과정 강화
 - 독립치유위원회 법제화, 정기 보고서를 통한 정치·공적 토론 활성화
 - 상담 서비스, 정보 접근성 향상, 학술 분석을 통한 구조적 오류 식별·방지
- 아동 보호 예방 및 질 향상
 - 연방 공중보건연구소(Bundesinstitut für öffentliche Gesundheit)에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법적 임무 부여
 - 아동복지 서비스 필수 구성요소로 보호·예방 개념 반영
 - 아동복지 위험 평가를 위한 의료 상담 서비스 설치

2025년 07월 02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s-gesetz-zum-schutz-von-betroffenen-in-kraft-getreten-266886>

4. 정신질환·중독 부모를 둔 아동·청소년 지원 - ‘헬프 온 더 넷’ 캠페인 전개

■ 전국 포스터 캠페인

- 독일에서는 매년 약 380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정신 건강, 학업,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평생 후유증을 겪기도 함.
- ‘헬프 온 더 넷(Help on the Net)’ 프로젝트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익명·무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 포스터 캠페인을 통해 접근 가능한 지원 범위를 널리 알리고 있음.

■ 주요인사 발언

- 마라이케 롯데 볼프(Mareike Lotte Wulf) 연방 가족부 의회 비서실장: “‘헬프 온 더 넷’은 접근성과 이용 제한 없는 지원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근 경로가 알려져야 하며,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리나 라리사 스트랄(Lina Larissa Strahl) 홍보대사: “아동·청소년은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헬프 온 더 넷’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며, 저는 이를 알리는 일을 기쁘게 맡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첫걸음은 큰 안도감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 파트릭 뮐러(Patrick Möller) Wall 상무이사: “전국 4,000개 시티라이트 광고판을 통해 hilfenimnetz.de를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포스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첫 번째 도움 창구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 지원 서비스 내용

- 상담 서비스: 정신질환·중독 가정의 아동·청소년, 가족 구성원, 전문가를 위한 무료·익명 전화 및 온라인 상담
- 정보 제공: 웹사이트 hilfenimnetz.de에서 전국 도움 센터 디지털 지도 제공, 우편번호 검색을 통한 지역 서비스 안내
- 운영 기관: NACOA Deutschland e.V., KidKit(퀵른 약물 지원 센터)
- 재정 지원: 연방 가족부가 전체 프로젝트와 캠페인 자금 지원

■ 캠페인 후원

- 미디어 파트너: Wall, 8주간 전국 4,000개의 시티라이트 광고판 무료 제공
- 홍보 활동: 리나 라리사 스트랄이 소셜 미디어와 포스터 홍보 참여

■ ‘헬프 온 더 넷’ 파트너

- KidKit: 10~21세 아동·청소년·청년 대상 디지털 정보·조언·지원 서비스 (중독, 폭력, 정신질환 가정)
- NACOA Deutschland e.V.: 중독 가정 출신 아동·청소년·성인 지원 자선 단체, 미국에서 시작해 독일·영국·슬로베니아·네덜란드 운영
- Wall: 독일 주요 도시에서 아날로그·디지털 광고와 교통 매체 운영

2025년 07월 16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kampagne-macht-auf-hilfen-im-netz-aufmerksam-267866>

5. 통합기관을 통한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와 지원

■ 배경 및 목적

- 독일 연방정부는 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형 아동보호센터 ‘차일드후드 하우스 (Childhood-Häuser)’ 확대를 지원하기로 함.
- 해당 시설은 학대·방임·폭력 피해 아동이 경찰, 법원, 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반복 조사로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됨.
- 사회복지, 심리학, 소아과, 산부인과, 법의학, 형사사법, 청소년복지 전문가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는 통합형 외래 상담소 모델임.

■ 정책 추진 및 연구 근거

- 독일 청소년연구소(DJI)와 세계어린이재단(World Childhood Foundation Germany, WCF)은 브로셔「Kinderrechte im Fokus: Vom europäischen Barnahus Modell zum deutschen Childhood-Haus Konzept – Praxis, Forschung und Perspektiven」를 발간.
- 이 브로셔는 유럽에서 인정받은 아이슬란드의 바르나후스(Barnahus) 모델을 기반으로 독일 내 적용 사례와 연구 결과를 종합함.
- 독일에는 현재 10개 주(州)에 11개 차일드후드 하우스가 운영 중이며, 연방정부는 연립협정 (Koalitionsvertrag) 에 따라 이들의 추가 확충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을 명시함.

■ 연구 및 성과 요약

- 브로셔는 2025년 3월 헬싱키 회의에서 논의된 유럽 각국의 경험을 요약하며, 스칸디나비아 연구 결과를 포함함.
- 연구들은 바르나후스 접근법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함:
 - 형사사법기관과 지원체계 간 협력 강화
 - 중복 조사 및 심문 감소, 피해 아동의 심리적 부담 완화
 - 피해 아동 및 부모의 전반적 안녕 개선
 - 아동보호 절차의 속도 향상

■ 아동 권리와 참여 확대

- 추가 연구에 따르면, 바르나하우스 모델은 청소년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연령에 적합한 참여 기회를 보장함.
-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과 독일 기본법의 원칙에 부합하며,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됨.
- 하인츠 킨들러(Prof. Dr. Heinz Kindler, DJI 아동보호 전문가)는 “이 접근법은 독일 아동보호체계의 질적 발전과 아동권리 강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향후 과제

- 전문가 간의 체계적 협력과 역할 조정,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지속적 평가체계 구축, 안정적 재정 지원 구조가 향후 발전의 핵심 과제로 지적됨.
- 킨들러 교수는 “독일 내 차일드후드 하우스가 장기적이고 계획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평가와 견고한 데이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 참고

- 브로셔 전문 및 연방 보조금 정보
<https://www.childhood-de.org/childhood-haus/bundesfoerderung/>

2025년 10월 01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641-schutz-und-unterstuetzung-fuer-von-gewalt-betroffene-kinder-unter-einem-dach.html>

6. 연구를 통한 독일의 아동 보호 강화

■ 독일 「유럽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방지의 날」 관련 발표

- 일자: 2025년 11월 18일
- 계기: 제10회 유럽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방지의 날
- 발표 주체: 카린 프리엔(Karin Prien) - 연방 가족·교육부 장관 및 케르스틴 클라우스(Kerstin Claus)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 독립 연방 위원회(UBSKM) 위원장

- 핵심 내용: 독일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 및 연구 프로젝트 발표 및 2025년 유럽의 날 주제: 아동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 주요 인사 발언 (1) 카린 프리엔 장관 발언

- “우리 모두 아동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학문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 분야에는 엄청난 어두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연구 센터를 통해 향후 정책적 조치에도 활용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은 반가운 일입니다. 모든 숫자 뒤에는 한 소녀나 소년의 운명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함.

■ 주요 인사 발언 (2) 케르스틴 클라우스 위원장 발언

- “내년에 우리는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경험에 관한 전국적인 연구인 ‘Safe!’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정 예산안이 제한된 시기에는 정책이 목표 지향적이고 증거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필수적 현실입니다. 성폭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는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폭력 경험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고, 건강과 피해자의 취업 경력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를 학문적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저의 큰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포괄적인 후속 비용 연구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 #NichtWegschieben(책임 회피하지 마라) 캠페인

- 2022년부터 진행 중인 인식 제고 및 행동 촉구 캠페인
- 대상: 성인
- 성과:
 - 주변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 41% → 53%
 - 아동 보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 50% → 60%
- 시사점: 지속적 교육이 태도 변화와 책임 의식 강화에 효과가 있음

■ 2025/26년 캠페인 방향: “성적 학대 예방 행동 촉구”

- 초점: 성인이 아동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 대표 프로그램: 부모·전문가 대상 왓츠앱 강좌 ‘7주, 7가지 팁’
- 예시 예방 행동:
 - 아동의 말과 감정을 진지하게 대하기
 - 경계(boundaries)를 존중하기
 - 성·신체 관련 지식을 솔직하게 대화하기
 - 어린이집·학교의 보호 체계 질문하기
- 핵심 메시지: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모두가 아동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성폭력 연구 기반 구축: 새로운 연구센터(ZEFSG)

- 법적 근거: 2025년 7월 1일 발효 ‘아동·청소년 성폭력 방지 구조 강화법(UBSKM법)’
- 설치 기관: 독일청소년연구소(DJI) 산하
- 역할:
 - 성폭력 관련 미연구 영역 공백 해소
 - 정책·사회적 조치 마련을 위한 증거 기반 확립
- 핵심 프로젝트: 전국 청소년 조사 “Safe!”
 - 시작: 2026년
 - 대상: 전국 9학년 학생 약 10,000명
 - 조사 내용: 폭력 경험의 빈도·유형·결과
 - 연구 결과 발표: 2027년
 - 결과 활용: 연방의회·연방상원·연방정부에 보고되는 UBSKM 보고서에 반영

■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보호 강화

- 연방 교육가족부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위원회 구성

- 활동 시작: 2025년 가을
- 개발할 전략:
 - 소셜미디어·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안전 확보
 - 아동·부모·전문가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 강화
 - 과도한 미디어 사용의 건강 영향 연구
- 목표: 연방·주정부·시민사회가 활용할 온라인/오프라인 보호 지침 마련

■ 유럽 아동 보호의 날(10주년, 2025)

- 제정 배경: 2015년 란사로테 협약(유럽평의회) 이행 지원
- 협약 내용: 모든 회원국은 아동 대상 성적 폭력 전면 규탄 및 강력 대응 의무
- 2025년 주제: “효과적인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
- 연구 부족이 성폭력 근절의 장애물
- 2026/27년 초점: 디지털 성폭력 방지
- 온라인 공간에서도 보호 개념 필요
- 성인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동반·보호할 책임이 있음

2025년 11월 18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forschung-staerkt-kinderschutz-in-deutschland-275120>

❖ 기타

1. EU 비교: 독일에서는 이혼 후 공동 돌봄이 여전히 일반적이지 않음

■ 독일 이혼 가정의 공동 육아 현황

- 독일 청소년 연구소(DJI)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 이혼 가정의 자녀 중 비거주 부모와 한 달에 10~15일을 함께 지내는 경우는 8%에 불과함.
- 이혼 후 공동 육아 형태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임.
- DJI의 설문 조사인 『독일에서의 성장: 일상의 생활』은 이혼 후 부모 공동 육아 실태를 조사하는 몇 안 되는 연구 자료 중 하나임.

■ 독일과 EU 국가 간 공동 육아 비교

- 독일 데이터를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이혼 후 부모가 균형 있게 육아를 분담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혼 후 대부분의 자녀는 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이를 '주거 모델(residence model)'이라고 함.
- 반면, 스웨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자녀가 비거주 부모와 한 달에 10~14일 또는 15일 이상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독일에서는 비거주 부모와 10~15일을 함께 지내는 18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단 8%에 불과함.
- 국가별로 공동 육아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 벨기에 - 스페인 - 프랑스 - 에스토니아 - 체코 - 독일 - 이탈리아 - 헝가리 순임.
- 이 분석은 2025년 1월 말 발표된 연방 정부의 제10차 가족 보고서에서 발췌된 것임.

■ 독일 내 공동 육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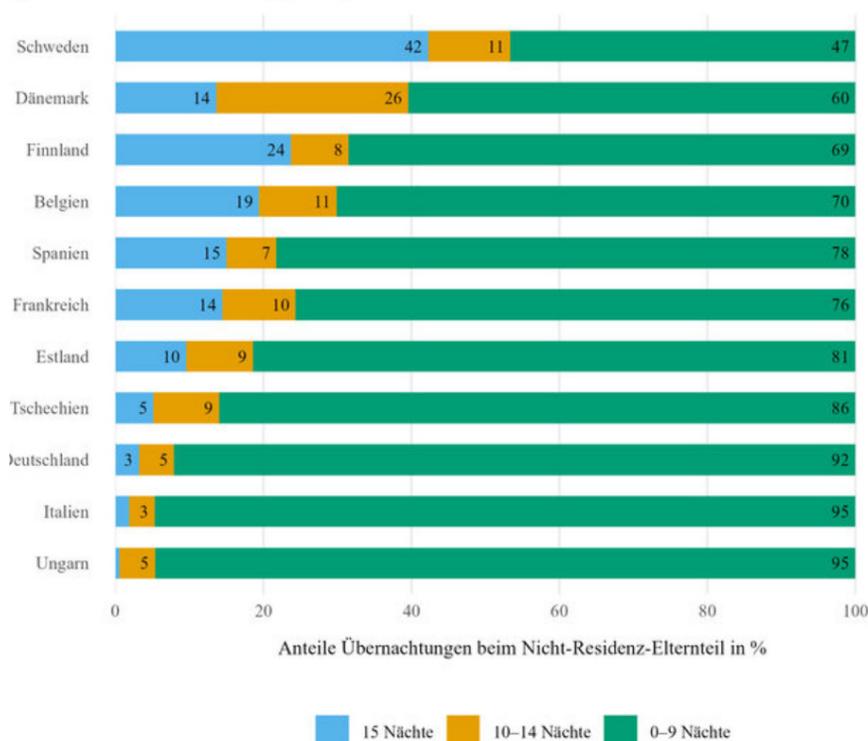
- '균형 있는 돌봄(공동 돌봄)'이라는 개념을 보다 넓게 정의하면, 한 달에 8~15일을 비거주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경우를 포함함.
- 독일 이혼 가정의 아동 중 12%는 비거주 부모의 집에서 비교적 자주 숙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22%는 비거주 부모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음.

- 29%는 비거주 부모와 연락은 유지하지만 숙박하지 않음.
- 나머지 37%는 한 달에 1~7일 정도 비거주 부모와 함께 지냄.

■ EU 국가의 공동 육아 통계

- EU 국가들의 공동 육아 데이터는 2021년 유럽연합 소득 및 생활 조건 통계(EU-SILC)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 대상 가구 중 비거주 부모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Ad-hoc 모듈이 활용됨.
- 유럽연합 국가 간 비교: 18세 미만 아동의 비거주 부모와 함께 보내는 일수에 따른 공동 육아 현황 (2021년 기준, 독일은 2019년 기준)

Geteilte Betreuung von Kindern unter 18 Jahren im Haushalt im europäischen Vergleich nach Anzahl der Übernachtungen beim Nicht-Residenz-Elternteil 2021 (2019 für Deutschland) (in %)



Quelle: Zehnter Familienbericht „Unterstützung allein- und getrennterziehender Eltern und ihrer Kinder — Bestandsaufnahme und Handlungsempfehlungen“

- 숙박 일수: 하늘색: 15일, 오렌지색: 10-14일, 초록색: 0-9일

2025년 02월 07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41-im-eu-vergleich-geteilte-kinderbetreuung-nach-trennung-in-deutschland-noch-wenig-verbreitet.html>

2. “아동과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수록, 미래를 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 DJI AID: A 2023 조사 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과 미래 불안 간의 뚜렷한 연관성 확인

- 2023년,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은 12~17세 청소년의 46%가 경제·정치적 위기로 인한 미래에 대한 큰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코로나19 팬데믹은 대부분 극복된 상태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등 새로운 위기들이 독일 청소년들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음.
- DJI의 조사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이 낮은 청소년(12~17세)의 46%는 정치·경제적 변화가 자신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는 큰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음.
- 반면, 주관적 웰빙이 높은 청소년 중에서 같은 불안을 경험한 비율은 26%에 불과했음. 이는 독일청소년연구소(DJI)가 진행한 대표적 청소년 조사인 『독일에서의 성장: 일상의 세계 (Aufwachsen in Deutschland: Alltagswelten, AID:A)』 2023년 본조사 결과 중 하나임. 연구진은 웰빙 수준과 미래 불안 간의 연관성을 증점적으로 분석하였음.

■ 웰빙 수준과 미래 불안의 관계

- WHO-5 지수가 50 미만인 청소년(낮은 웰빙 수준) 중, 정치·경제적 변화로 인해 미래가 위협받는다고 크게 걱정한 비율(46%)
- WHO-5 지수가 75 초과인 청소년(높은 웰빙 수준) 중, 같은 불안을 느낀 비율(26%)

■ 참고: 측정 기준 (1) WHO-5 웰빙 지수

- WHO-5 Index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개발한 주관적 웰빙 측정 도구로, 최근 2주간의 전반적인 정서 상태에 대한 5가지 긍정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됨.
- 각 문항은 0점(전혀 해당하지 않음)부터 5점(항상 그렇다)까지 평가되며, 총점(025점)을 4배하여 0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됨.
- 50점 미만은 웰빙 수준이 낮고, 75점 초과는 웰빙 수준이 높음.

■ 참고: 측정 기준 (2) 미래 불안(future anxiety)

- AID:A 설문에서 “경제·정치적 변화가 내 미래를 위협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되었음.

■ 분석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통계 분석 결과, 웰빙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미래에 대해 훨씬 더 낙관적인 전망을 갖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DJI 연구진은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함:
- “새로운 위기들이 청소년들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웰빙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년 03월 07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54-fuehlen-sich-kinder-und-jugendliche-wohl-blicken-sie-deutlich-zuversichtlicher-in-die-zukunft.html>

3. 독일 청소년연구소(DJI) 아동보호 관련 최신 연구 요약 (2025)

■ 독일에서는 아동 방임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성년자가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성적 폭력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독일 청소년연구소(DJI: Deutsches Jugendinstitut)는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폭력의 양상, 그리고 청소년청(Jugendamt), 학교, 가정, 보호시설에서의 대응 방식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효과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통찰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 해당 내용은 연구 잡지 「DJI Impulse」를 통해 공개되었음.

■ 특히 이번 호의 주요 주제는 학교 내 성폭력 문제로, 현재 진행 중인 중단 연구 「학교 폭력 보호 컨셉 개발 및 효과 분석(SchuLae)」에 따르면, 7~9학년 청소년의 약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성적 모욕, 불쾌한 음란물 노출,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대부분의 가해자는 또래 친구였음. 그러나 독일 내 약 2,000명의 교장·부교장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설문조사 결과, 포괄적인 아동보호 컨셉을 도입한 학교는 17%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개별 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SchuLae 연구에서는 포괄적 보호 시스템이 갖춰진 학교일수록 청소년 폭력 발생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현재까지 이러한 보호 개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연방주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학교는 교사 대상 추가 교육이나 성폭력 대처 지침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임.

■ 또한 고아원, 그룹홈(Wohngruppe) 등 보호시설에서도 보호 개념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혜택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님. 특히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소녀나 젊은 여성은 여전히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집중적 보호 전략이 요구됨.

■ 2023년 DJI의 조사 “독일에서의 성장(AID:A)”에 따르면, 12~21세 청소년의 약 7%가 최근 수개월 내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유형은 명예훼손성 콘텐츠 유포, 온라인상에서의 모욕, 고의적 소외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이는 학교, 복지시설, 직업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발생함.

■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루트 벤트 교수(뮌헨 루드비히 막시밀리안 대학교)는 단순한 금지나 필터링만으로는 온라인상 성적 폭력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 플랫폼 차원의 기술적·제도적 보호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DJI 공동 프로젝트 ‘CHAT’ 결과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래 간 성적 폭력 발생 시 개입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집단 내 위계질서나 소속감 유지를 위해 침묵하거나 축소하는 경향도 관찰되었음.

- 이에 따라 DJI는 연극 교육기관과 함께 예방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평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실제 행동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이 핵심임을 확인하였음.

■ DJI의 사빈 월퍼(Sabine Walper) 소장은 “아동 폭력 방지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전과 과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청소년청(Jugendamt)이 감당해야 할 행정·현장 업무의 복잡성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음.

-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이고 충분한 인력 기반은 아동보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평가체계, 조기개입, 위협 대응 역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음.

2025년 04월 15일

출처 : <https://www.dji.de/veroeffentlichungen/aktuelles/news/article/1568-neue-studienergebnisse-zum-thema-kinderschutz.html>

4. 2024년 독일 낙태 통계 분석 요약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총 106,000건의 낙태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수치로, 통계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임.
 - 그러나 이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지되었던 99,000~101,000건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최근 수년간 낙태 건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경향의 원인은 통계 수치만으로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우며, 특히 상담 규정(Beratungsregelung)에 따라 개인의 사유가 비공개로 보호되기 때문에 임신 중절 결정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24년 낙태를 한 여성의 69%는 18세에서 34세 사이, 20%는 35세에서 39세, 9%는 40세 이상, 3%는 18세 미만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체 낙태 여성 중 43%는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고된 낙태의 96%는 상담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4%는 의학적 사유나 성범죄 등으로 인한 낙태였음.
 - 시술 방식은 흡입법(진공 흡인)이 46%로 가장 많았고, 미프진®(Mifegyne)과 같은 약물 사용은 41%였음.
 - 시술 장소로는 의사 개원 진료소 또는 수술센터가 85%, 병원 외래 진료가 13%를 차지함.
- 대부분의 낙태(79%)는 임신 첫 8주 이내에 시행되었으며, 임신 12주 이후 낙태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변화 추세

- 장기적 비교 결과, 낙태 건수는 2014년(99,700건) 대비 2024년에 6.8% (6,7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였음.
- 젊은 연령층(1517세, 2024세)의 낙태 건수는 각각 13.8%(-400건), 8.3%(-1,800건)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 여성의 낙태는 급증하였음.
 - 30~34세: +12.8%(+2,800건)
 - 35~39세: +31.2%(+4,900건)
 - 40~44세: +23.2%(+1,600건)
- 이러한 변화는 15~24세 여성 인구가 각각 4.6%, 3.9% 감소한 반면, 3039세 여성 인구는 6.916.9% 증가한 인구 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여성 1만 명당 낙태율 변화

- 인구 1만 명당 낙태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15~17세 여성: 27건(2014) → 24건(2024)
 - 20~24세 여성: 96건(2014) → 92건(2024)
 - 30~34세 여성: 85건(2014) → 91건(2024)
 - 35~39세 여성: 67건(2014) → 75건(2024)
- 이는 청소년과 젊은 성인 여성의 낙태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30세 이상 여성의 낙태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이 통계는 2023년 기준 독일에 거주하는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2024년 수치를 산정한 것이며, 향후 낙태 연령대의 구조 변화와 출산 계획 지연, 생애주기 변화 등이 주요 분석 요소로 다뤄질 필요성을 시사함.

2025년 04월 03일

출처 :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4/PD25_128_233.html

5. 아동 4명 중 1명, 세 자녀 이상 다동이 가정에서 성장 - 이민 배경 가족과 부모 구성 유형에 따라 자녀 수에 뚜렷한 차이 확인

■ 조사 개요

- 2024년 기준, 독일 아동의 가족 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 중 약 26%가 형제자매 2명 이상과 함께 사는 다동이 가정(kinderreiche Familie)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한 가정 내 최소 3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아동 4명 중 1명꼴임.
- 해당 통계는 독일 연방통계청이 매년 인구의 약 1%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이크로센서스(Mikrozensus) 조사에 기반한 것으로, 2024년 자료는 2022년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추정치가 산출되었음.

■ 주요 통계 결과

-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아동 비율 (2024년 기준)
 - 30%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 아동
 - 44%는 형제자매가 1명
 - 18%는 형제자매가 2명
 - 8%는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변화 추이
 - 형제자매가 없는 아동 비율은 1996년 31% → 2015년 33%로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30%로 감소했음.
 - 다동이 가정(3명 이상 자녀)의 비율은 1996년 25% → 2015년 23%로 감소 후, 2024년 26%로 다시 상승했음.
 -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이후 증가한 이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동이 가정 구성 특성

- 자녀 수별 가정 비율
 - 전체 가정 중 약 13%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었음.
 - 동부 독일은 11%, 서부는 이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이민 배경과의 관계
 - 이민 배경이 있는 가정 중 19%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이었음.
 - 반면, 이민 배경이 없는 가정은 10%만이 다둥이 가정이었음.
 - 이로써 이민 배경 가정이 다자녀 가정일 가능성은 약 2배 높았음.
- 가구 구성별 차이
 -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양부모 가정)에서는 15%가 다둥이 가정이었음.
 - 한부모 가정에서는 이 비율이 8%에 불과했음.
 - 부모의 동거 여부는 자녀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음.

■ 방법론적 참고

- 마이크로센서스는 공동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자녀 공동체 전체를 ‘가족’으로 정의함.
- 조사된 자녀 수는 조사 시점에 부모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이미 독립하거나 별도의 가정 형태를 구성한 자녀는 제외됨. 따라서 조사 시 외동으로 분류된 아동이 미래에 형제자매가 생길 가능성은 통계상 반영되지 않았음.

2025년 06월 23일

출처 :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5/06/PD25_222_12.html

6. 가족 갈등 및 이혼 시 디지털 서비스 지원

■ STARK 플랫폼 개요

- “STARK - 갈등과 이혼 극복”: 일상 지원·상담·갈등 해결
- 가족 간 싸움·갈등·별거·이혼 상황에 있는 부모와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부모·자녀·가족 관련 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독일 연방 교육가족부가 지원하며, 독일청소년연구소(DJI)가 여러 대학(괴팅겐·하이델베르크·뮌헨·울름)과 협력해 운영
- 심리학·교육학·법학·경제학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공동 프로젝트

■ 온라인 세미나 개최 (11월 25-26일)

- 참가자: 1000명 이상 전문가
- 목적: STARK 플랫폼의 활용, 이혼·별거 상담 현황, 가족지원 협력 방안 논의
- 행사 개최사: 미하엘 브란트(Michael Brandt), 연방가족부 의회 국무장관
- 미하엘 브란트 발언
 “연방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STARK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24시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방향 제시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TARK는 지역 상담소의 중요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플랫폼에 대한 높은 수요는 가족 정책에서 디지털 서비스 확장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지표입니다”라고 말함.

■ 행사 주요 논의 내용

- STARK의 전국적 활용 중요성
- 이혼·별거 상담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경험 공유
- 갈등 상황의 가족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지 협력 방안 논의
- 부부 갈등·별거는 정보 부족, 일상 변화 등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 → 디지털 플랫폼의 지원 필요성 강조

■ STARK 플랫폼의 구체적 지원 기능

(1) 부모 지원

-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
- 갈등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조언
- 온라인 상담 제공

(2) 자녀(어린이·청소년) 지원

- 연령별 맞춤형 정보 제공
- 부모 갈등이나 이혼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는 콘텐츠

(3) 전문가 지원

-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자료 제공

- 상담 체계 보완 기능

■ 현장 상담 강화 및 법적 기반

- 독일에서 매년 약 12만 명의 어린이가 부모 이혼을 경험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SGB VIII(아동·청소년지원법)에 따라 다음에 대한 상담을 받을 권리 있음:
 - 부부관계·별거·이혼 상담 (§17)
 - 양육권·면회권 상담 (§18)
 - 양육 지원 (§27)
- 제10차 가족 보고서 시사점
 - 부부·이혼 상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수요 증가
 - STARK의 설계 방향과 일치:
 - 언제든지 접근 가능, 이해하기 쉬움
 - 중립적, 무료
 - 개인 상담을 대체하지는 않으나 정보 제공과 방향 제시를 통해 상담체계 강화
- 추가 지원 채널
 - 독일 청소년·결혼 상담 협회(DAJEB)의 온라인 상담 가이드
 - 이용자는 본인 지역의 적합한 상담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음

2025년 11월 25일

출처 : <https://www.bmbfsfj.bund.de/bmbfsfj/aktuelles/alle-meldungen/digitales-angebot-unterstuetzt-familien-bei-streit-und-trennung-275556>

영국

양육지원		
1	세금 공제 보육제도로 매일을 플레이데이(Playday) 처럼	124
2	온라인상의 영유아 관련 허위정보, 부모 지원으로 바로잡는다	125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유아교육 자격 관련 이니셔티브 발표	128
2	영국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박람회, 2025년 런던에서 개최	129
3	7,500만 파운드 확장 보조금 상세 내용	130
4	웨일스, 보육 지원금 추가 인상	132
5	잉글랜드의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3세 미만 아동 보육료 절반 이상 감소… 반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여전히 상승세	133
6	아침돌봄 및 랩어라운드(등·하교 시간) 프로그램, 영국 아이돌보미 생존 위협: 전국 아이돌보미 5명 중 1명,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업 손실 경험	135
7	영국 정부, 학교 기반 유아반(school-based nursery) 대폭 확대- 수천 가구 보육비 경감 기대	137
8	웨일스 보육 지원 서비스, 로그인 시스템 곧 변경 예정	140
9	아이돌보미(childminder) 채용과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Coram PACEY 2025 웨비나 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141
10	영국 정부, 생후 9개월 이상 아동 대상 '주 30시간 무상보육' 신청 개시 : 2025년 9월부터 전국 확대… 저소득 가구의 근로 확대 및 교육기회 보장 기대	143
11	Pulse Check 2025 -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145
12	Coram Family and Childcare - 2025년 방학 보육 실태조사	147
13	3·4세 아동 보육 지원금 수준, 아이돌보미와 가정에 압박 - Coram PACEY 경고	148
14	CIW, 웨일즈 보육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	149
15	영국 네 지역의 유아교육 인력 정책 비교분석	151
16	잉글랜드 아이돌보미(Childminder) 3,000명, 유아기 재정지원 제도 개편 촉구	152
17	95억 파운드의 기록적인 유아기 교육 투자	154
18	영국 교육부(DfE), 2025년 보육 및 유아교육 제공기관 설문조사 결과 발표	155

☞ 양육지원

1. 세금 공제 보육제도로 매일을 플레이데이(Playday)처럼

■ 올해 플레이데이(Playday, 8월 6일)를 맞아 근로 가정은 보육비 절감을 위해 ‘세금 공제 보육제도 (Tax-Free Childcare)’ 가입을 권장받고 있음.

-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영국 전역 7만5천여 보육기관에서 연간 최대 2,000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음. 장애 아동의 경우 최대 4,000파운드까지 지원 가능함. 이는 근로 가정의 가계 여유를 늘리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목표인 ‘Plan for Change’를 뒷받침함.

■ 제도 내용

- 근로 가정은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2,000파운드(장애 아동은 4,000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부모가 세금 공제 보육 계좌에 8파운드를 입금할 때마다 정부가 2파운드를 추가 지원해, 3개월마다 최대 500파운드(장애 아동은 1,000파운드)까지 혜택을 받음.
- 현재 제도를 결제 수단으로 받는 보육기관은 7만5천 곳으로, 유치원·등록 아이돌보미·방학 활동 클럽·등학교 클럽 등이 포함됨.

■ 자격 요건

- 만 11세 이하 아동(장애 아동은 만 16세까지)을 둔 가정.
- 부모(또는 배우자)가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을 벌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만 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통합복지수당(Universal Credit)이나 보육 바우처를 받지 않아야 함.

■ 주요인사 발언: HMRC 고객담당 최고책임자인 머틀 로이드(Myrtle Lloyd)

- “아이들이 축구, 클라이밍, 공예, 춤에 관심이 있든, 세금 공제 보육제도를 받는 다양한 보육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부모들은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GOV.UK를 방문해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직 가입하지 않은 가정은 여름 활동비나 새 학기 돌봄비를 대비해 지금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함

■ 가정이 세금 공제 보육 계좌를 개설하면 돈을 입금한 뒤 즉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까지 계좌에 보관할 수도 있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음.

2025년 08월 05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make-everyday-a-playday-with-tax-free-childcare>

2. 온라인상의 영유아 관련 허위정보, 부모 지원으로 바로잡는다

■ 캠페인 개요

- 온라인상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조언과 왜곡된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부모들이 정보의 혼란 속에서 근거 기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함.
- 이번 조치는 부모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황과 문제의식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약 33%가 소셜미디어를 주요 육아 조언의 출처로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68%는 상충되는 조언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69%는 과도한 정보량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온라인상에는 '기적의 해결책'이나 '육아 꿀팁'을 내세운 검증되지 않은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부모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불안을 초래함.

■ 정부 정책 연계

- 이번 캠페인은 정부의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의 일환으로, 불평등 해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적 혁신 정책의 일부임.
- 앞서 도입된 30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를 통해 5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전문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그 기반 위에서 확장됨.

■ 삶의 최상의 출발(Best Start in Life) 캠페인 주요 내용

- 부모들이 수유, 수면, 언어발달, 성장, 지역 내 보육 및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신뢰 가능한 정보를 NHS 및 정부 인증 경로를 통해 제공받도록 함.
- 심리학자 샘 와스(Sam Wass) 교수가 출연한 공식 영상과, 장난감 기업 해즈브로(Hasbro)의 페파 피그(Peppa Pig) 협업 콘텐츠가 포함됨.
- 해당 영상은 읽기·대화·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머디 퍼들 페어런팅(Muddy Puddle Parenting)’ 채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임.

■ 지역사회 기반 투자 확대

- 모든 가정이 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Best Start Family Hubs(가족지원허브) 설립에 투자함.
- 이번 주 새로 지정된 65개 비재정지원 지역이 총 1,200만 파운드(약 200억 원) 규모의 개발 보조금을 배정받음.
- 각 지역은 내년부터 가족지원허브 구축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하게 됨.

■ 주요 발언: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

- “모든 아이들의 기회는 유아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모들은 서로 다른 온라인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검증되지 않은 조언 대신, 근거 기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Plan for Change’는 부모들이 어디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아이가 인생의 최고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요 발언: 클레어(Claire, 4세 앨리스의 어머니)

- “정부의 수유 지침과 무료 보육시간 지원 덕분에 아이가 잘 자라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부모로서 훨씬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발언: 웨스 스트리팅(Wes Streeting) 보건복지부 장관

- “잠 못 이루는 밤과 육아 고민 속에서 부모들이 검증되지 않은 SNS 조언에 의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 제공은 아이의 건강과 학습 준비, 정신 건강까지

좌우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바로 그 신뢰 기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요 발언: 스티븐 스콧(Stephen Scott) 교수 (King’s College London)

- “부모들은 방대한 정보량과 낮은 신뢰도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향후 계획 및 투자 구조

- 정부는 「Plan for Change」에 따라 매년 수만 명의 아동이 학교 입학 전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핵심 서비스 연계 및 확장을 약속함.
- 주요 내용
 - 수천 개의 학교 기반 유치원 운영
 - 전국의 Best Start Family Hubs 설립
 - 무료 아침식사 클럽 전 학교 확대
 - 방학 중 활동 및 급식 프로그램(Holiday Activities and Food Programme) 3년간 지속 지원
- 이번에 배정된 1,200만 파운드 보조금은 2026년 4월부터 시작될 1,000개 허브 설립(총 5억 파운드 투자) 계획의 일부로, 각 지역이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가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25년 10월 14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parents-supported-to-navigate-early-years-misinformation-online>

❖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유아교육 자격 관련 이니셔티브 발표

■ 지난 1월 28일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유아교육 분야의 인력 채용 및 경력 개발을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세부 사항을 발표함.

■ 새로운 경력 기반 자격 취득 과정

- 유아교육 분야와의 협의에 따라, 교육부는 3급 자격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경력 기반 자격 취득 과정을 도입하기로 함. 이 경로는 정식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유아교육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에게 3급 기준에 맞춰 근무할 기회를 제공함.
- 유아교육 기관의 책임자는 2025년 3월 3일부터 직원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이 과정을 통해 3급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는 것은 2025년 9월 이후, 유아기 기초 교육 프레임워크(EYFS)가 업데이트된 후부터 가능함.

■ 유아교육 교사 학위 도제 프로그램(EYTDA)

- 교육부는 또한 새로운 자격 과정인 유아교육 교사 학위 도제 프로그램(Early Years Teacher Degree Apprenticeship, EYTDA)을 발표함. 이 과정은 3년 과정으로, 이수 시 유아교사 자격(Early Years Teacher Status, EYTS, 6급)을 취득하게 됨.
- 이 프로그램은 등록된 아이돌보미(childminders)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적용됨. 교육부는 2026년 9월부터 교육기관이 본 자격 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제공할 수 있음.

■ 유아 교육 자격 확인 디지털 서비스

- 교육부는 유아교육 자격 확인(Check an Early Years Qualification)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할 예정임. 이 서비스는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24년 봄에 공식적으로 제공될 예정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유아교육 기관 관리자들이 교직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자격이 충족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교육부는 “우리는 유아교육 분야의 인력 진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영유아와 함께 일하는 교직원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아교육 자격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함.

2025년 01월 28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dfe-announces-initiatives-around-early-years-qualifications/>

2. 영국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 박람회, 2025년 런던에서 개최

- 유아교육 박람회(Childcare & Education Expo)가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런던 올림피아 이벤트에서 개최될 예정임.

- 이 박람회는 영국 최대의 유아교육 커뮤니티를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로, 2024년에는 3,395명의 방문객, 110개의 전시 업체, 50명의 연사를 맞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음.

- 인기 프로그램인 ‘공유 및 지원 허브(Share & Support Hub)’에서는 업계 전문가들이 이끄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유아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2025년 박람회에서는 새로운 연사와 전시 업체,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체험형 공간이 마련될 예정임.

- 2025년 새롭게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챔피언스 오브 스포츠(Champions of Sport)가 있는데, 신체 놀이의 중요성과 혜택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공간임.

- 참가자들은 무료 워크숍, 웰빙 프로그램, 실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임.

- 이번 박람회는 고품질의 지속적 직무 연수 프로그램, 혁신적인 교육 자원, 그리고 업계 핵심 인물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이는 유아교육 분야 리더들이 전략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며, 성공적인 보육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임.

- 유명한 아동 문학 작가이자 시인인 마이클 로젠이 2월 28일 금요일 박람회에 참가하여 두차례 지속적 직무 연수 세미나를 진행함.

- 약 200권의 출판물을 보유한 로젠은 아동 문학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서, 지난해 박람회에서는 400권의 책에 사인을 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올해에도 그는 문해력(literacy)과 회복

탄력성(resilience)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줄 예정임.

- 이번 박람회에서는 유아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통해 최신 트렌드와 교육 현장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최첨단 제품을 체험하고, 업계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하며, 공식 인증된 지속적 직무 연수(CPD)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음.

2025년 01월 13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the-uks-largest-early-education-event-returns-to-london-in-2025/>

3. 7,500만 파운드 확장 보조금 상세 내용

■ 소비재 비용 부과 지침 개정 및 7,500만 파운드 확장 보조금 세부 사항 발표

- 정부는 소비재 비용 부과에 대한 법적 지침 개정과 함께 7,500만 파운드 규모의 확장 보조금 지급 세부 사항 및 Stronger Practice Hubs의 향후 운영 계획을 발표함.

■ 시간 지원 시 소비재 비용 부과에 대한 법적 지침 변경

- 정부는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여, 부모들이 시간 지원 배정 방식, 추가 비용 및 소비재 비용 부과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부모가 시간 지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반드시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함.

■ 주요 변경 사항

- 추가 비용 항목과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유형을 보육 제공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단, 보육 아동 수가 10명 이하인 아이돌보미 및 소규모 보육 제공자는 예외 적용.)
 - 청구서는 세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무료 시간 지원, 추가 비용 및 소비재 비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
 - 소비재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됨.
 - 추가 비용 부과는 가능하나, '소비재' 또는 '점심 식사' 처럼 모호한 항목으로 명시해서는 안 됨.
 - 부모가 시간 지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추가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업데이트된 유아교육 및 보육 지침(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statutory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education-and-childcare-2>

■ 7,500만 파운드 확장 보조금 지급 세부 사항

- 정부는 다음 주까지 지자체에 7,500만 파운드 규모의 확장 보조금을 배정할 계획이며, 각 지자체는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보육 제공자들에게 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함.
- 이 보조금은 9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지원 30시간 보육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특히 2세 이하 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 확충에 집중 투자될 계획.

■ 보조금 배분 방식 및 금액

- 교육부는 지자체가 해당 보조금의 100%를 보육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아이돌보미를 포함한 민간 및 자발적 보육 제공자들이 지역별 평균적으로 약 50만 파운드를 지원받을 예정.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최대 210만 파운드까지 배정 가능.
- 7,500만 파운드 보조금은 평균적으로:
 - 2세 유아 1인당 약 80파운드, 2세 미만 영유아 1인당 약 110파운드 (단, 최종 지급 금액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자체별 배정 금액은 2월 말까지 확정될 예정.
 - 2025-26년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금의 국가 평균 단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금 세부 내용 확인하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arly-years-funding-2025-to-2026>

■ Stronger Practice Hubs의 향후 운영 계획

- Stronger Practice Hubs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8개 지역 거점을 통해 지식 및 근거 기반 교육 접근법을 공유하

는 역할을 수행함.

-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연장 운영될 예정이며, 유아교육 및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될 계획.
- Stronger Practice Hub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Stronger Practice Hubs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trongerpracticehubs.org.uk/>

2025년 02월 21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changes-to-consumables-charging-and-details-of-the-75-million-expansion-grant/>

4. 웨일스, 보육 지원금 추가 인상

■ 웨일스 정부, 보육 지원금 추가 인상 확정

- 웨일스 정부는 2024년 12월 발표한 보육료 지원(Childcare Offer for Wales) 인상 계획에 따라, 2025년 4월 7일부터 보육 제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요금을 5.00파운드에서 6.00파운드로 20% 인상할 예정이었음.

■ 최종 예산안 발표 및 추가 인상 결정

- 오늘, 웨일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세부 지출 계획을 담은 최종 예산안을 발표하며, 시간당 요금의 추가 인상을 확정함. 이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보육 지원 제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요금이 기존 발표보다 더 높은 6.40파운드로 인상됨.
- 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는 식비 허용 한도는 기존 발표대로 20% 인상됨.

■ 유치원 및 Flying Start 프로그램 추가 지원

- 웨일스 정부는 보육 지원 내 유치원 교육(Nursery Education) 요소와 Flying Start 프로그램의 보육 요소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임.

■ 추가 예산 확보 및 보육 서비스 확대

- ※ 참고: 웨일스 정부는 예산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보육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1억 파운드 이상의 추가 예산을 확보함. 2월 20일 발표된 최종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 예산

3,000만 파운드를 추가로 확보하여 웨일스 전역에서 Flying Start 프로그램을 통해 2세 유아 보육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예정임. 또한, 보육 제공자의 시간당 요금을 6.40파운드로 인상하여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2025년 02월 20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further-increase-to-childcare-offer-rate-for-wales-cynnydd-pellach-yng-nghyfradd-y-cynnig-gofal-plant-cymru/>
<https://media.service.gov.wales/news/budget-agreement-secures-extra-gbp-100m-for-public-services>

5. 잉글랜드의 영유아 보육 지원 확대, 3세 미만 아동 보육료 절반 이상 감소… 반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여전히 상승세

■ Coram Family and Childcare의 제24차 연례 유아보육 실태조사는,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잉글랜드 맞벌이 가정 대상 보육 지원 정책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자료임.

■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만 2세 미만 유아를 위한 주 15시간 기준 시간제 보육 비용이 주당 평균 70.51파운드로, 2024년 대비 56% 감소함. 또한, 같은 연령 유아에 대한 전일제 보육 비용은 주당 평균 238.95파운드로 전년 대비 22% 감소함.

- 반면 이와 같은 보육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에서는 비용이 오히려 상승함. 스코틀랜드의 시간제 보육비용은 주당 평균 122.38파운드로 7% 상승하였고 웨일스는 155.04파운드로 10% 상승함. 영국 전역의 만 3~4세 유아 대상 보육 지원은 제도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연령대의 보육 비용은 평균 5% 증가함.
- 보고서는 또한 보육 지원에서 배제된 가정의 경우, 동일 연령 유아에 대해 보육비로 주당 105파운드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을 지적함. 이는 저소득층 및 비근로 가정의 아동이 초기 교육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보육 이용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보육 확충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에 응답한 잉글랜드 지역 자치단체 중 79%가 새로운 보육 지원 대상 유아의 최소 75% 이상에 대해 충분한 보육 자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응답함. 저소득층 2세 유아 대상 보육 자원 역시 80%의 자치단체에서 충족된다고 보고함.

■ 그러나 이전 연례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및 장애(SEND) 유아를 위한 보육 자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됨. 잉글랜드 자치단체 중 29%만이 해당 지역의 SEND 유아 75% 이상에게 충분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응답함. 비정규 근무시간을 가진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 자원

역시 22%만이 기준을 충족함.

■ 2024년에는 잉글랜드 내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지원제도의 1·2단계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정책은 이전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현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행 중임.

- 2024년 4월부터는 만 2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가 주당 15시간의 무상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9월부터는 생후 9개월 이상 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또한 동일한 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단계는 2025년 9월로 이 시점부터는 생후 9개월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둔 맞벌이 부모가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금년도 보육 실태조사에서는 보육 이용가능성(sufficiency) 관련 문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편되었으며, 기존의 '지역' 단위 응답 대신 '지자체 내 아동'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수정되었음.

- 이로 인해 전년도와의 직접적인 수치 비교는 제한되지만 전반적인 이용가능성 부족 현상은 여전히. 특히, 연령이 높은 아동, 비정규 근무시간을 가진 부모의 자녀, 그리고 특수교육 및 장애(SEND) 아동의 경우 이용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 이번 2025년 보육 실태조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총 173개 지역 자치단체가 응답하여 84%의 응답률을 기록함.

- 첫 번째 표는 생후 3세 미만 유아의 주당 25시간 보육 비용을 국가별 및 잉글랜드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며, 이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지원을 반영한 이후의 수치임.

	Nursery		Childminder	
	Under two	Two	Under two	Two
England (paying for 10 hours)	£70.51	£66.34	£59.76	£57.75
Scotland	£122.38	£124.75	£137.79	£130.05
Wales	£155.04	£146.15	£127.95	£129.33
East Midlands	£60.71	£57.69	£49.27	£49.59
East of England	£77.52	£70.42	£57.55	£57.18
London, Inner	£92.01	£90.25	£82.55	£81.76
London, Outer	£84.05	£83.73	£77.57	£74.14
North East	£66.98	£58.43	£53.93	£56.53
North West	£64.91	£58.42	£51.98	£50.47
South East	£69.65	£64.59	£54.22	£53.92
South West	£70.32	£64.65	£72.43	£56.72
West Midlands	£70.93	£68.55	£63.02	£62.46
Yorkshire and the Humber	£60.51	£59.53	£51.00	£50.82

- 두 번째 표는 잉글랜드 내 다양한 아동군을 대상으로 한 보육 이용가능성(sufficiency)을 보여주며, 이는 최소 75%의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At least 75%	Total responses
Two-year-olds and under working parent entitlement (15 hours)	79%	123
Disadvantaged two-year-olds entitlement (15 hours)	80%	123
Two-year-olds and under without any funded entitlement	59%	123
Three- and four-year-old universal entitlement (15 hours)	82%	123
Three- and four-year-old working parent entitlement (30 hours)	80%	122
5- to 11-year-olds before school	55%	121
5- to 11-year-olds after school	51%	120
12- to 14-year-olds before school	14%	118
12- to 14-year-olds after school	13%	119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SEND	29%	120
Parents working full time	58%	120
Parents working atypical hours	22%	120
Families living in rural areas	44%	72

■ Coram Family and Childcare는 영국이 아동과 가정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특히 보육 및 유아기 교육(Early Years) 분야에 집중하여 가정의 삶에 단기적·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음.

2025년 03월 20일

출처 : <https://www.familyandchildcaretrust.org/childcare-entitlement-expansion-sees-childcare-costs-under-threes-england-half>

6. 아침돌봄 및 랩어라운드(등·하교 시간) 프로그램, 영국 아이돌보미 생존 위협: 전국 아이돌보미 5명 중 1명,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사업 손실 경험

■ PACEY 보도자료

- 2025년 3월, 잉글랜드 전역의 1,100명 이상의 차일드마인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 정부 주도의 ‘등·하교 시간 보육 프로그램(wraparound childcare)’과 ‘무료 아침돌봄 프로그램(breakfast club)’이 현장 차일드마인더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주요 결과 요약

- 랩어라운드 돌봄 서비스는 차일드마인더 사업 모델의 핵심임. 설문 응답자의 76%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 중 대다수는 아침과 방과후 돌봄을 모두 운영하고 있음. 아침돌봄 제공자 중 71%는 아침식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랩어라운드 보육 프로그램이 2024년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된 이후, 응답자의 19%는 고객을 잃었다고 답변, 기존 이용 가정이 학교 기반의 저렴하거나 무료인 프로그램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차일드마인더 소외 현실

- 랩어라운드 프로그램에 대해 76%가 알고 있음에도, 해당 내용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안내받은 사람은 25%’에 불과, 지자체마다 책임 담당자(wraparound lead)*를 두어야 하지만, 이의 실명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8%에 불과
- PACEY와 조력 단체들의 지속적인 로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지원금을 실제로 수령한 차일드마인더는 7명(1% 미만)’에 불과함. 이 7명의 수혜자는 각각 케임브리지셔, 도싯, 풀, 레드브리지, 쇼프셔, 사우샘프턴, 서리 지역에 분포해 있음.

■ 무료 아침돌봄 프로그램의 영향

- 2025년 4월부터 잉글랜드의 75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정부의 무료 아침돌봄 프로그램 역시 문제로 지적됨. 81%의 차일드마인더가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부터 안내받은 비율은 12%에 불과

■ 사업 영향 평가

- 4%만이 해당 프로그램이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45% 이상이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
- 19%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객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

■ 한 차일드마인더 벨(Bel, 왈섬 포리스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함.

- “코로나 이후 제 사업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조용해졌습니다. 학교 아침돌봄 서비스와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부모들이 직접 등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과후에도 일부 아이들은 학교

돌봄으로 옮겨갔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유아의 부모로부터 임시 돌봄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 PACEY의 목소리 - 헬렌 도노휴 대표 발언

- “이미 차일드마인더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문 결과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저희는 정부 지침에 차일드마인더 포함을 끌어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랩어라운드 및 아침돌봄 프로그램은 차일드마인더의 사업 기반이 되어야 하나, 지금은 사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차일드마인더의 채용과 유지 전략이 포함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 편집자 주

- 설문 기간: 2025년 3월 5일~17일, 응답자 수: 1,137명
- 랩어라운드 프로그램: 지자체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등·하교 시간 보육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국가 사업.
- 무료 아침돌봄 프로그램: 2025년 4월부터 750개 ‘선도학교’에서 시범 운영, 이후 전국 확대 예정. 학교는 자체 운영 또는 차일드마인더 등 민간 기관과 협력 가능.
- PACEY: PACEY(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는 1977년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육아 및 유아교육 전문가 협회임. 등록 차일드마인더의 절반 이상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고품질의 유아 돌봄과 교육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옹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2025년 5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연례 ‘차일드마인딩 주간(Childminding Week)’이 진행될 예정임.

2025년 03월 27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paceys-childminder-survey-wraparound-provision/>

7. 영국 정부, 학교 기반 유아반(school-based nursery) 대폭 확대- 수천 가구 보육비 경감 기대

- 영국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새로운 학교 기반 유아반(school-based nursery)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구체화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이번 조치의 첫 단계로 300개의 학교 기반 유아반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정부의 보육 서비스 확대 공약이 본격적으로 실현되었음.

■ 이번 정책은 부모들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었음.

- 정부가 도입한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는 연간 최대 7,500파운드(약 1,3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무료 아침식사 클럽 참여로 연간 추가 450파운드 까지 절감이 가능했음.

■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3,700만 파운드로 두 배 이상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었음. 특히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보편적 무료 아침식사 클럽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었음.

■ 이번에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유아반들은 정부의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에 따라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조기교육 제공과 학습 준비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음.

- 현 의회 임기 내 수천 개의 학교 기반 유아반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번 1단계에서는 엑서터(Exeter)부터 노스 타인사이드(North Tyneside)에 이르는 전국 각지에 총 6,000개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중 4,000여 개는 9월 말까지 개방될 예정이었음.

■ 신설 유아반의 상당수는 잉글랜드 북부 및 중부에 집중되었으며,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전략적 배치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학교 기반 보육 모델은 이미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포용적 교육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음.

■ 주요 인사 발언 요약 (1)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

- “조기교육 시스템 개선은 나의 최우선 과제였음.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가을부터 수천 명의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였으며, ‘변화를 위한 계획’에 따라 매년 수만 명의 아동이 학교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음.”

■ 주요 인사 발언 요약 (2) 알렉스 암스트롱(Alex Armstrong) 블룸폰틴 초등학교 교장

- “우리 지역의 유아반 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

내 공간을 유아들을 위한 연중무휴 보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었음. 학교 기반 유아반은 아이들과 가족에게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학습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음.”

■ 주요 인사 발언 요약 (3) 제이슨 엘섬(Jason Elsom) Parentkind 대표

- “보육비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음.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유아반과 초등학교를 오가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담스러웠음. 이번 조치는 많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환영할 만하였음.”

■ 주요 인사 발언 요약 (4) 폴 화이트먼(Paul Whiteman) NAHT 교장 노동조합 사무총장

- “정부는 유아기 교육을 최우선 투자 분야로 삼아야 했으며, 오늘 발표된 조치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었음. 학교는 조기교육 생태계의 중심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음.”

■ 주요 인사 발언 요약 (5) 펠리시티 질레스피(Felicity Gillespie) Kindred Squared 이사

- “16세 아동의 성취 격차 중 40%가 5세 이전에 형성되었음. 양질의 유아교육을 2~3년간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약 8개월 앞선 발달을 보였음. 이번 정부의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음.”

■ 정책적 배경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조기교육 프리미엄(Early Years Pupil Premium)’ 인상을 통해 취약 아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2026년까지 유아교육 예산을 총 80억 파운드 이상으로 증액할 계획을 세웠음.
- 아울러 학교 기반 유아교육은 일반 보육기관보다 포용성이 높은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적 형평성과 통합 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었음.
- 초등학교 내 통합된 조기교육 환경은 아동이 안정감 있는 공간에서 학습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로의 전이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공했음. 이러한 연속성은 가정과의 협력 강화 및 학습 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었음.

2025년 04월 02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parents-to-save-thousands-through-school-based-nursery-places>

8. 웨일스 보육 지원 서비스, 로그인 시스템 곧 변경 예정

■ 웨일스 정부의 보육 지원(Childcare Offer for Wales) 서비스를 통해 정부 지원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현재는 Government Gateway 계정을 사용하여 보육 지원 디지털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있었음.

- 그러나 곧 GOV.UK One Login이 새로운 로그인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Government Gateway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음.

■ 이에 따라 모든 보육 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계정을 GOV.UK One Login으로 전환해야 했음. 전환 절차는 간단하며, 웨일스 정부는 2025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전환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정부에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었음.

■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두면 전환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음. GOV.UK One Login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보육기관 교직원들이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어야 했음.

- 이는 GOV.UK One Login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건이었으며, 모든 교직원이 전환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개별 이메일 주소를 미리 확보해둘 것이 권장되었음.

■ 또한, 보육 지원 서비스에 연결된 Government Gateway 계정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계정을 GOV.UK One Login으로 개별 전환해야 했음.

-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여러 개의 Gateway 계정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계정별로 별도의 이메일 주소를 준비해야 했음. 이 역시 필수 요건에 해당하였음.

■ GOV.UK One Login 전환에 대한 안내는 보육 지원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될 예정이므로, 현재 등록된 이메일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음.

- 이메일에는 전환 방법뿐 아니라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었음.

- 등록된 이메일 주소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능하였음:

<https://www.gov.wales/providers-sign-in-your-childcare-offer-wales-account>

2025년 04월 03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wales-cco-login-change/>

9. 아이돌보미(childminder) 채용과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Coram PACEY 2025 웨비나 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과제

■ 행사 개요

- 2025년 아이돌보미(childminder) 주간을 맞아, Coram PACEY와 Childcare Works는 잉글랜드 내 지자체 대표를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함.
- 핵심 주제는 아이돌보미 인력의 채용, 유지,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식이었음.
- Barnsley, Cornwall, Cambridge, Norfolk 등 4개 지역 대표들이 성공 사례와 과제를 공유함.
- 140명 이상의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이돌보미 중심 행사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일부 아이돌보미들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를 청취하고, 지역별 정책 아이디어를 얻음.

■ 신규 아이돌보미 채용 전략

- 예비 아이돌보미에게 유연한 접근과 맞춤형 1:1 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함.
- Childminding Support Development Workers(전담 지원 인력)의 존재가 초기 등록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됨.
- 정부의 전국 창업 보조금은 종료되었으나, 일부 지자체는 자체 보조금을 제공해 초기 설립 및 교육 비용 지원을 지속함.
- 디지털 홍보(페이스북, 지역광고 등)와 개인 맞춤형 응답 방식이 효과적인 채용 도구로 작용함.

■ 기존 아이돌보미 유지 지원 방안

- 단순한 유입뿐 아니라, 경험 있는 아이돌보미의 이탈 방지 역시 핵심 과제로 논의됨.
- 주요 어려움 및 지자체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음:

■ 문서 업무·행정 부담

- Ofsted 점검, 행정요건에 대한 부담 해소 필요
- 정기 브리핑, 안내 자료, 전용 지원 네트워크 마련이 효과적임.

■ 고립감과 사기 저하

- 특히 농촌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혼자 일하며 고립을 느낌.
- 지자체는 온라인 네트워킹과 공동 이벤트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음.

■ 계획 허가 문제

- 건축 허가 및 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큼.
- 지자체가 지역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담 제공 가능

■ 친인척 아동 보육 관련 규정

- 등록된 아이돌보미가 친인척 아동에 대해 보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직업 지속성에 악영향을 미침.
- 2025년 9월 보육비 지원 확대 이후, 이 규정의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Coram PACEY는 해당 규정 개선을 강력히 요구 중임.

■ 정책 통합과 지자체 조정 역할

- 아이돌보미가 학교 중심 프로그램(방과후 돌봄, 아침식사 제공 등)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 지속에 위협이 됨.
- 지자체는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돌보미가 돌봄 수요의 공백을 메우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특히 학교가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와 전략적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패밀리 허브(Family Hubs)와 지역사회 연결

- 패밀리 허브를 통한 아이돌보미 인식 제고와 협업 활성화가 논의됨.
- 농촌 지역에서는 아이돌보미가 커뮤니티 내 중요한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아이돌보미의 허브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는 놀이 활동, 도서관 프로그램, 채용행사 등과 연계해 아이돌보미 활동을 확산할 수 있음.

■ SEND(특수교육 대상 아동) 관련 지원

- 아이돌보미는 유연하고 가정 중심의 환경을 제공해 SEND 아동에게 적합한 보육 옵션이 될 수 있음.
-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SEND 관련 아이돌보미를 지원함:
- 정기 회의를 통한 최신 정보 제공
- 지역 SENCO(특수교육 조정자)와의 네트워킹
- 포용보조금 및 교육 자원 접근 보장

■ Coram PACEY의 지자체 협력 모델

- Coram PACEY는 잉글랜드 지자체에 대한 정기 설문조사와 피드백 수집을 통해
- 아이돌보미 정책 운영 현황과 지원 수요를 모니터링함.
- 아이돌보미를 보육 전문직으로 홍보하고,
- 가정 기반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함.
- 이를 위해 서비스, 자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공함.

2025년 05월 15일

출처 : <https://www.pacey.org.uk/coram-paceys-local-authority-forum-childminding-week-2025/>

10. 영국 정부, 생후 9개월 이상 아동 대상 '주 30시간 무상보육' 신청 개시 : 2025년 9월부터 전국 확대... 저소득 가구의 근로 확대 및 교육기회 보장 기대

■ 주 30시간 보육지원 확대 시행

- 2025년 9월부터 잉글랜드 전역의 일하는 부모는 생후 9개월 이상 자녀에 대해 주당 최대 30시간의 무상 보육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기간은 2024년 5월 12일부터, 아동이 2024년 9월 1일 이전에 생후 9개월에 도달해야 함. 이로써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7,500의 보육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간 최대 £8,000 절약 가능

- 정부의 무료 아침식사 클럽 확대, 학교 교복 가격 상한제 도입 등과 결합 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연간 절감액은 최대 £8,000에 이를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2023년 9월 도입된 '생후 9개월 이상 아동 대상 주 15시간 보육 확대 정책'의 성과에 기반함.
- 현재까지 49만9천여 명의 아동이 보다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 중임.

■ 보육 확대를 위한 정부 대응

- 정부는 제도 확장 과정에서 구조적 과제와 공급 압력을 인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변화를 위한 계획(Plan for Change)'을 통해 대대적인 보육 인프라 확충에 착수함.
- 전년 대비 20억 파운드 추가 예산 확보, 수백 개의 학교 기반 보육시설 신설, 9월까지 3만5천 명의 신규 인력과 7만 개의 보육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함.

■ 보육 확대의 경제·사회적 효과

-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 확대는 기회의 장벽을 제거하고, 고용시장 참여와 경제성장에 기여함.
- 연간 £20,000~£40,000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20%는 기존 15시간 보육 지원 덕분에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었음.
- 9월 보육 시간 확대를 계획 중인 응답자 중 과반수(1,425명)가 근로시간 증가도 동시에 계획하고 있음. 이는 가정과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임.

■ 공급자와 지역사회의 기여

- 2023년 가을, 보육 신청자 6,337명 중 6,123명이 자리를 배정받는 등초기 정책은 성공적으로 운영됨.
- 이는 어린이집(Nurseries), 유아학교(Preschools), 아이돌보미(Childminders)의 헌신 덕분임.
- 정부는 보육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유아기 발달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함.

■ 보육의 발달 효과와 야외공간 활용 확대 검토

- 부모의 83%는 보육이 자녀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하다고 응답함.
- 정부는 실외 놀이가 아동의 문제해결력, 신체·정신 건강 향상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에 주목함.
- 현행 프레임워크는 야외놀이 제공을 요구하지만, 정원 산정 시 실내 공간만 공식 인정되는 점이 보육 확장에 제약이 되고 있음.
- 보육제공자의 70%는 실외공간을 정식 기준에 포함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실외공간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 실시

- 고품질 야외공간을 정원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원이나 놀이터 등을 유아기 학습경험의 구성 요소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
- 아이돌보미와 소규모 보육기관의 공간 활용 유연성 확대 방안

2025년 05월 12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applications-open-for-30-hours-funded-childcare-expansion>

11. Pulse Check 2025 – 유아기 교육·보육에 대한 대중 인식 조사

■ 조사 개요

- More in Common이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Coalition(EECC)을 대신해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들은 정부의 ‘학교 준비도(school readiness)’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아동에게 30시간의 유아기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음.
- 이번 조사는 노동당 정부 1주년을 맞아 발표된 EECC의 연례 보고서 Pulse Check 2025의 일부로, 보고서 및 온라인 패널 토론회를 통해 공개됨.

■ 주요 조사 결과

-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60%: 모든 아동에게 30시간 무상 유아교육·보육 제공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

- 5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44%: 정부가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
- 전체 응답자의 67%: 저소득층 아동 보육 기회 확대가 아동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
- 71%: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유아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
- ‘가족 허브(family hubs)’ 확장 계획을 포함한 정부의 Best Start in Life Strategy는 부모의 27%가 우선해야 한다고 답변

■ 정책적 의미와 전문가 발언 (1) 사라 로넌(Sarah Ronan), EECC 디렉터

- “학교 준비도는 아동 발달을 완벽히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초기 5년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아기 교육 접근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장 필요한 아동이 계속 소외될 것입니다.”
- “유아교육 접근성 확대는 취약 아동 발달, 부모 취업 지원, 아동 빈곤 감소에 모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개입 비용 절감, 건강·사회 성과 향상, 복지 의존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 정책적 의미와 전문가 발언 (2) 닉 해리슨(Nick Harrison), 서튼 트러스트 CEO

- “유아기는 발달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양질의 유아기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은 초등 입학 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인 잠재력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지만, 현재 많은 아동이 정부의 확대된 보육 시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현황과 과제

-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성취도 격차: 약 4.6개월
- 정부의 30시간 무상 보육 혜택을 받는 세 번째로 가난한 계층 가구 비율: 20%
- 취약 계층 아동의 ‘학교 준비 완료’ 비율: 51.5%
- 정부 목표: 2028년까지 전체 아동의 75%가 발달 목표 달성

2025년 07월 16일

출처 : <https://www.earlyeducationchildcare.org/pulse-check>

THE PRESS RELEASE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646ca30371a2ef6a657e9309/t/6876ccca33690d111b654f90/1752616138498/PULSE+CHECK+2025+PRESS+RELEASE.pdf>

12. Coram Family and Childcare – 2025년 방학 보육 실태조사

■ 조사 개요

- 2025년 7월 17일, Coram Family and Childcare는 영국 전역의 방학 기간 보육 비용과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제20차 연례 Holiday Childcare Survey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학 보육 비용은 지난 1년간 평균 4% 상승했으며, 6주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총 비용은 1,075파운드(주당 179파운드)에 달함.

■ 비용 현황

- 웨일스: 네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용, 주당 평균 209.60파운드(전년 대비 6% 상승)
- 아이돌보미(childminder): 주당 평균 234파운드(6주 약 1,400파운드 이상)로 방학 보육 클럽보다 비용이 높지만,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등 장시간 운영으로 부모에게 높은 유연성 제공

■ 이용 가능성

- 잉글랜드 내 지방정부 중 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SEND) 아동의 75% 이상을 위한 방학 보육 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곳은 9%뿐
- East Midlands, East of England, Inner London 지역은 SEND 아동을 위한 충분한 방학 보육 공급률 0%
- 공급이 가장 부족한 대상: 고학년 아동, 비정규 시간대 근무 부모 자녀, SEND 아동

■ Coram의 정책 제안

- 2026년 3월 이후에도 Holiday Activities and Food programme(HAF) 유지
- 학령기 보육 서비스를 유아기 교육 인력 전략에 포함
- 방학 보육 제공자를 위한 SEND 예산·훈련·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수 감소 방지 및 기존 인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주요 발언 헬렌 도노호(Helen Donohoe), Coram PACEY 대표

- “잉글랜드 보육 정책이 5세 미만 아동에 집중되지만, 방학 동안 많은 가정이 가정·일 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SEND 아동과 비정규 시간대 보육이 필요한 가정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방학 중 가장 유연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정부가 이들의 감소를 막고 지속적인 고품질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 현장 사례

- Eliri (웨일스 세레디지온): 형제·자매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고품질 보육 제공, 시골 지역 아동에게 안전하고 친숙한 공간 제공, 높은 수요로 대기 명단 상시 존재
- Carol (잉글랜드 벅슬리):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 연중 운영, 다양한 체험 활동·식사 제공, 긴급 보육 지원, 장기 이용 아동 성장 과정 함께함
- Vikkie (잉글랜드 옥스퍼드셔): 학령기 아동(최대 12세) 돌봄, 자유로운 놀이와 상상 공간 제공, 부모가 같은 성인에게 지속 돌봄 받는 안정감 강조
- Sue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셔): 1~11세 아동 돌봄, 요청 시 추가 시간 제공, 주제별 활동과 유아 학교 적응 지원, 학년 전환기 아동과 감정 나누는 그룹 활동 진행

2025년 07월 17일

출처 : <https://www.corampacey.org.uk/coram-family-and-childcares-holiday-childcare-survey-2025/>

13. 3·4세 아동 보육 지원금 수준, 아이돌보미와 가정에 압박 - Coram PACEY 경고

■ 잉글랜드에서 870명 이상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정부가 확대하는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하여 3·4세 아동 보육 지원금 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 이 연령대에 대한 지원금은 9개월~2세 아동 지원금보다 현저히 낮아, 많은 아이돌보미(childminders)들이 3, 4세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 자리를 제한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음.

■ 2024년 4월 무상보육 확대 이후 주요 결과

- 31%의 아이돌보미가 3, 4세 아동을 위한 무상보육 자리 수를 제한했음.
- 11%는 아예 제공을 중단했음.

■ 재정 부족 대응 조치

- 견학·외부활동 축소(40%)
- 무상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의 요금 인상(38%)
- 활동 축소(28%)
- 음식·기저귀·자외선 차단제 등 준비물을 가정에서 부담하도록 전환(23%)
-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확대(13%)
- 응답자의 46%는 이미 음식·기저귀·외부활동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25%는 이러한 비용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아이돌보미들은 친척 아동에 대해 보육 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음. 응답자의 18%는 친척 아동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고 답했으며, 친척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 중 49%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2025년 08월 29일

출처 : <https://www.corampacey.org.uk/funding-rates-for-three-and-four-year-olds-putting-childminders-and-families-under-pressure-warns-coram-pacey/>

14. CIW, 웨일즈 보육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간

■ 보고서 개요

- 2024-2025년도 수석검사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웨일즈 전역의 돌봄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 보고서는 목표 지향적 점검과 집행(inspection and enforcement)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여전히 남아 있는 부문 내 과제들도 함께 제시함.

■ 핵심 지표 및 성과

- 점검 결과: 2024-25년 점검 평가의 다수가 ' 좋음(good)' 또는 '우수(excellent)'로 평가되었으며, 보육 및 놀이 서비스의 경우 80%에 달함.
- 우선조치통지(Priority Action Notice): 집행 개입이 필요한 서비스가 감소하며, 발부 건수가 전년 대비 41% 줄어 373건으로 감소함.

- 선제 점검: 가족과 직원의 우려 제기로 인해 CIW는 총 239건의 점검을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함.
- 부문 과제: 인력 부족과 재정 압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적됨.

■ 가정보육제공자(Childminders) 동향

- 올해는 2023/2024년 대비 10명이 더 등록했으나, 147명이 등록을 취소함.
- 결과적으로 웨일즈 내 가정보육제공자 수는 10년 전보다 999명 감소함.
- 등록 취소 사유는 '직업 전환'과 '은퇴'가 대부분을 차지함.
- CIW는 일정 기간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중단한 가정보육제공자, 특히 타 직업에 종사 중인 인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이 중 다수가 최종적으로 등록을 취소함.
- 이러한 감소는 전체 가정보육제공자 수를 줄였으나, 웨일즈 내 실제 보육 서비스 가능 현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됨.
- 최근 몇 년 대비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정보육제공자들이 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확인됨.

■ 주요 발언 (1) 질리언 바라니스키(Gillian Baranski, CIW 수석검사관)

- “이번 연례보고서는 웨일즈 전역에서 돌봄 서비스 품질이 실제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재정 압박, 그리고 수요 증가가 여전히 서비스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서비스가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장 인력의 헌신과 돌봄 부문의 강점을 입증합니다.”

■ 주요 발언 (2) 클레어 프로스로(Claire Protheroe, PACEY Cymru 계약 및 프로젝트 책임자)

- “PACEY Cymru는 웨일즈 내 보육 및 놀이 서비스의 높은 품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번 보고서 발간을 환영합니다.
- 주요 발언 (1) 우리는 가정보육제공자 수 감소에 대한 CIW의 우려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일즈 정부, CIW, 지방정부 및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발표된 ‘가정보육제공자’ 독립 검토(Independent Review of Childminding) 이후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 조치와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를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출처 : <https://www.corampacey.org.uk/ciw-publishes-annual-report/>

15. 영국 네 지역의 유아교육 인력 정책 비교분석

■ 개요: 유아교육 인력의 전문화 촉구

- 'Early Education(영국 유아교육협회)'의 새로운 보고서는 영국 4개 구성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반에서 유아교육 종사자(EYW)의 자격 요건 강화, 적정 보수, 명확한 경력 경로 마련을 촉구함.
- 목적: 심각한 인력 채용 및 유지 위기 해결,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 보고서명: “그것은 로켓 과학이다(It IS Rocket Science)”

- 보고서의 전체 제목은 “유아교육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국 유아기 교육 인력은 로켓 과학이다”임.
- 주: ‘로켓 과학(Rocket Science)’은 영미권에서 ‘매우 복잡하고 고난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뜻하는 관용구로, 유아교육이 단순 돌봄이 아닌 고도의 전문직임을 강조하는 표현.

■ 주요 산출물 (2025년 11월 28일 발간)

- 요약 및 권고사항: 프로젝트 전체 요약.
- 정책 비교분석 요약(EYW4N): 영국 4개국의 정책 비교 결과 요약.
- 최종 보고서: 4개국 정책 비교분석 상세 결과.
- 중간 보고서: 2025년 8월 기발간.

■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

- 배경: 영국 전역의 유아교육 인력(EYW) 위기는 국가별로 다른 원인과 양상을 보임.
- 연구 내용:
 - 각 국가(4개국)의 정책 접근 방식 검토
 - 정부 개입 중 인력 역량/자격 향상 성공 사례 식별
 - 해외의 성공적 인력 전략 분석

- 방법론: 주요 이해관계자 80명 인터뷰, 포커스 그룹, 사례 연구 등

■ 주요 연구 질문

- 영국 4개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인력 문제는 무엇인가?
- 지난 10년 간 인력 채용, 유지, 지위, 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 해외의 성공적인 인력 정책 특징은 무엇인가?
- 단·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 조치는 무엇인가?

■ 기대 효과

- 영국 4개국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국제 사례와 비교 분석.
- 정책 결정자들에게 향후 유아교육 질적 향상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
- 자격, 보수, 근무조건, 형평성 개선을 위한 공적 담론 촉진

2025년 11월 27일

출처 : <https://early-education.org.uk/early-years-workforce-policy-in-the-four-uk-nations-a-comparative-analysis/>

16. 잉글랜드 아이돌보미(Childminder) 3,000명, 유아기 재정지원 제도 개편 촉구

■ 개요: 아이돌보미 재정 위기 설문조사

- 기관: Coram PACEY (육아 전문가 단체)
- 대상: 잉글랜드 아이돌보미 약 3,000명
- 결과: 대다수가 현재의 정부 지원 단가로는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응답.

■ 핵심 문제: 연령별 지원 단가의 불균형과 재정적 절벽

- 지원 단가 현황
 - 만 2세 미만: 시간당 11.54파운드
 - 만 2세: 8.53파운드
 - 만 3~4세: 6.12파운드 (현저히 낮음)

■ 구조적 문제

-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 낮은 3~4세 단가 손실을 다른 연령대에서 보전(cross-subsidize)하기 쉬움.
- 반면, 아이돌보미는 법적 비율(성인 1명당 아동 3명)이 엄격하여, 낮은 단가의 3~4세 아동을 돌볼 경우 수익 보전이 불가능함

■ 주요 설문 결과

- 단 4%만이 만 3~4세 지원 단가가 사업 유지에 충분하다고 응답 (2세 미만은 90%가 충분하다고 응답).
- 70%는 현행 재정지원 방식이 아이돌보미 운영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함.
- 90%는 어린이집과 구별되는 아이돌보미 전용 지원 단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장의 영향

- 수용 제한: 31%는 만 3~4세 아동 수용을 제한, 11%는 아예 중단함.
- 친인척 배제: 친인척 아동은 지원금 신청 불가 규정으로 인해, 조카나 손주를 돌보던 돌보미의 18%가 아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게 됨.

■ 현장의 목소리

- 노스요크셔 돌보미: “2년 넘게 돌본 아이가 3살이 되면(단가가 낮아져서) 더 이상 맡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내 생계를 위해 2세 미만 영아를 우선 받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 컴브리아 돌보미: “돌보던 아이들이 모두 3살이 되어 9월부터 수입이 7,000파운드나 줄어든다.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제언 (Ka Lai Brightley-Hodges, 대표)

- “아이가 3살이 되는 순간 아이돌보미가 직면하는 재정적 절벽(financial cliff)은 심각하다. 2세보다 3세 돌봄 비용이 시간당 2파운드나 덜 든다는 근거는 없다.”
- 어린이집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아이돌보미 특성을 반영한 국가적 전략 마련을 촉구함.

2025년 11월 18일

출처 : <https://www.corampacey.org.uk/almost-3000-childminders-call-for-early-years-funding-reform-in-england/>

17. 95억 파운드의 기록적인 유아기 교육 투자

■ 개요: 역대 최대 규모 재정 투자

- 영국 정부는 보육시설(nurseries)과 아이돌보미(childminders)가 가정에 필요한 보육 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0억 파운드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95억 파운드를 투자함.
- 이를 통해 내년부터 가정은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됨.

■ 주요 성과 및 지원 단가 인상

- 무상 보육 확대: 지난 9월 이후 50만 가구 이상이 '주당 30시간 무상 보육'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500파운드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림.
- 지원 단가 인상: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함.
 - 2세 미만 아동: 평균 4.3% 인상
 - 3~4세 아동: 약 5% 인상 (지자체 평균 4.95%)
 - 생후 9개월~2세 아동: 평균 4.3% 인상

■ 시스템 개혁 및 빈곤 완화 전략

- 재원 전달 구조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행정서비스를 위해 재원을 유보(Top-slicing)할 수 있는 비율을 3% 이하로 제한하여, 더 많은 재원이 일선 보육 현장에 직접 전달되도록 조치함.
- 급여 제한 해제: '두 자녀 급여 제한' 및 '보육 급여 상한선' 해제로,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수급 가구 중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736.06파운드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됨.
- 학교 기반 보육: 학교 기반 보육시설 확대 및 무료 아침식사 클럽(Breakfast Clubs) 운영을 통해 부모들은 연간 최대 450파운드를 절약하고 시간을 확보함.

■ 주요 인사 발언

(1)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

- “고품질 보육은 국가 재도약의 첫 번째 토대이며, 만 5세까지 학교 준비가 완료된 아동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95억 파운드라는 역대 최대 투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최선의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아동에 투자하고 가정을 지원하여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유아교육 학생 프리미엄, EYPP)

- ‘생애 최적의 출발(Best Start in Life)’ 전략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EYPP를 인상함.
- 2026~27년 계획: 시간당 1.15파운드로 15% 인상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655파운드 지원 효과).

■ 주요 관계자 반응

- 팀 맥리클런(NDNA 최고경영자):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단가 인상과 재원 전달 비율 97% 설정을 환영한다. 이는 인건비 부담이 큰 보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사라 로넌(유아교육 및 보육 연합 집행이사): “정부가 현장의 비용 부담 목소리를 경청한 점과 EYPP 인상을 환영한다. 이는 아동 발달과 부모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적 혜택으로 회수될 투자이다.”

2025년 12월 15일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cord-95-billion-early-years-investment>

18. 영국 교육부(DfE), 2025년 보육 및 유아교육 제공기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개요

- 교육부(DfE)는 잉글랜드 보육 현황을 담은 「2025년 보육 및 유아교육 제공기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
- 특히 아이돌보미(childminder)의 인구학적 특성, 자격 수준, 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함.

■ 제공기관 수 및 보육 규모 변화

- 전체 추이: 등록된 보육 제공기관 수는 전년 대비 1% 감소(53,600개)했으나, 2018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약 20% 감소함.
- 아이돌보미 감소세:
 - 전년 대비 5% 감소.
 - 2018년 대비 39% 급감 (총 14,200명 감소).
- 보육 제공 좌석 수: 전체 기관 수는 줄었으나, 제공 가능한 총 좌석 수는 1% 증가(1,620,800개)하여 기관의 대형화 추세를 시사함.

■ 아이돌보미 인력의 인구학적 특성

- 성별: 97%가 여성 (타 유형 기관 98%와 유사).
- 고령화 심화: 그룹 기반 기관에 비해 뚜렷한 고령화 특성을 보임.
 - 25세 미만: 1%
 - 50세 이상: 47% (절반에 육박)
- 고용: 약 19%만이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

■ 자격 수준 (전문성)

- 아이돌보미의 76%는 레벨 3(Level 3) 이상, 11%는 레벨 6(대졸 수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함.
- 이는 그룹 기반 기관(레벨 3 이상 79%)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이 낮지 않음을 보여줌.

■ 재정 구조 및 보육료

- 비용 구조: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본인 급여 포함). 식비는 11%.
- 보육료:
 - 아이돌보미는 2세 이하 아동에 대해 가장 낮은 시간당 보육료를 유지함.
 - 지난 12개월간 보육료를 인상한 비율은 41%로, 그룹 기반 기관(69%)보다 현저히 낮아 물가 압박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음을 시사함.

- 정부 지원 활용: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의 50%가 '면세 보육비 지원 제도(Tax-Free Childcare)'를 활용함 (그룹 기반은 31%).

2025년 12월 11일

출처 : <https://www.corampacey.org.uk/dfe-2025-data-childcare-and-early-years-provision/>

스웨덴

임신·출산지원		
1	출산 장려를 위한 장애물 제거 - 정부 조사 착수	160
일·가정 양립		
1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권리 확대	162
2	육아휴직 부모 자녀를 위한 새로운 등원시간 규정	164
양육지원		
1	국제 입양아 및 양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	165
2	위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맞춤형 부모지원체계 마련 지시 - 가족법·보건복지기관 연계로 위탁 전·중·후 부모관계 강화 추진	166
3	예산안에 포함된 개혁 추진을 위한 초기 임무 부여	167
유아교육·보육		
1	유럽 최고 수준의 스웨덴 유아교육 -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169
2	유아학교(preschool) 유아의 언어 발달 추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자료 개발 지시	170
3	많은 지자체, 유아학교 참여와 출석률 제고 노력 미흡	171
4	유아교육기관 교직원들의 스웨덴어 능력 강화 지침 도입 - 언어발달 격차 해소를 위한 교직원 언어 역량 기준 명확화	172
5	니브로(Nybro) 지자체 아동 수 감소, 최대 30명의 유치원 교사 해고 가능성	174
아동·청소년지원		
1	'창의적 학교' 예산 확대... 학생 10명 중 7명 문화예술 경험 기회 -2025년, 정부 예산 5천만 코로나 증액... 총 2억2천6백만 코로나 투입	175
2	10년제 의무교육 법안 확정	176
3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스크린 사용 습관 정착을 위한 전국 정보 캠페인 실시	177
4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성적착취 및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위한 명확한 보호 및 부모 지원체계구축	178
5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지원 강화	180
6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182
7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도입 검토 위한 조사위원회 발족	183
8	아동 권리에 대한 지식 강화 및 부모지원 체계의 발전	185
기타		
1	정부, 가족 상담 및 가족법 관련 지자체 업무 강화	187
2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성범죄 및 기타 중범죄 예방을 위한 신규 지원 자료 개발	188
3	수두 백신, 아동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	189
4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 생활습관 조사 기반 마련	191

❖ 임신·출산지원

1. 출산 장려를 위한 장애물 제거 - 정부 조사 착수

■ 배경

- 2025년 7월 1일,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 엘리사베트 스반테손(Elisabeth Svantesson) 재무부 장관, 니나 라르손(Nina Larsson) 양성평등부 장관은 Dagens Industri 기고문을 통해 출산율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가족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힘.
- 장관들은 “정치는 가족의 형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두려는 결정을 방해하는 장애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스웨덴 출산율 현황

-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며, 2024년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
- 현 추세 지속 시 다음 세대 인구는 부모 세대 대비 약 3분의 1 감소 전망
- 이는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가족 형성과 출산에 대한 관점

- 부모가 되는 시기와 방식은 개인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포함
- 아이 없이 살아가는 선택도 존중되어야 함
- 정부 역할은 모든 이가 안심하고 가족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약을 제거하는 것

■ 국제적 추세와 사회 인식 변화

- 출산율 저하는 스웨덴뿐 아니라 북유럽과 주요 경제대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
- 과거 경기 변동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약화됨
- 지정학적 불안, 기후변화, 전쟁, 삶의 의미 상실 등 복합적 요인이 젊은 세대의 미래 기대감 약화에 영향을 미침

■ 새로운 조사 계획

- 경제, 주거, 양성평등, 정신건강과 출산율의 관계 분석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인식과 디지털 기술 변화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생애 주기별 일·가정 양립 가능성, 가족 형성 환경 개선 방안 제안

■ 현행 정부 대응

- 육아휴직: 부모가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이중 육아휴직 일수를 두 배 확대
- 유아교육: 유치부(반, 학급) 아동 수 줄이기, 그룹 최대 인원 제한 검토
- 부모 교육: 부모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여성 건강: 여성 건강 연구 프로그램 신설, 분만 의료체계 강화, 산전·산후 진료 연계 개선
- 안전한 환경: 조직범죄 단속 강화, 단독주택 건설 장려
- 정신 건강: 외로움 해소 전략 수립·투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시민사회 활동 지원

■ 정책 방향성

- 정부는 더 많은 아동과 가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사회를 지향함.

2025년 07월 01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debattartiklar/2025/07/ta-bort-hinder-for-okat-barnafodande/>

❖ 일·가정 양립

1.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권리 확대

■ 정부는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에서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 권리 확대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번 조치를 위해 2026년도 예산에는 총 7,410만 크로나가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부모들이 학교, 유치원, 지자체의 사회복지 부서 등과 보다 원활히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정책의 배경

- 질병, 부상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부모는 학교·의료기관·사회서비스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는 아동의 부모는 학교나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나, 근무시간이 유연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발생함.
- 이에 정부와 스웨덴민주당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둔 부모가 보다 쉽게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VAB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주요 발언: 노인·사회보험부 장관 안나 텐예(Anna Tenje)

-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복지 부서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일입니다. VAB 권리 확대는 부모가 일과 가정을 보다 쉽게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아동이 보다 평등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합니다.”

■ 주요 발언: 사회부 장관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 “이제 부모들은 자녀 곁에 훨씬 더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VAB 권리 확대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교사에게 안내하거나, 질병·장애와 관련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정의 일상을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주요 발언: 스웨덴민주당 원내대표 린다 린드베리(Linda Lindberg)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둔 부모들이 꼭 필요할 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VAB 권리 확대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주요 발언: 자유당 원내대표 리나 노르드퀴스트(Lina Nordquist)

- “그동안 만성질환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는 아동을 둔 가족들의 여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별도의 휴가를 내거나 무급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는 아동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소외나 범죄 위험에 직면한 가정은 자녀와 함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 확대 적용 3가지 상황

- 확대된 VAB 제도는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적용됨.
 -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자가 치료 필요를 설명하거나 지도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경우 (예: 당뇨병 아동의 관리 지도 등)
 - 아동의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회의에 부모가 참석해야 하는 경우
 - 아동의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전 평가나 조사를 실시할 때 부모가 이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 예산 및 시행 계획

-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임시 부모수당 지출 증가분으로 5,500만 크로나, 보험청 행정비용 증가분으로 1,910만 크로나를 각각 배정함.
- 법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와 스웨덴민주당 간 합의에 근거함.
-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임시 부모수당이 강화됨에 따라 매년 5,500만 크로나씩 지출이 증가하고, 보험청 행정비용은 2026년 1,910만 크로나, 2027·2028년에는 각각 1,860만 크로나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09월 21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9/utokad-ratt-till-vab/>

2. 육아휴직 부모 자녀를 위한 새로운 등원시간 규정

■ 육아휴직 부모의 자녀를 위한 새로운 유치원 등원시간 규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아동·교육위원회는 어린 형제자매로 인해 부모가 육아휴직 중인 가정의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함.

■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1) 만 3세 미만 아동

- 현행과 동일: 주 최대 15시간 유치원 이용
- 이용료: 유치원 및 아동보육 서비스 이용료 상한제에 따른 지불
- 방학 중 등원: 가능
- 등원시간 선택권은 확대된 유연 시간 규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2) 만 3세 이상 아동

- 아동은 주 15시간 또는 20시간 중 선택 가능
 - 주 15시간 선택 시: 이용료 무상, 방학 중 등원 불가, 기존 제도와 동일
 - 주 20시간 선택 시: 이용료는 상한제에 따른 이용료 지불, 방학 중 등원 가능, 이용 시간이 늘어난 대신 일부 비용 부담 발생

■ 더 유연한 등원시간 운영

- 2026년 3월 1일부터 등원시간을 가족 상황에 맞게 더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조정 방식: 보호자와 협의하여 유치원 원장이 최종 결정
-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용 아동, 주 20시간 이용 아동 모두

■ 향후 안내

- 협회는 새 규정에 맞춘 운영 방식을 준비 중임. 보호자들은 2026년 3월 1일 이전, 각 유치원으로 부터 상세 안내를 추가로 받게 될 예정임.

2025년 11월 05일

출처 : <https://www.ostersund.se/om-webbplatsen/nyhetsarkiv/nyhetsarkiv/2025-11-05-nytt-beslut-om-vistelsetider-for-barn-till-foralralediga-mer-flexibla-vistelsetider-och-mojlighet-till-20-timmar-vecka>

☞ 양육지원

1. 국제 입양아 및 양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

■ 스웨덴 정부는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MFoF)에 국제 입양아와 양부모를 위한 지원과 상담을 강화하는 임무를 부여함.

■ 스웨덴의 국제 입양 절차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또는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많은 입양인과 가족들에게 불안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과 국제 입양과 관련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김.
- 이 지원은 해외입양아에 대한 출신지 검색 지원이나 입양 관련된 심리적 상담지원을 포함함.

■ 사회복지부 장관 카밀라 발테르손 그린발은 다음과 같이 말함. “정부는 모든 국제 입양이 법적 안정성과 윤리성을 갖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 아이의 최선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여야 한다. 입양위원회가 스웨덴의 입양 절차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입양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입양인과 양부모에게 적절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입양위원회는 스웨덴의 국제 입양 절차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입양아 지원 방안, 아동 권리 보호 및 법적 안정성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위원회는 2025년 6월 2일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임.

■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은 기존에도 입양과 관련된 심리 상담 및 출신국 찾기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정부는 입양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기 전까지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의 지원이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의 임무

- 국제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관련 문의에 대한 국가적 연락 지점 역할 수행
- 출신국 찾기(생부모 찾기) 과정에서의 국제 입양아에 대한 지원
- 입양아 및 양부모를 위한 입양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제공
-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대상자에게 홍보

■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은 이번 업무 수행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최대 980만 크로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법 및 양육 지원청은 2025년 5월 2일과 2026년 2월 27일에 중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함.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늦어도 2027년 2월 2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함.

2025년 01월 2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1/forstarkt-stod-till-internationellt-adopterade-och-adoptivforaldrar/>

2. 위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맞춤형 부모지원체계 마련 지시 - 가족법·보건복지 기관 연계로 위탁 전·중·후 부모관계 강화 추진

■ 위탁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

- 스웨덴 정부는 위탁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심리적·실질적 지원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함.
- 이에 따라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Föräldraskapsstödsmyndigheten)과 보건복지위원회(Socialstyrelsen)에 위탁가정 부모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공식 지시함.

■ 주요 장관 발언: 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복지부 장관

- “부모 역할은 아동의 안정과 복지에 핵심적이며, 위탁 자녀를 둔 부모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부모도 외로운 상황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 주요 장관 발언: 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

- “자녀를 위탁 보호로 보내는 상황은 가족에게 큰 도전과 변화를 초래한다. 정부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아동의 삶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 부모 지원 강화 과제의 범위

- 과제는 자녀가 위탁 보호를 받기 전, 보호 중, 보호 이후 전 단계에 걸쳐 부모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 마련을 포함함.
- 해당 대상은 위탁가정뿐 아니라 청소년구급시설에 배치된 아동의 부모도 포함됨.

■ 분석 및 개선 방향

-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과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제공 중인 부모지원 서비스(예: 외래 진료 개입 포함)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 부모의 실제 요구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제공 형태가 무엇인지 분석하게 됨.
- 향후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됨.

■ 예산 및 추진 일정

- 본 과제 수행을 위해 가족법 및 부모지원청과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2025년도 예산으로 200만 스웨덴 크로나(SEK)를 배정함.
- 분석 및 개선안 제출은 지정된 일정 내에 진행될 예정임.

2025년 05월 2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starkt-foraldraskapsstod-till-foraldrar-med-barn-placerade-utanfor-hemmet/>

3. 예산안에 포함된 개혁 추진을 위한 초기 임무 부여

■ 개요

- 스웨덴 정부는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 에게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주요 사회정책 개혁의 시행 준비를 위한 초기 임무(startuppdrag) 를 공식 부여함.
- 이는 제안된 개혁이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기술·재정적 준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핵심 과제 (1) 취약 아동가정을 위한 주택보조금 상향 준비

- 2026년 예산안에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비 한도를 현실화하여 주택보조금(Bostadsbidrag) 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됨.
-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아동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 시행 예정일: 2026년 1월 1일.

■ 핵심 과제 (2) 부모의 자녀 간호휴가(VAB) 신청 기간 단축

- 부모가 아동 질병 시 신청하는 임시 육아수당(VAB, vård av barn)의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 → 30일로 단축하는 개혁안이 포함됨.
- 사회보험청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약 8억 크로나(SEK) 규모의 잘못된 급여 지급이 발생하며, 그중 상당 부분이 의도적 부정수급에 해당함.
- 신청 기간 단축을 통해 부정지급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시행 예정일: 2026년 4월 1일.

■ 관계자 발언: Anna Tenje (노인·사회보장부 장관, Minister for Older People and Social Insurance)

- “이러한 개혁이 실제로 시행될 때, 사회보험청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초기 임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가정을 지원하고, 국민이 ‘정확히, 그리고 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행정 및 제도적 조치

- 정부는 관련 규제 명령서(regleringsbrev)를 수정하여, 사회보험청이 필요한 인력·시스템·지침을 사전 준비하도록 공식 지시함.
- 이는 향후 예산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행정 역량 구축(implementation readiness)을 보장하려는 예산 운영 전략의 일환임.

■ 정책적 의미

- 이번 임무 부여는 사회보장 제도의 정확성, 신뢰성, 접근성 강화를 위한 2026년 예산 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됨.
- 스웨덴 정부는 특히 아동빈곤 완화·부정수급 방지·행정 효율화를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세 축으로 명시함.

2025년 10월 23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10/startupdrag-for-reformer-i-budgetpropositionen/>

❖ 유아교육·보육

1. 유럽 최고 수준의 스웨덴 유아교육 - 지속적인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서 스웨덴이 유아교육의 질과 접근성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 스웨덴 정부는 유아교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모든 아동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은 다음과 같이 말함. “스웨덴의 유아교육이 유럽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이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너무 큰 유아반 규모를 줄이고, 모든 유아교육 기관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유능한 교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또한, 스웨덴어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적절한 언어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유아교육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의무적인 언어교육 유아원’ 도입 및 유아반의 적절한 규모 유지와 교직원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됨.

■ 또한, 정부는 2025년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보조금 9억 크로나(약1,500억 원)를 증액함. 이 보조금은 교직원 추가 채용, 유치원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의 역량 개발, 유아반 규모 축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번 재정 지원은 약 1,500명의 유치원 교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임.

■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아이슬란드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아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로 평가됨.

-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스웨덴과 덴마크는 유아교육에서 디지털 도구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언급됨.

2025년 01월 3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1/svensk-forskola-i-europeisk-toppklass-enligt-ny-studie--regeringens-atgarder-for-fortsatt-hog-kvalitet/>

2. 유아학교(preschool) 유아의 언어 발달 추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자료 개발 지시

- 스웨덴 정부는 유아의 언어 능력이 학교생활의 성공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인식 아래, 유아학교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언어 발달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적·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관련 자료 개발을 공식 지시하였음.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Lotta Edholm)은 현재 스웨덴이 직면한 ‘읽기 위기’를 언급하며, “학생 4명 중 1명이 제대로 읽지 못하며, 학생 집단 간 학력 격차도 심각하다”고 지적함. 이어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아동이 조기에 스웨덴어를 접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문화부 장관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역시, “읽기와 쓰기 능력은 스웨덴이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역량이며, 동시에 개인이 삶에서 성공하고 민주주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며 본 조치의 의미를 덧붙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유아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독서 지침을 강화하고, 유아학교 환경을 가급적 스크린 프리(screen-free) 형태로 운영할 것을 권장함.
 - 이번에 교육청이 개발하게 될 지원 자료의 핵심 목적은, 유아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언어 발달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관찰·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마련하는 데 있음.
- 이러한 언어 추적 지원 자료는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서, 아동이 조기에 추가 자극이나 지원이 필요한지를 식별하고, 향후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교육 준비도(학교 준비도)를 높이는 데도 활용될 예정임.
- 기독교민주당 교육정책 대변인 마티아스 벵트손(Mathias Bengtsson)은 “언어는 단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열쇠”라며, “유아학교 단계부터 아동에게 충분한 언어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형성의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하였음.
- 본 과업은 2026년 6월 5일까지 결과 보고가 완료될 예정이며, 스웨덴의 국가 수준 유아교육 정책이 언어능력 기반의 교육형평성 강화와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을 향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됨.

2025년 04월 11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skolverket-far-i-uppdrag-att-ta-fram-stod-for-att-folja-upp-barns-sprakutveckling-i-forskolan/>

3. 많은 지자체, 유아학교 참여와 출석률 제고 노력 미흡

■ 유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스웨덴 학교감사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장, 운영주체, 지방자치단체가 유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수행한 활동을 점검함.
- 조사 결과, 유아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해당 지역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더 발전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유아학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 중임.

■ 지자체의 책임과 현장의 미비점

- 지자체는 더 많은 아동이 유아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이미 등록된 아동의 실제 출석률 제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그러나 교육감실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 확대나 출석률 제고에 대해 종합적 접근이 부족하고, 많은 지자체와 기관들의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 장관 발언: 로타 에드홀름(Lotta Edholm) 교육부 장관

- “유아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가정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언어 발달에 필요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참여 격차 문제

- 유아교육을 받은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더 높고, 발달 격차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
- 특히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동에게 유아교육은 언어 능력 향상과 사회 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남.
-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가정이나 외국 배경을 가진 아동일수록 유치원 참여율이 낮음. 이는 언어적·교육적 격차 심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됨.

■ '의무 언어 유아교육' 제도 도입 검토

-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스웨덴어 노출이 부족하고 언어 발달 지체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 언어 유아교육'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함.
- 해당 조사는 단지 의무화 여부에 그치지 않고, 스웨덴의 유아학교가 양질의 동등한 교육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임.
- 검토 대상에는 학급 규모, 교사-아동 비율, 교직원의 언어 능력 요건 등 주요 교육 조건에 대한 규제 방안이 포함됨.

■ 향후 일정

- 이번 특별 조사의 결과는 2025년 12월 18일까지 보고될 예정임.
-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법제화 가능성도 모색할 계획임.

2025년 05월 15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5/manga-kommuner-behover-utveckla-arbetet-for-att-oka-barns-deltagande-och-narvaro-i-forskolan/>

4.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스웨덴어 능력 강화 지침 도입 - 언어발달 격차 해소를 위한 교직원 언어 역량 기준 명확화

■ 개요

-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스웨덴어 습득을 유아기부터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아교육 교직원의 스웨덴어 구사 능력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정책을 추진했음.
- 이는 특히 스웨덴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동이 많은 지역에서 아동 간 언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조치로, 정부는 스웨덴 교육청(Skolverket)에 관련 지침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 교육청은 이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및 리더십에 관한 새로운 일반 지침 초안을 제시했음.

■ 주요 내용 (1) 유아교육기관의 언어 환경 개선 필요성 인식

- 유아기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고려할 때, 모든 아동이 스웨덴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교직원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함.

- 현실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직원이 스웨덴어 능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언어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내용 (2) 채용 및 역량 관리 지침 명시

- 교육청은 새로운 일반 지침 초안을 통해, 운영기관은 교직원 채용 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음.
- 또한 원장 및 운영기관은 교직원의 언어 역량을 포함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특히, 스웨덴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정의 아동에게 질 높은 언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의 스웨덴어 능력 확보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음.

■ 교육부 장관 발언: 스웨덴 교육부 장관 Lotta Edholm

- “모든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스웨덴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유창한 스웨덴어 구사 능력을 갖춘 유치원 교직원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유아교육기관은 아동의 언어 능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가정에서 스웨덴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이번 새로운 지침은 유아교육기관이 교직원의 언어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에게 효과적인 언어 발달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시행 계획

- 이번 일반 지침은 2025년 여름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올해 가을 중으로 시행될 계획임.
- 교육청은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 중심의 실천 안내 자료도 함께 발표할 예정임.

2025년 06월 12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nu-fortydligas-vikten-av-forskolepersonale-ns-kunskaper-i-svenska-spraket/>

5. 니브로(Nybro) 지자체 아동 수 감소, 최대 30명의 유치원 교사 해고 가능성

■ 아동 수 감소 및 구조조정 배경

- Nybro 지자체는 최근 출생아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유아교육체계 조정 필요성 증가
- 지자체는 해고 예고 준비에 착수, 노동조합과의 협상도 시작됨
- 발표는 수요일 저녁 온라인 정보회의에서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달됨

■ 지자체의 재정 및 시설 현황

- Nybro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 왔으며, 지역 신문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약 600석의 초과 좌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과잉 수용 문제가 있다고 전함.

■ 출생아 감소 통계

- 통계청(SCB)에 따르면, 니브로 지역 연평균 출생아 수는 약 210명에서 2025년에는 약 15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유치원 폐쇄 및 추가 조치

- 현재 Nybro에는 12개의 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올해 초에는 니브로의 Gazellen 및 Blaklockan 유치원에서 9개 학급이 폐쇄되었고, Flygsfors 유치원도 문을 닫음.
-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로 더 많은 유치원학급을 폐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짐.

2025년 11월 13일

출처 : <https://www.svt.se/nyheter/lokalt/smaland/farre-barn-i-nybro-kommun-upp-till-30-forskollarare-kan-fa-ga>

❖ 아동·청소년지원

1. '창의적 학교' 예산 확대... 학생 10명 중 7명 문화예술 경험 기회 -2025년, 정부 예산 5천만 크로나 증액... 총 2억2천6백만 크로나 투입

■ 2025년 3월 10일(월), 스웨덴 문화부 장관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는 니네스함(Nynäshamn)의 한 학교를 방문하여 '창의적 학교(Creative School)' 지원 사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함.

- 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표현을 경험하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릴리에스트란드 장관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 "모든 아이들은 문화를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전문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예술 경험이야말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창의적 학교'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 '창의적 학교' 사업이란?

- 스웨덴 정부는 2008년부터 '창의적 학교' 사업을 통해 유치부부터 초·중등학교까지의 교육 현장에 예술 및 문화 활동을 통합해왔음. 학교 운영 주체들은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문 예술가들과의 협업, 다양한 문화 표현 체험, 창작 활동을 경험하게 됨.
- 약 70%의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예산의 약 85%는 직접적으로 예술가 및 문화 창작자에게 지급되어, 예술계에도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

■ 2025년 예산 확대

- 정부는 2025년 창의적 학교 예산을 5천만 크로나(SEK) 증액
- 총 예산은 2억2천6백만 크로나(SEK 226 million)로 확대됨. 예산 증액은 더 많은 학교와 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이러한 정책은 스웨덴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인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맞닿아 있으며, 예술교육의 공공성, 접근성,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국가적 투자로 평가받고 있음.

2025년 01월 13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5/01/13/fact-sheet-hhs-secretary-becerras-postpartum-maternal-health-collaborative-effectively-mobilizes-state-local-partnerships-improve-outcomes.html>

2. 10년제 의무교육 법안 확정

■ 스웨덴 정부, 초중등학교 10년제 전환 추진 결정

- 스웨덴 정부는 기존 9년제 초중등학교를 10년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이번 개편은 현재의 ‘유치부 학년(Förskoleklass)’을 폐지하고, 이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정식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 학습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학제 개편의 주요 내용

- 10년제 초중등학교 도입: 새로운 학제에서는 기존의 9년제 초중등교육(Grundskola)이 10년으로 확장되며, 유치부 학년은 폐지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대체됨.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의 마지막 학년은 10학년이 됨.
- 적용 범위 확대: 이번 변경은 일반 초중등학교뿐 아니라, 특수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사미(Sámi)학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기초학습 집중 강화: 새로운 1학년은 초중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교과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특히 읽기·쓰기·수학의 기초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 학생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은 조정될 예정임.
- 학습 연속성 확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구조적 전환 단계를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연속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당국자의 발언 (1) 로타 에드홀름(Lotta Edholm) 교육부 장관

- “이번 결정으로 10년제 초중등학교 도입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기초학습 능력에 대한 집중은 스웨덴의 읽기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정책 당국자의 발언 (2) 파리사 릴리에스트란드(Parisa Liljestrand) 문화부 장관

- “이번 변화는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된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읽기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창의성, 어휘력, 평생 학습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

- 이번 개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교육의 형평성 강화임.
- 현재 스웨덴의 유치부 학년 운영은 지역별 편차가 커, 어떤 지역은 초등학교 방식으로, 또 어떤 지역은 유치원 방식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음. 10년제 전환은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초중등학교에서도 기존에는 별도의 유치부 학년이 없었으나, 향후에는 동일한 10년제 체계에 따라 보다 일관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임.

■ 정치권 반응 (1) 스웨덴 민주당 교육정책 대변인 패트릭 리슬로우

- “유치부 학년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통합하는 것은 기초 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명확한 교육 구조는 이후 학년에서의 학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정치권 반응 (2) 기독교민주당 교육정책 대변인 마티아스 벵트손

- “현재 유치부 학년은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동이 동일하게 기초학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 중심 교육을 지지합니다.”

■ 이 개편안은 스웨덴 정부와 스웨덴민주당 간 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8년 가을부터 시행될 계획임.

2025년 03월 14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3/regeringen-har-beslutat-om-propositionen-en-tioarig-grundskola/>

3.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스크린 사용 습관 정착을 위한 전국 정보 캠페인 실시

■ 스웨덴 정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주제로 한 전국 단위 정보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공공보건청(Public Health Agency)에 공식 지시하였음.

- 이번 조치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균형 잡힌 미디어 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됨.

■ 사회부 장관 야콥 포르스스메드(Jakob Forssmed)는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과잉 사용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요소이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그는 이어 “부모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실질적인 대응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마련된 디지털 미디어 사용 권고사항을 모든 관련자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힘.

■ 공공보건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권고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청소년 가정에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령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임.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제한 중심이 아니라,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자율성과 보호가 조화되도록 설계된 실천 중심 지침임.

■ 정부는 이번 정보 캠페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EK 1천만 크로나(한화 약 12억 원 상당)의 예산을 2025년 회계연도에 배정하였으며, 공공보건청은 이를 바탕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 전반에 디지털 균형 사용에 대한 지식 전달과 인식 개선 활동을 수행할 계획임.

■ 이번 캠페인은 스웨덴 미디어청(Mediemyndigheten)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되며,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시민 역량 증진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웰빙 보장을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5년 04월 14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4/informationskampanj-med-fokus-pa-halsosamma-skarmvanor-hos-barn-och-unga/>

4.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성적착취 및 가정폭력 노출 아동을 위한 명확한 보호 및 부모 지원체계구축

■ 정책 배경

- 스웨덴 정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이 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했음.
-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적 착취의 유형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자녀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아동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공식적인 과제를 부여했음.

■ 주요 조치 (1) 아동인권감찰관에게 폭력 노출 아동을 위한 지원 경로 조사 지시

- 가정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성매매 및 인신매매 포함)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연락 경로 및 지원 체계를 파악하도록 아동인권감찰관에게 과제를 부여했음.
- 이 과제에는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방식의 지원 경로가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절차도 포함되었음.
- 1차 중간보고는 2026년 3월 13일, 최종보고는 2027년 6월 1일까지 제출될 예정임.

■ 주요 조치 (2) 가족법 및 양육지원청에게 부모 지원체계 개발 지시

- 부모가 자녀의 폭력 피해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상황별 부모지원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음.
- 이 과제는 파트너 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정보제공,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함.
- 해당 과제는 2027년 9월 27일까지 완료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되었음.

■ 장관 발언 (1) 성평등 및 고용장관 Nina Larsson

-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경로가 필요하다. 부모는 중요한 보호자이지만, 이들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관 발언 (2) 사회복지부 장관 Camilla Waltersson Grönvall

-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밝은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확고한 지원체계를 통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아동 개인의 조건에 맞는 개별화된 지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했음.

■ 정책적 함의

- 디지털 환경 속 성적 착취 대응 강화: 인터넷,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발생하는 비접촉형 성적 착취 유형(사진 전송, 강요된 대화, '슈가데이팅' 등)에 대한 대응을 제도화했음.
- 부모 대상 예방교육의 제도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피해 인지 전 단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려 했음.
-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경험을 수집하여 지원 체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유도했음.
-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통한 정책 안정성 확보: 두 개 기관에 명확한 과제와 제출 시한을 부여함으로써, 단발성 조치가 아닌 구조적 개혁 기반을 마련했음.

2025년 06월 1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6/regeringen-starker-stodet-till-valdsutsatta-barn/>

5.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의 국가적 관리·지원 강화

■ 배경

- 스웨덴 정부는 사회복지 시스템 내 아동·청소년이 각자의 개별적 필요에 맞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음.
- 이번 조사의 핵심 목표는 친가정 외 위탁 시 조치가 보다 목적에 부합하고, 개인별 필요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방사회복지위원회가 위탁 결정 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체계를 설계·조직하는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인사 발언 (1) 카밀라 발테르손 그룬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복지부 장관

-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필요한 도움과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가 개별적 필요를 더 잘 충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인사 발언 (2)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

- “특히 가정 외 위탁 시의 안정성 보장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개인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주요 인사 발언 (3) 제시카 스테그루드(Jessica Stegrud) 스웨덴민주당 사회정책 대변인

- “학대 피해 아동이 신속히 적절한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배치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 관리 강화는 아동이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합니다.”

■ 주요 인사 발언 (4) 헬레네 오덴웅(Helene Odenjung) 자유당 아동권리정책 대변인

- “아동의 자유와 미래가 위협받을 때 국가는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모든 아동은 거주 지자체와 관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사회적 배경과 문제 인식

- 사회 변화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 서비스 수요가 확대
- 범죄 조직의 미성년 포섭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
- 중범죄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

■ 국가 지원 기능과 맞춤형 돌봄 체계

- 아동의 개별적 필요에 부합하는 위탁 연계를 위한 국가 지원 기능 강화 필요
- 각 아동을 중심으로 한 조기 개입, 조율된 고품질 돌봄 제공이 범죄 예방과 조기 차단에 필수
- 주요 검토 과제:
 - 국가 차원의 위탁 지원 기능 마련
 - 아동·청소년 대상 개별 맞춤형 계획 수립 강화

■ 현재의 문제점

- 일부 아동·청소년은 돌봄 계획의 일관성 부족, 본인 의견 미반영 문제를 경험
-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이 돌봄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

■ 향후 일정

- 국가지원 기능 관련 보고서는 2026년 10월 16일 제출 예정

2025년 07월 17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7/starkt-statlig-styrning-och-stod-inom-sociala-barn--och-ungdomsvarden/>

6.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2025년 8월 26일, 스웨덴 정부는 2025-2026년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합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국가회계청에 총 1억7천2백만 크로나(SEK)를 여러 지역에 지급하도록 위임했음. 이번 자금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달성된 성과를 기준으로 배분됨.

■ 주요인사 발언: 사회부 장관 야코브 포스스메드(Jakob Forssmed)

- “아이들과 청소년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을 구체적인 성과와 연계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급 및 배분 기준

- 국가회계청은 2025년 8월 30일까지 총 1억7천2백만 크로나를 해당 지역에 지급할 예정임. 이번 지급은 올해 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합 간에 체결된 합의의 일환으로, 2025-2026년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합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각 지역이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급은 합의에서 정한 성과 기준에 따라 배분되며, 특히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의 30일 간 진료 보장 기간 동안 초진 실시, 조기 진단 착수, 치료 개시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었음.

■ 정부의 재정 배정

- 정부는 2025년 본 합의에 총 10억 크로나를 배정했으며, 이미 2월에 1억5천만 크로나를 각 지역에 지급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발 사업에 사용되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합에는 개발 지원을 위해 1천만 크로나가 배정되었음.

- 이번 투자는 전국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임.

■ 2025-2026년 합의 개요

- 아동·청소년 정신과의 대기 시간 단축과 진료 대기열 해소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핵심 우선 과제임.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연합은 2025-2026년 동안 아동·청소년 정신과 접근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음.
- 정부는 총 10억 크로나를 배정하여 각 지역이 효율성·생산성·수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더욱 신속하게 진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025년 08월 26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8/medel-for-att-oka-tillgangligheten-till-barn--och-ungdomspsykiatri/>

7.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도입 검토 위한 조사위원회 발족

■ 조사위원회 발족 배경

- 스웨덴 정부는 아동의 건강·정신복지 및 디지털 환경 속 안전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 제한(age limit) 도입 가능성을 분석할 특별 조사관(Special Investigator)을 임명함.
- 이번 조사는 아동이 유해 콘텐츠·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선행 단계임.

■ 조사 임무 및 일정

- 임명된 조사관: Lisa Englund Krafft, 스웨덴 최고행정법원 행정국장.
- 임무: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거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법적·기술적 방안을 분석.
- 중간보고서 제출: 2026년 6월 12일
- 최종보고서 제출: 2026년 11월 14일

■ 주요 관계자 발언 (1) Jakob Forssmed (보건사회부 장관)

-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시간과 현실을 장악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해 콘텐츠와 중독적 알고리즘을 억제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제도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실질적 연령 제한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 주요 관계자 발언 (2) Camilla Waltersson Grönvall (사회복지부 장관)

- “아이들은 디지털 세계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이 부적절한 콘텐츠나 부정적 사용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주요 관계자 발언 (3) Simona Mohamsson (교육·통합부 장관)

- “중학생들은 하루 평균 6.5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악화, 수면 부족, 학업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령 제한 도입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 참고 데이터 및 배경

- 스웨덴 미디어청(Statens medieråd)의 「Ungar & Medier 2023」 결과, 청소년의 약 50%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
- 9-12세 아동의 15%가 전쟁·사고 등 폭력적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본 경험이 있음.
- 일부 플랫폼에서는 음란물 접근이 용이하고, 청소년이 범죄조직에 포섭될 위험도 지적됨.

■ 정책 맥락

- 정부는 ‘디지털 안전 및 청소년 정신건강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추진함.
- 조사는 연령제한 외에도, 플랫폼 책임·알고리즘 투명성·보호 장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임.

2025년 10월 1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10/regeringen-tillsatter-utredning-om-aldersgrans-for-sociala-medier/>

8. 아동 권리에 대한 지식 강화 및 부모지원 체계의 발전

■ 개요: 아동 권리 확산 및 부모 지원

-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식을 확산하고 경험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부모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를 주(州) 행정청(County Administrative Boards)에 지속적으로 부여함.
- 주 행정청은 사회서비스, 학교, 보건·의료, 가족법 및 부모지원 등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아동 권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에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 간의 경험 교류를 지원해야 함.

■ 주요 인사 발언

(1) 카밀라 발테르손 그뢴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 사회서비스부 장관

- 아동의 권리는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하고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아동에 대한 폭력과 아동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기적인 부모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웨덴의 모든 아동에게 더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2) 야코브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

- “부모가 아동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부모는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지원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 역할을 최선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 세부 추진 과제

(1) 아동 권리에 대한 지식 강화

- 핵심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고,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그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권리.
- 수행 방식: 아동 옴부즈맨과 협력하고, 스웨덴 지자체·지역협의회와의 대화를 통해 수행.

- 총괄: 달라르나(Dalarna)주 행정청이 본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결과는 2027년 3월 1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함.

(2) 공공행정 종사자를 위한 교육 활동

- 내용: 읊살라 대학교(Uppsala University)는 국가기관, 지자체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권리에 관한 '업무 맞춤형·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일정: 결과는 2027년 3월 2일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함.

(3) 발전된 부모지원 체계 (범죄 예방 초점)

- 대상 및 목적: 경찰청이 지정한 취약 지역 및 위험 지역이 포함된 주의 행정청은 2023~2026년까지 0~18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의 범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 기반의 체계적·장기적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확대 사항: 기존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폭력 퇴치 및 예방에도 기여할 예정임.
- 일정: 주 행정청은 2026년 3월 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027년 3월 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025년 12월 19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12/kunskapslyft-for-barns-rattigheter-och-utvecklat-foraldraskapsstod/>

❖ 기타

1. 정부, 가족 상담 및 가족법 관련 지자체 업무 강화

■ 가족 상담 및 가족법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 아동의 가족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 가족법 관련 지원과 가족 상담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가족법 업무 강화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 상담 서비스에 5천만 크로나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 해당 보조금은 특히 사회적 배제가 심각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됨.

■ 사회복지부 장관의 발언

- 사회복지부 장관 카밀라 윌터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든 아이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상담 및 가족법 관련 업무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사회부 장관의 발언

- 사회부 장관 제이콥 포스메드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함. “부모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미래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 상담 서비스는 필수적인 개입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 관계는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법 및 가족 상담 서비스 역할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가족법 관련 지원과 가족 상담 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가족 상담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발생하는 관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해결책이 제공됨.
-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담당하는 양육권, 거주권 및 면접 교섭권과 같은 가족법적 사안들은
- 별거 또는 이혼한 부모들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정부의 지원 및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총 5천만 크로나를 지원하며, 이 지원금은 사회적 배제가 특히 심각한 20개 지방자치단체 내 40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됨.
- 가족법 및 부모 지원청에 보조금 지급 및 평가를 담당하도록 지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 상담 및 가족법 관련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2025년 02월 06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2/regeringen-starker-kommuners-arbete-med-familjeradgivning-och-familjeratter/>

2.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성범죄 및 기타 중범죄 예방을 위한 신규 지원 자료 개발

■ 유치원 및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신규 지원 자료 개발

-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웨덴 교육청에 새로운 지원 자료를 개발할 것을 지시함.
- 이 자료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 성범죄와 기타 중범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

■ 교육부 장관 발언

- 교육부 장관 로타 에드홀름(Lotta Edholm)은 다음과 같이 강조함. “유치원과 학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어른들로부터 보호받고,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및 유치원이 중범죄 예방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있어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법에 따른 채용 절차 및 추가 보호 조치

- 스웨덴 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근무할 예정인 모든 인원은 반드시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야 함.
-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용될 수 없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그러나 범죄경력 조회만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적합한 인물의 근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

■ 신규 지원 자료의 주요 내용

-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스웨덴 교육청에 성범죄 및 기타 중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자료를 개발할 것을 지시함.
- 이 자료에는 채용 과정에서 학교 및 유치원이 취해야 할 조치가 포함될 예정임.
- 교직원과 아동 및 학생 간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안이 포함됨.
- 범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제시될 계획임.

■ 사회복지부 장관 발언

- 사회복지부 장관 카밀라 월터슨(Camilla Waltersson)는 다음과 같이 강조함.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학교와 유치원이 안전한 학습 및 성장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성범죄 및 중범죄 예방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2025년 02월 20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02/nytt-stodmaterial-ska-forebygga-sexualbrott-och-andra-grova-brott-i-forskolan-och-skolan/>

3. 수두 백신, 아동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

■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2027년부터 수두 백신을 아동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아직 수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추가 접종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

- 2026년 예산안에서는 보건복지청에 300만 크로나를 배정하여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임.

■ 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 수두는 흔하지만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가지만 긴 병가와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 예방접종은 아동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비용효율적인 공공보건 조치로 평가됨.

■ 시행 계획 및 예산

- 아동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2027년부터 추가 자원을 투입할 예정임.
- 보건복지청은 2026년 동안 본 사업을 준비하며, 준비 과정에는 백신 구매 계획 수립, 홍보자료 제작, 권고안 마련 등이 포함됨.
- 정부는 2027년부터 매년 4,300만 크로나를 지역 당국에 지원하여 백신 구매 및 접종을 시행할 계획임.
- 또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따라잡기(catch-up) 접종’을 위해 7년간 예산을 편성,
- 2027년에는 4,900만 크로나, 2028년에는 5,100만 크로나를 각각 배정함.
- 이 사업을 통해 2033년까지 모든 18세 미만 아동이 수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인사 발언 (1) 사회부 장관 야콥 포르스메드(Jakob Forssmed)

- “우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수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수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고, 의료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며,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로 인한 국가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 주요 인사 발언 (2) 사회복지부 장관 카밀라 발테르손 그룬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l)

- “수두는 많은 아동에게 긴 병가, 심한 가려움,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합니다. 모든 아동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강화하고, 학교와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며, 부모의 일상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안전을 높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투자입니다.”

■ 주요 인사 발언 (3) 자유당 아동권리정책 대변인 헬레네 오덴융(Helene Odenjung)

- “모든 아동은 학교에 다닐 만큼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간단하고 중요한 단계로, 더 많은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고 또래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주요 인사 발언 (4) 스웨덴민주당 원내대표 린다 린드베리(Linda Lindberg)

- “이 조치는 수두를 예방하고 아동의 고통을 줄이는 중요한 비용효율적 투자입니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질병 예방을 강화하고, 의료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VAB)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추진 근거 및 협력 구조

- 본 제안은 정부와 스웨덴민주당 간의 합의에 기반함.
 - 보건복지청은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두 예방접종 도입 준비를 주관하며, 2026년에는 준비 작업을 위해 300만 크로나가 배정됨.
 - 2027년과 2028년에는 아동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 내 정기접종을 위해 각각 4,300만 크로나가 책정될 예정임.
 - 따라잡기 접종을 위한 추가 예산은 2027년 4,900만 크로나, 2028년 5,100만 크로나가 각각 배정됨.
- ※ VAB(Vård av barn): 부모의 자녀 간호 휴가 제도

2025년 09월 14일

출처 : <https://www.hhs.gov/about/news/2025/01/13/fact-sheet-hhs-secretary-becerras-postpartum-maternal-health-collaborative-effectively-mobilizes-state-local-partnerships-improve-outcomes.html>

4.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건강 생활습관 조사 기반 마련

■ 개요: 특수학교 학생 대상 조사 여건 분석

- 정부는 공공보건청에 특수학교(Anpassad skola)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학교

아동 건강생활습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여건 분석을 지시함.

■ 주요 내용 및 절차

- 예비 조사 수행: 이번 과업에는 전국 조사의 시행 과정에 특수학교를 포함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예비 조사(Pilot Survey) 수행이 포함됨.
- 지식 수집: 공공보건청은 시민사회 내 관련 단체, 아동복지 연구 재단, 관계 기관 및 학술 공동체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수집할 예정임.
- 보고 일정: 조사 결과는 2027년 2월 1일까지 정부에 보고되어야 함.

■ 주요 인사 발언 (1) 카밀라 발테르손 그뢴발(Camilla Waltersson Grönval) 사회서비스부 장관 발언

- “모든 아동은 학교 형태와 관계없이 건강하게 지낼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지식이 필요하다. 이번 예비조사는 그동안 전국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들을 전국 학교아동 건강생활습관 조사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 주요 인사 발언 (2) 시모나 모함손 (Simona Mohamsson) 교육·통합부 장관 발언

- “학교는 모든 아동에게 평등을 실현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건강 생활습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다. 이번 임무는 형평성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책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올바른 방향의 중요한 조치이다.”

2025년 12월 18일

출처 :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5/12/skolbarns-halsovanor-i-anpassad-skola/>

호주

임신·출산지원		
1	연방정부, 사립병원 폐쇄로 산모 서비스 부족한 호바트 지역 지원	194
양육지원		
1	서호주, 2025년 학생 교육비 지원금 지급…가정당 자녀 1인당 최대 250달러 지원	196
2	3일 보장제: 2026년 1월부터 아동 보육 보조금(CCS) 자격 활동 기준 변경	198
유아교육·보육		
1	원주민 아동을 위한 50번째 “Connected Beginnings” 프로그램 센터 개소	200
2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족은 더 유연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1
3	북부 테리토리,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첫 PALM 제도 근로자 맞이	202
4	빅토리아주, 유아 교사를 위한 코치 및 멘토 교육 프로그램 시작	204
5	연방정부 2025-26년 영유아 교육 예산안 발표	206
6	장애 아동 포용을 위한 유치원 맞춤 지원 모델 개발: 빅토리아 주 2차년도 연구 착수: KIS 프로파일·MTSS 접근 기반의 근거 중심 통합 지원 방안 시범 운영	208
7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사회 유아학교를 위한 2025년 ‘Start Strong’ 프로그램 발표: 포용성과 형평성 중심의 유아교육 보조금 확대 정책	210
8	국가품질프레임워크(NQF) 개정 및 아동 안전 가이드 개요	213
9	유아교육·보육(ECEC) 규제 강화 법안 도입	215
10	빅토리아주, 아동 학습 및 발달 보고서 개선 - 초등학교 전이 지원	217
11	빅토리아주, 유치원 교육 우수성 접근법(Kindergarten Teaching Excellence Approach) 소개	218
12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CCTV 활용에 대한 전국 평가 계획	220
13	뉴사우스웨일스주, 최대 규모의 주 외곽 지역 공립 유치원 건립 착수	221
14	‘돌봄 및 발달 정책 파트너십(ECCPP) 12차 회의’ 결과 보고	223
15	국가품질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의 2025년 연간 평가 보고서	225
아동·청소년 지원		
1	남호주, ‘수리 능력 보장제’ 도입…곤스키 협약 이행의 첫걸음	227
2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229
기타		
1	호주 아동 초기 발달 전수조사(AEDC): 조기 개입을 위한 국가 단위 발달 모니터링 체계	232
2	유아교육·보육(ECEC) 및 유아 시력검사(StEPS) 프로그램 검사 인력 대상 ‘아동 관련 업무 자격 확인(WWCC)’ 지침 발표	233
3	빅토리아주, 정보공유 제도와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MARAM) 체계 개혁	235
4	호주 국가 아동 조기 개입 최선 실행 지침 관련자용 가이드라인 발표	237

❖ 임신·출산지원

1. 연방정부, 사립병원 폐쇄로 산모 서비스 부족한 호바트 지역 지원

■ 호바트 지역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 알바니즈 연방정부는 타즈메니아 주의 호바트 및 인근 지역의 임산부와 신생아가 필수 산부인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즈메니아 주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호바트 사립병원(Hobart Private Hospital)이 8월부터 산부인과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의료 시스템 전반에서 산부인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연방정부는 타즈메니아 주정부에 6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임.
※ Healthscope는 호주 6개 주에서 여러 사립병원을 운영하는 호주 최대 규모의 민간 의료 그룹 중 하나임.

■ 타즈메니아 산부인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 이번 지원금은 타즈메니아 건강 서비스(Tasmanian Health Service)와 켈버리 레나 밸리(Calvary Lenah Valley) 병원의 인프라 및 의료 장비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산모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호바트 지역의 산부인과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를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이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지속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출산 선택권 확대 및 민간 의료 시스템과의 협력

- 호주 정부는 산모가 출산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건강 보험사와 사립 병원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임.

■ 버틀러 장관의 발언

-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다음과 같이 강조함. “알바니즈 정부는 호바트 지역 여성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사립병원이든 국립병원이든, 민간보험 혜택을 받든

받지 않든, 모든 산모는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강 보험사와 사립 병원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 페트루스마 장관의 발언

- 타즈매니아 주정부 보건부 장관 가이 바넷(Guy Barnett)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타즈매니아의 부모들이 필요한 산모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발표된 지원을 통해, 호바트 국립병원(Hobart Public Hospital)과 캘버리 레나 밸리 병원(Calvary Lenah Valley Hospital)이 호바트 사립병원의 산모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연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출산하는 산모들이 뉴타운(New Town)의 세인트 존스 파크 병원(St John's Park Hospital) 모자 병동으로 옮겨 보다 포괄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후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도 대형 병원 외부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산모와 신생아가 출산 과정에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5년 02월 26일

출처 : <https://www.health.gov.au/ministers/the-hon-mark-butler-mp/media/support-for-hobart-mums-and-babies?language=en>

❖ 양육지원

1. 서호주, 2025년 학생 교육비 지원금 지급...가정당 자녀 1인당 최대 250달러 지원

■ 서호주(WA) 주정부는 2025년부터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 교육비 지원금 (WA Student Assistance Payment)을 지급했음. 이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제공되며, ServiceWA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음.

■ 지원금 개요

- 본 제도는 서호주 가정의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교재 및 IT 기기 구매, 스포츠 및 음악 활동비, 문구류, 학교 신발, 교복, 현장 학습, 캠프 비용, 식료품을 포함한 그 외 기타 교육 관련 지출

■ 신청 기간

- 2025년 4월 28일(월)부터 7월 4일(금)까지 신청을 받았음.

■ 지원 대상

- Kindergarten(유치원)부터 Year 12(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둔 부모 또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했음.
- 공립·사립·비인가 학교 재학생, 또는 홈스쿨링 등록 아동을 포함했음.
- 서호주 학교에 전액 자비 등록한 유학생도 해당되었음.
- 성인 학습자 중 WACE(서호주 고교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 중인 경우도 포함되었음.
- 위탁 보호, 조손 양육, 친척 보호, 법적 보호자 하의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
- 지리적 요인으로 원격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및 크리스마스섬 및 코코스 제도 고등학교 재학생도 해당되었음.

■ 지원 금액

- 유치원 및 초등학생: 자녀 1인당 150 AUD를 지원했음.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250 AUD를 지원했음.

■ 신청 시 필요 정보

- 신청 시 WA 고유 학생번호를 제출하도록 했음. 해당 번호는 성적표, NAPLAN 결과지, SmartRider 카드 등에서 확인 가능했음.
- Kindergarten(4세), Pre-primary(5세)에 처음 입학한 아동은 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 학교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했음.

■ 신청 방법

- 신청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었음.
- ServiceWA 앱, WA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음.

■ ServiceWA 앱 신청 절차

- ServiceWA 앱을 다운로드하게 했음.
- myID 디지털 ID를 생성하도록 했음.
- 앱에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음.

■ 사전 준비 사항

- 신청자에게는 학생의 고유번호,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등의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요청했음.
- 앱이 아닌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100점 신원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 출생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음.
- 입금 계좌번호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음.

■ 이번 학생 지원금은 학비 외에도 아동의 전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육의 기회 형평성과 실질적 가계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서호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했음.

2025년 04월 22일

출처 : <https://www.wa.gov.au/government/announcements/the-wa-student-assistance-payment-back-2025>

2. 3일 보장제: 2026년 1월부터 아동 보육 보조금(CCS) 자격 활동 기준 변경

■ 호주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아동 보육 보조금 (CCS) 자격 활동 기준을 변경하여, 모든 아동이 매주 최소 3일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조기 교육 및 보육(ECEC)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임.

■ 주요 변경사항 (2026년 1월 5일부터 적용)

- 아동 보육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모든 가정은 주당 3일(2주 기준 72시간)의 보조금 지원 보육을 받을 수 있음.
- 원주민 아동을 돌보는 가정은 2주 기준 100시간의 보조금의 지원 보육을 받을 수 있음.
- 72시간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Service Australia 기관에 부모의 활동 시간을 보고해야 함.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각 아동별 2주 기준 100시간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
 - 부모가 2주 기준 48시간 이상 정부에서 인정된 활동을 할 경우(일, 학업, 자원봉사 등)
 - 면제나 예외적 상황의 경우(건강문제, 가족돌봄, 자연재해, 기타 긴급 상황 등)

■ 주의 사항

- 주 3일 보장제는 CCS 보조금 지원 산정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대부분의 가정은 본인 부담금(gap fee)를 부담해야 함
- 주 3일 보장제는 3일이라는 지원 시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실제 보장 시간은 아동이 등록한 보육시설의 자리 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혜택 대상

- 3일 보장제는 보편적 조기 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축의 다음 단계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보조금 지원 접근성을 제공함: 저소득 가정, 근로 형태가 유동적인 가정, 원주민 아동을 돌보는 가정, 한부모 가정

■ 첫 번째 전체 회계연도 예상 효과

- 10만 가정 이상이 더 많은 보조금 지원 시간을 이용 가능

- 약 66,700 가정이 연평균 \$1,370 ASD 절감 혜택

■ 향후 계획

- 호주 교육부는 Service Australia와 협력하여 2026년 1월 변경사항에 맞추어 승인된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가정이 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정

■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권장 사항

- 조기 교육 및 보육 뉴스레터 구독
- CCS 승인 제공자 및 서비스 Facebook 그룹 참여 - 최신 정보 확인 가능

2025년 09월 28일

출처 : <https://www.acecqa.gov.au/latest-news/3-day-guarantee-changes-ccs-activity-test-january-2026>

❖ 유아교육·보육

1. 원주민 아동을 위한 50번째 “Connected Beginnings” 프로그램 센터 개소

- 1월 26일 호주 정부는 서호주 쿠누누라(Kununurra)에 50번째 “Connected Beginnings” 프로그램을 진행할 센터를 개소함. 이 프로그램은 원주민 아동이 인생을 가장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원함.
- Connected Beginnings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아동과 아동 가족이 다양한 원주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지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와 통합하는 데에도 활용됨.
 - 모자 건강, 영유아 교육(ECEC), 가족 지원, 유치원과 학교, 지자체 지원
- 2021년 호주 정부는 2025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전국 50개 센터를 개설하는 데 8,18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1월 26일 50번째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함.
- 유아교육부 장관 혼 앤 앨리는 1월 26일 오전 쿠누누라 지역에 50번째 프로그램 진행센터를 위해 비나리-빈자 야로우 원주민 센터(Binarri-binyja yarrowoo Aboriginal Corporation Limited)에 24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 새로운 센터는 쿠누누라의 원주민 아동 약 600명을 지원할 것임.
- 현재 전국 50개 지역센터에서 약 24,800명의 원주민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0세부터 5세까지 호주 전역에 있는 모든 원주민 아동의 20%가 지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예상됨.
- “Connected Beginnings”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호주 비원주민과 원주민 아동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학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함.
- 호주 영유아부와 노인복지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 사무국(SNAICC National Voice for our Children) 및 국립 원주민 공동체 통제 보건기구(National 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Health Organisation, NACCHO)와 협력하여 진행됨.

2025년 01월 26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celebrating-50-connected-beginnings-sites-across-australia>

2.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족은 더 유연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36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센터에 59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 지원을 통해 아동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보육센터에 있을 수 있으며, 아동을 위한 350개의 다양한 시설을 추가 설립할 것으로 기대함. 지원금의 대상은 Flexible Initiatives Trial(FIT)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의 결과로써 지원을 받게 됨.
- 2024년 4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16개 서비스 센터가 평일운영 시간이 연장 운영될 수 있었고, 주말 운영 및 아동을 위한 추가 활동 장소를 설치할 수 있었음. 2025년 보조금 수령 센터는 시드니 수도권 6곳, 서부 시드니 9곳, 뉴사우스웨일스 지방 21곳임.
- 이 새로운 지원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가족의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원이 가장 필요한 장소와 시기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조금은 종일보육을 하는 서비스 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최대 350개의 추가 활동 장소를 만들고, 방과후와 주말 동안 아동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더 많은 새로운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며, 놀이방과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사용될 것임. 또한 5개의 새로운 가정보육 센터를 오픈할 수 있게 함.
- 이는 어린 가족(young families)과 아동을 조기에 지원하려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임. 여기에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100개의 새로운 공립 유치원을 짓기 위한 7억 6,900만 달러의 투자가 포함되어 있음. 이 금액은 뉴사우스웨일스 주 내 공립 유치원에 대한 전례 없는 최대 투자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가장 필요한 지역의 비 공립학교에 유치원을 짓고 보수하는 데 6천만 달러를, 유아교육 서비스를 위한 자본 사업에 1,7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음.
-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Choice Preschool Kindergarten Auburn 센터는 20명의 아동이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루 두 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이 서비스는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와 난민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제공될 것임.
 - Koorana Croydon Street Preschool Lakemba 센터는 4월, 7월, 10월 방학 기간에 최대 18명의 미취학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임. 이 서비스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을 지원함. 아동은 해당 방학 기간 새로운 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NDIS(국가장애인보험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25년 01월 29일

출처 : <https://www.nsw.gov.au/ministerial-releases/more-families-to-benefit-from-flexible-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3. 북부 테리토리,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첫 PALM 제도 근로자 맞이

■ 호주, PALM 시범계획 통해 유아교육 분야 노동력 보강

- 파푸아뉴기니 근로자들이 태평양-호주 노동 이동(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PALM) 시범계획의 일환으로 호주 북부 테리토리 준주의 다윈 지역으로 이동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에서 근무하며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 PALM 계획은 태평양 섬나라 주민들이 호주에서 단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시행 이후 주로 농업 분야에서 운영되었음. 이번에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가 포함되면서 적용 분야가 확대됨.

■ 호주 정부, 노동력 부족 해결 및 태평양 국가와 협력 확대

- 이 시범계획은 호주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내 노동 시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
- PALM 계획을 확대하고 개선하여 장기적인 기술 및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임.

■ 파푸아뉴기니 출신 교육자 14명, 유아교육 분야 배치

- 호주 정부에서 승인받은 파푸아뉴기니 출신 유아교육 전문가 14명이 현지 인력난이 심각한 캐서린(Katherine) 및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 지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지역 내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 확충이 기대되며,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PALM 제도의 경제적 효과

- 2017년 PALM 제도가 시행된 이후, 파푸아뉴기니에서 2,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
- 근로자들은 호주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벌어들인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여 가족과 지역사회를 부양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태평양 섬나라 및 동티모르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근로자 만족도 및 경제적 혜택

- ANU/World Bank가 태평양 출신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8%가 PALM 제도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음. 92%가 PALM 제도를 통해 다시 근무하고 싶다고 응답함.
- PALM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500달러를 저축하거나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는 본국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의 최대 9~10배에 달함.

■ 호주 정부, PALM 제도 확대 및 개선 추진

- 호주 정부는 호주 기업과 태평양 및 동티모르 파트너 국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ALM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할 계획임.

■ 국제 개발 및 태평양 담당 장관 발언

- 국제 개발 및 태평양 담당 장관 팻 콘로이(Pat Conro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PALM 제도 근로자들은 호주의 시골 및 벽지 지역의 문화와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푸아뉴기니에서 온 PALM 계획의 첫 유아교육 및 보육 교육자들이 북부 테리토리로 도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시범 사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호주 지역사회와 태평양 및 동티모르 국가를 위한 PALM 계획 확대 및 개선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캐서린과 엘리스 스프링스의 경제에 귀중한 기여를 하며,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서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 파푸아뉴기니 재무부 장관 발언

- 파푸아뉴기니 재무부 장관 이안 링-스터키(Ian Ling-Stuckey)는 다음과 같이 강조함. “파푸아뉴기니는 PALM 계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양자 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호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파푸아뉴기니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는 동시에 농업, 육류 가공, 노인 케어 및 유아교육 및 보육(ECEC)과 같은 분야에서 호주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고용 및 직장 관계 장관 발언

- 고용 및 직장 관계 장관 머레이 와트(Murray Watt)는 PALM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 “PALM 제도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및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호주 시골 및 벽지 지역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즈 정부 출범 이후, 호주 연방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4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2025년 02월 17일

출처 : <https://ministers.dewr.gov.au/watt/northern-territory-welcomes-first-palm-scheme-workers-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

4. 빅토리아주, 유아 교사를 위한 코치 및 멘토 교육 프로그램 시작

■ 코치 및 멘토 교육 프로그램 (Coach and Mentor Training Program) 요약

- 교사와 교육자의 코칭 및 멘토링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함
- 훌륭한 멘토와 코치가 되기 위한 기본요소 학습
-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멘토 및 코치의 역량 향상에 중점
- 변화 관리와 웰빙과 같은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 학습
- 경험 많은 교사와 교육자가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빅토리아주 교육부가 후원하며 Mott MacDonald 교육 컨설팅이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대체 근무자 급여 지원 및 참가자가 장거리 이동시 필요한 비용은 교육부가 전액 지원

■ 참여 대상

- 이 프로그램은 경험이 풍부한 유아 교육 교사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함
- 이미 코치 및 멘토 역할을 수행 중이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싶은 사람
- 경험이 많으며 앞으로 코치나 멘토가 되고 싶은 사람

■ 참여 조건

- 현재 빅토리아주에서 정부 지원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 중이어야 함

■ 자격요건

- 교사: 정식 VIT 등록 필수
 - ※ VIT(Victorian Institute of Teaching): 빅토리아주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가져야하는 필수 자격증
- 교육자 자격요건: ACECQA(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기관) 승인 디플로마(Diploma)자격증 필수
- 최소 5년 이상의 유치원 교육 경험
- 프로그램 활동 및 요구사항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프로그램 특징

-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기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을 제공하며, 교육부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코칭 및 멘토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됨. 대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이 병행됨.

■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하게 됨

- 현재 본인의 코칭 및 멘토링 방식 분석 및 개선
- 서포트하는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협력관계 형성
- 코칭 및 멘토링 대화 기술 향상

■ 프로그램 효과

- 참가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칭 및 멘토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 개발
- 변화 관리를 위한 코칭 및 멘토링을 적용
- 자신과 동료와의 웰빙을 증진

■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공하며, 참가자 간 토론 및 성찰 기회를 마련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일정 및 등록

- 이 프로그램은 3회의 대면 워크샵과 최소 3개의 온라인 모듈로 구성됨. 참여자는 모든 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지원이 필요함.

■ 일정

- 대면 워크숍은 멜번 시내에서 진행됨. 2025년 1차
 - 기간: 4월 24일 - 7월 31일
 - 현재 신청 마감됨 (등록 대기 가능)
- 2025년 2차
 - 기간: 7월 29일 - 10월 29일
 - 등록 시작: 6월 17일

■ 기존의 '효과적인 멘토 프로그램(Effective Mentor Program, EMF)'과의 차별성

- 효과적인 멘토 프로그램(EMF)는 신입교사(Provisionally Registered Teacher, PRT) 멘토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반면,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모든 경력단계에 있는 동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시키는 코치 및 멘토 프로그램으로서 더 포괄적인 훈련을 제공함.
 - ※ Provisionally Registered Teacher: 교사 자격증은 있되 경력이 부족한 교사를 말하며, full registration을 위해서는 1년 경력(약 200일)을 쌓아야 Australian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로 등록될 수 있음.

2025년 03월 14일

출처 : <https://www.vic.gov.au/coach-and-mentor-training>

5. 연방정부 2025-26년 영유아 교육 예산안 발표

■ 지난 3월 25일 호주 정부는 2025-26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함.

- 호주 정부는 모든 아동이 주 3일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기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가정이 간편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총 50억 호주달러(AUD)를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자 보유 지급금 (Worker Retention Payment) – 36억 AUD

- 영유아 교사 및 교육자 약 20만 명의 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을 방지하고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조기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

■ 조기교육 인프라 확충 기금 (Building Early Education Fund) – 10억 AUD

- 외곽 지역 및 농어촌 등 서비스 취약 지역에 고품질 조기교육 시설 160곳(신설 또는 확장 예정)을 지원
- 가능한 경우 학교 부지 내에 설립하여 공간 활용도 제고

■ ‘3일 보장 프로그램(3 Day Guarantee)’ – 4억 2,660만 AUD

- 기존의 Child Care Subsidy Activity Test를 대체
- 모든 가정이 주 3일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제도 시행 첫 회계연도에 약 10만 가구가 추가적인 시간의 보육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실제 사례: 밀라나와 로한 가족

- 밀라나와 로한 부부는 자녀 1명을 양육 중이며, 연소득은 9만 AUD
- 밀라나는 전일제 근무, 로한은 주 8시간 근무
- 현재는 주당 18시간(격주 36시간)의 보조금 지원 대상
- 2026년 1월부터는 ‘3일 보장’ 제도를 통해 주당 36시간(격주 72시간)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됨
- 보육기관의 평균 요금 기준으로 주당 약 230 AUD, 연간 11,400 AUD의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음

■ 한편 호주 연방정부는 전 열대성 사이클론 엘프리드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과 조기교육·보육 (ECEC) 기관을 위해 추가로 250만 호주달러(AUD)를 지원함.

- 이는 2025-26 호주 연방정부 예산(ECEC 분야)의 일환으로 포함된 “추가 조치(supplementary measure)”이며, 긴급 상황 대응 목적의 예산 항목임.

- 전 사이클론 앨프리드 지원금(ex-Tropical Cyclone Alfred support payment)'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보육료 보조금(CCS, Child Care Subsidy) 승인 서비스 기관에 대해 1만 호주달러씩 지급됨.
- 지원 대상 조건: '사이클론 앨프리드 관련 긴급상황(Period of Emergency)'이 선포된 지방정부 지역(Local Government Area) 내에 소재하고, 해당 긴급기간 동안 8일 이상 완전 또는 부분 휴원했으며, 휴원 기간 동안 가정의 본인부담금(gap fee)을 면제한 경우
- 지원 목적: 이번 지원금은 사이클론 피해로 장기간 운영 중단이 불가피했던 기관과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가정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또한 본 지원은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기관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기존 CCS 긴급상황 제도에 추가로 제공되는 특별 조치임.

2025년 03월 25일

출처 : <https://budget.gov.au/content/04-education.htm#m1>
<https://www.education.gov.au/about-department/corporate-reporting/budget/202526-budget>

6. 장애 아동 포용을 위한 유치원 맞춤 지원 모델 개발: 빅토리아 주 2차년도 연구 착수: KIS 프로파일·MTSS 접근 기반의 근거 중심 통합 지원 방안 시범 운영

■ 연구 개요

- '유치원 내 장애 아동 포용 연구'는 2년간의 단계별 프로젝트로,
- 2024년 1차년도 연구를 마치고 2025년 2차년도에 진입함.
- 연구 주관: 빅토리아 주 교육부
- 연구 목적: 복합적인 의학적 요구, 장애,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 접근과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것에 있음.

■ 연구의 주요 목표

- 아동이 학습과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직원이 포용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아동의 다양한 기능적 요구와 강점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함.

- 현장의 교사, 전문가, 가족, 보건의료 인력 간 협력 구조 강화를 도모함.

■ 장애 포용 요구 설문조사 결과 (2024)

- 2024년, 빅토리아 주 교육부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장애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포용 요구를 조사함.
- 주요 결과:
 - 사회·정서적 지원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 신체적 지원 요구는 가장 낮게 나타남.
 - 남아의 지원 요구 비율이 여아보다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시골 지역일수록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남.

■ KIS 프로파일 시험 운영 (2024)

- KIS(Profile for Kindergarten Inclusion Supports)는 아동의 강점, 요구, 필요한 조정사항을 문서화하는 도구로 개발됨.
- 개발 과정에는 전문가, 교사, 가족, 보건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60개 이상의 유치원과 100여 명의 아동이 시범 적용에 참여함.
-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피드백이 수집되었고, 2차년도에 정교화된 형태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 효과적인 포용 모델: MTSS 접근법

- 연구는 MTSS(Multi-Tiered System of Support)를 가장 효과적인 포용 모델로 제시함.
- MTSS는 아동의 지원 필요 수준에 따라 맞춤형 개입을 제공하는 체계적 모델임.
- 2차년도 연구에서는 MTSS를 현장 교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어떻게 실천에 적용하는지를 심층 분석할 예정임.

■ 2025년 2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 KIS 프로파일 업그레이드 및 시범 적용
 - 약 150개 유치원, 200명의 아동 대상

- 평가 도구 정교화 및 운영 가이드 실험 적용
- 현장 실천 지원의 확장
 - 포용 지원 실행 가이드 및 자료 개발
 - 유치원 교사와 기관이 자율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육지원 유형별 데이터 수집
 - 정부 지원 유치원 프로그램 내
 - 추가 지원 아동의 필요 유형·지원 수준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자료 수집

■ 연구 참여 유치원 모집 및 운영 계획

- 참여 기관은 2025년 Term 2 종료 시점(7월 4일)부터 새롭게 개발된 근거 기반 통합 포용 지원 방안을 시범 운영할 수 있음.
- 연구 활동은 Term 3~4 기간(12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됨.

▶ 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

- 참여 유치원에는 \$3,000 호주달러의 연구지원금이 제공됨.
- 또한, 맞춤형 포용 지원 패키지(tailored package of inclusion supports)가 함께 제공되어 실제적 포용 실행을 위한 행정, 교육, 환경적 조치를 보조할 예정임.

2025년 05월 09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may-2025/next-steps-disability-inclusion-research-kindergartens-project>

7. 뉴사우스웨일스주, 지역사회 유아학교를 위한 2025년 ‘Start Strong’ 프로그램 발표: 포용성과 형평성 중심의 유아교육 보조금 확대 정책

■ 프로그램 개요 및 목적

- Start Strong 프로그램은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교육부가 운영하며, 3~5세 아동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지원 대상은 지역사회 유아학교(preschool)과 이동 유아학교(mobile preschool).
- 유아학교 교육 개혁 합의(Preschool Reform Agreement)에 따라, 접근성 확대, 참여 증진,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예산 및 운영 일정

- 총 예산: 약 \$4.8억 ~ \$5.5억 호주달러
- 사업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금 산정 기준: 연간 Preschool Census(유치원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 지원금 유형 (1) 프로그램 운영비 (Program Payment)

- 연 600시간 이상 등록 아동 수 기준
- 인건비, 교육자료비, 임대료, 유지비, 교사 연수 등에 사용 가능

■ 지원금 유형 (2) 이용료 감면비 (Fee Relief Payment)

- 아동 1인당 연 최대 \$4,347 지원
- 주당 15시간 이상 참여 유도
- 초과 예산은 등록비, 재료비, 비감면 아동 요금 보조 등에 활용 가능

■ 주요 특징

- 사회적 형평성 및 보편적 접근성 확보
- SEIFA 지표(사회경제 지역지표)를 활용해 취약지역 유치원에 가중 지원
- 원주민, 저소득층, 장애 아동 등에게 추가 자원 배정
- 시골·벽지 이동 유치원 대상 지역 가산금 지급
-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 및 초등학교 전이(Transition to School) 지원 강조

■ 지원 자격 요건 (1) 기관 요건

- 비영리 지역사회 또는 이동 유치원

-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 교사에 의해 운영
- Child Care Subsidy(CCS) 지원 시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 자격 요건 (2) 아동 요건

- 2025년 7월 31일 이전 기준 만 3세 이상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아동
- 국적 및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지원 자격 요건 (3) 우선 지원 대상 (Priority of Access)

- 만 4세 이상, 학교 미진학 아동
- 다음 요건 중 하나 해당 시 3세 이상도 우선 대상임:
 - 저소득층
 - 원주민 아동
 - 장애 또는 추가 지원 요구 아동
 - 영어 보완이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위험군

■ 요금 정책 및 사용 규정

- 감면비 지원을 명목으로 요금 인상 불가
- 동일 연령대 아동은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요금 적용
- 남은 감면 예산은 이월 가능하며, 빈 자리에 대한 금액은 '예약금'으로 분리 보관 후 자격 아동이 등록할 때만 사용 가능

■ 보고 및 문서 관리

- 연간 Preschool Census 제출 필수
- 감면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및 보관
- 초등학교 전이 성명서(Transition to School Statement) 작성 및 학교에 제공

- 회계 장부, 영수증, 지출 내역 등 재무 문서 철저 관리 필수

■ 재정 운영 및 정산

- 분기별 선불 지급 방식
- 연말 정산 시, 10% 또는 \$30,000 이하 이월 허용
- 초과 금액은 반납하거나, 사전 승인 필요

■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개선

- 성과 모니터링 및 서비스 품질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침 개정 및 개선안 반영 예정

2025년 05월 21일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operating-an-early-childhood-education-service/grants-and-funded-programs/start-strong-funding/start-strong-for-community-preschools/2025-start-strong-for-community-preschools-program-guidelines>

8. 국가품질프레임워크(NQF) 개정 및 아동 안전 가이드 개요

■ 개요

- 호주 연방, 주 및 준주 교육부 장관들은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품질프레임워크(National Quality Framework, NQF)의 핵심 규제사항과 표준에 대한 개정을 단행했음. 본 개정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강화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대응, 전자담배 사용 금지, 품질 영역 내 안전 요소 명시 등 여러 정책적 변화를 담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변경사항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품질청(ACECQA)은 서비스 제공자와 교사를 위한 NQF 아동 안전 가이드를 새롭게 발간하고 보급했음. 서호주(Western Australia)는 일부 시행 일정이 상이함.

■ NQF 주요 변경사항 요약

-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환경의 안전한 사용 정책 도입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아동의 사진 및 영상 촬영, 사용, 보관, 폐기에 관한 기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포함한 사용 원칙, CCTV 등 시각 감시장치 사용 여부, 기관이 지급한 디지털 기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 아동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방침
- 이는 2024년 발표된 국가 모델 코드(National Model Code)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음.
- 아동 학대 관련 신고 기한 단축
-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의심 또는 사건 발생 시, 기존 7일 이내 → 24시간 이내로 신고 기한이 단축되었음.
- 전자담배 사용 금지
- 기존의 담배, 불법 약물, 알코올 금지 항목에 전자담배 및 관련 기기 사용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음.
- 품질 기준 명시 개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품질 영역 2번(건강 및 안전): 요소 2.2.3이 ‘아동의 안전과 보호’로 명확히 명시되었으며, 모든 교직원이 아동학대 또는 방임의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 품질 영역 7번(거버넌스 및 리더십)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이 요구됨.
- 표준 7.1과 요소 7.1.2에서는 위험 관리 체계와 운영 지원 시스템을 통한 안전 확보가 핵심으로 규정되었음.

■ NQF 아동 안전 가이드 주요 내용 1: 아동 사진·영상 촬영 및 사용 지침

- 아동의 이미지는 기관에서 제공한 기기로부터 촬영하고 보관해야 하며, 개인 기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었음.
- 보호자 동의와 보안 절차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미지 삭제 및 접근권한 관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함.

■ NQF 아동 안전 가이드 주요 내용 2: 개인 전자기기 사용 제한

- 교직원 및 방문자는 아동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개인 기기 사용이 금지됨.

- 의료적 목적, 긴급연락 등 예외적 상황은 사전 승인 및 문서화가 요구됨.

■ 향후 계획 및 지원

- 2025년 6월 11일 종료된 아동안전 검토(Child Safety Review)와 공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추가 개정 여부 및 시기를 논의할 예정임.
- ACECQA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 가이드와 교육자료를 2025년 9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임.
- 이미 아래 두 가지 공식 가이드가 공개되었음: NQF 아동 안전 문화 가이드 (NQF Child Safe Culture Guide), NQF 온라인 안전 가이드 (NQF Online Safety Guide)

2025년 06월 13일

출처 : <https://www.acecqa.gov.au/latest-news/new-nqf-child-safety-guides-are-available>

9. 유아교육·보육(ECEC) 규제 강화 법안 도입

■ 법안 목적

- 호주 연방정부는 조기 아동 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부문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음. 이 법안은 보육 품질과 아동 안전을 정부 보조금(CCS, Child Care Subsidy) 승인 및 유지의 핵심 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변경 사항 1. CCS 승인 심사 강화

- 신규 승인 심사 시 고품질 보육에 대한 운영자의 의지, 기존 서비스의 품질·안전성, 법규 준수 이력 등을 고려

■ 주요 변경 사항 2. 기존 승인 센터에 대한 규제 조치 강화

- 품질·안전 문제 발생 시 제재 가능
- 심각한 경우, CCS 자금 지원 중단 가능

■ 주요 변경 사항 3. 기준 미달 운영자 차단

- 반복적으로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운영자는 신규 CCS 서비스 개설 불가

■ 주요 변경 사항 4. 운영자 제재 내용 공개

- 학부모와 가정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

■ 주요 변경 사항 5. 무작위 현장 방문 허용

- 정부 승인 담당관이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센터 방문 가능

■ 주요 변경 사항 6. 감시 영장 신청 권한 위임

- 자격을 갖춘 부처 직원에게 감시 영장 신청 권한 부여

■ 주요 변경 사항 7. 대형 보육기관 독립 감사 의무화

- 자격·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 실시

■ 주요 변경 사항 8. 가정 보육·가정 내 보육(CCS gap fee 납부 규정 변경)

- CCS의 본인 부담금(gap fee)을 보육 교사가 아닌 가족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예외 허용)

■ 관계 장관 발언 (1)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부 장관

- “아동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법안은 기준 미달 보육기관의 CCS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합니다.”

■ 관계 장관 발언 (2) 제스 월시(Jess Walsh) 조기 아동 교육부 장관

- “이 법안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ECEC 산업을 더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동 안전 문제에 있어 어떠한 타협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추가 정보

-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 향상 관련 문의: 각 주·준주의 규제 기관 또는 ACECQA 웹사이트 참고

2025년 07월 23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newsroom/articles/legislation-introduced-strengthen-early-childhood-education-and-care-regulation>

10. 빅토리아주, 아동 학습 및 발달 보고서 개선 - 초등학교 전이 지원

■ 빅토리아주 교육부는 유아기 평가 및 학습 도구(Early Years Assessment and Learning Tool, EYALT)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전이(Transition) 과정을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음.

■ 전이 학습 및 발달 보고서 목적

- 아동이 초등학교로 원활하게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작성의무

-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 전원에 대해 유치원에서 작성해야 함.

■ 전이 보고서 역할

- 온라인 도구(Insight Assessment Platform)에 탑재되어 유치원 교사가 손쉽게 작성하고 아동이 배정된 초등학교로 직접 전송 가능.
- 해당 보고서는 학교 프로필과 연결되며,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 지원 전략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 초등학교 현장에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함.

■ 개선 사항

- EYALT와 연계하여 전이 보고서 1.1 항목이 자동 작성됨.
- 행정 부담과 문서 작업 시간을 줄여 교사가 아동 발달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EYALT 전이 보고서 내용

- EYALT 모듈과 빅토리아 유아기 학습 및 발달 프레임워크(VEYLDF) 연계.
- 아동별 프로필 보고서 제공: 각 모듈에서의 학습 수준과 진척도 반영.
- 의도적인 교수 및 학습 전략: 초등학교에서 학습·발달 연속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추가 지원

- 실행 지침 제공.

- 온라인 보고서 및 EYALT 관련 자료와 전문 학습 접근 가능.
- 전이 보고서 작성 관련 무료 전문 학습 제공.

2025년 08월 08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august-2025/improvements-make-transition-learning-and-development-statements-faster-and-easier>

11. 빅토리아주, 유치원 교육 우수성 접근법(Kindergarten Teaching Excellence Approach) 소개

■ 유치원 교육 우수성 접근법(Kindergarten Teaching Excellence Approach, 이하 교육 우수성)

- 빅토리아주 유치원의 고품질 유아 교육 실천 지원을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임.
- 주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실천 역량 강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함.

■ 전문성 개발 및 지원 체계

-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맞춤형 전문성 개발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사와 교육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을 받게 됨.
- 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종사자 대상 주요 투자로,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발달 과정을 파악하며 최적의 교수 전략을 적용해 학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둠.

■ 유아교육 허브(Early Childhood Hub)

- 교육 우수성 프로그램의 자료와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신설됨.
- 주요 기능
 - 최신 연구 및 성인학습 이론에 기반한 온디맨드(on-demand) 교육 제공
 - 분야 전문가가 개발한 검증된 고품질 자료 제공
 - 사용자 역할·경험·관심사에 맞춘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
- 사용자 등록 및 프로필 생성 시, 허브가 맞춤형 과정과 지원을 추천함.

- 모든 과정을 필수 이수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라 선택적 참여 가능

■ 전문 실천 지원 카테고리 (Professional Practice Support Categories)

- 교직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성됨: 기초(Build), 심화(Embed), 혁신(Innovate)
- 졸업생, 경력교사, 리더 등 모든 수준의 종사자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됨.
- 새로운 도전과 통합적 학습 경험을 제공함.
- 향후 현장 맞춤 코칭 및 멘토링 지원 추가 예정.

■ 빅토리아 유치원 학습 진행(Victoria's Kindergarten Learning Progressions)

- 교육 우수성과 병행하여 도입 예정임.
- 교사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교수 전략을 설계하고 학습·발달을 지원하도록 돕는 모델.
- 주요 구성
 - 아동의 핵심 학습 영역별 역량 표시
 - 발달 학습 모델 기반 맞춤형 학습 전략 제공
 - 3-4세반 유치원 및 학령기 전이 단계 지원
- 관련 자료는 유아교육 허브 또는 전용 웹사이트에서 열람 가능.

■ 자료 배포 계획

- 빅토리아주 내 모든 유치원에 안내자료 발송 예정.
- 포함 내용
 - 유치원 교육 우수성 접근법 설명
 - 유아교육 허브 활용 안내
 - 주요 인력지원 정책 세부사항

2025년 10월 13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october-2025/introducing-kindergarten-teaching-excellence-approach>

12.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CCTV 활용에 대한 전국 평가 계획

■ 평가추진 배경

- 호주 주 및 준주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ECEC) 분야에서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정책을 추진 중임.
- CCTV는 이러한 유아교육 환경에서 아동의 안전을 지원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활용 방식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이 여전히 존재함.

■ 전국 CCTV 활용 평가 개요

- 이번 평가는 ECEC 환경에서의 CCTV 사용 방식을 탐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최대 300여 개 ECEC 서비스 센터를 대상으로 함.

■ 평가 영역

- 윤리, 안전, 투명성이 핵심임.
-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및 벽지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에서 실시됨.

■ 평가 목표

-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일상 운영 방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일관·최선의 서비스 수행(Best Practice)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근거자료 구축.

■ 추진 체계와 참여 대상

- 주 및 준주 정부를 대표해 나우스 그룹(Nous Group)이 이번 평가의 설계와 수행을 총괄하며 다음 기관 및 당사자와 협력함.
- 연방 교육부·각 주 및 준주 정부·관련 분야 전문가·ECEC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자, 가정

■ 전문가 패널 구성

- 별도의 전문가 패널이 평가하며, 다음의 기관 대표자들이 패널에 포함됨: 호주 아동보호센터 (Austral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호주 연방경찰 (Australian Federal Police)·호주 정보위원회 (Office of the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국가 아동안전

사무소 (National Office for Child Safety)·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 품질청 (ACECQA)·기타 주요 기관들

■ 일정과 향후 계획

- 현재는 평가 설계 단계가 진행 중이며,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 초에 시작될 예정임.
- 이 사업은 국가 공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각 주 및 준주 정부가 참여를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나우스 그룹에 연결하는 역할을 함.
- 평가가 끝나면 독립 평가자가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 검토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며, 최종 보고서는 2026년 3분기에 각 주의 교육부 장관들에게 제출될 예정임.

2025년 11월 18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update-national-cctv-assessment>

13. 뉴사우스웨일스주, 최대 규모의 주 외곽 지역 공립 유치원 건립 착수

■ 사업 개요

- NSW 주 정부가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립 유치원 건설 프로그램을 주 외곽 지역에서 착수함.
- 2025년 말까지 20개 이상의 신규 공립 유치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임. 여기에는 일라와라 및 쇼얼헤이븐 지역 10개를 포함하여 전체 외곽 지역에 총 49개의 공립 유치원이 포함되며, 2027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NSW 전역에 100개의 공립 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의 가정들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의 핵심 선거공약이자 역사적인 교육 인프라 사업임.

■ 투자 규모와 인프라 특징

- 총 7억 6,900만 호주 달러를 투입하여 NSW 내 공립 유치원 수를 두 배로 늘리는 공립 조기 교육 역사상 최대 확충 계획임.
- 모든 공립 유치원은 인근 공립학교 안, 또는 바로 옆에 함께 조성되어 취학 전 아동의 초등학교 전환을 돕고 형제·자매를 둔 부모의 등·하교 부담(이중 픽업 문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설된 유치원들은 조경이 갖춰진 야외 놀이터를 포함한 최신식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며, 완공 후에는 지역사회 내 약 9천 명의 아동에게 추가로 고품질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포괄적인 조기교육 투자

- 100개의 공립 유치원 건립 프로그램은 NSW 전역의 모든 아동에게 최상의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투자의 일부이며, 다음의 추가 투자가 포함됨
- 지역사회 커뮤니티 유치원이 운영시간을 늘리고 더 많은 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달러(AUD) 지원
- 사립 및 종교계의 비정부 학교 내 50개의 유치원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6천만 달러(AUD) 지원
- 원주민 주도 조기교육 지원 위한 2억 달러(AUD) 지원
- 유아교육 종사자 확충을 위한 장학금에 2천 900만 달러(AUD) 이상 투입

■ 주요 인사 발언 (1)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총리

- “아이들에게 최상의 출발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NSW 지역 49곳을 포함해 100개의 새로운 공립 유치원을 짓고 있다. 시골 및 벽지 지역의 NSW 가정들은 집 가까이에 저렴하고 질 좋은 조기교육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해왔다. 이번에 짓는 새로운 공립 유치원들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전 정부는 12년 동안 공립 유치원을 단 하나도 짓지 않았다. 우리는 첫 임기 안에 100개를 짓고 있으며, 이 유치원은 공립학교와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두 번 데려다주기’ 문제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주요 인사 발언 (2)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 NSW 외곽 지역 담당 장관

- “이번 착공은 일라와라와 사우스 코스트 전역에서 10개의 새로운 공립 유치원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 새로운 유치원들은 외곽 지역의 가족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조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투자이며, 그 추진이 시작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주요 인사 발언 (3) 코트니 호소스(Courtney Houssos) 교육 및 조기 교육 장관 대행

- “우리는 외곽 지역의 더 많은 아동에게 최상의 교육 출발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 높은 조기교육이 아동의 학교 성공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로 인생을 바꾼다. 따라서 크리스 민스 노동당 정부는 부총리 프루 카의 리더십 아래 이 역사적인 약속을 하였고 이는 NSW 주의 모든 아동이 고품질 조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다.”

■ 지역 관계자 반응

- 케이틀린 맥클러니(Katelin McInerney, 키아마 지역): 보마데리의 무료 공립 유치원 건설 시작을 축하하며, 외곽 지역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리자 버틀러(Liza Butler, 사우스 코스트 지역): 사우스 코스트 전역에서 새 공립 유치원 건설이 시작된 것에 큰 자부심을 표현하며, 학교 부지 내 공립 유치원 건립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음을 강조함.
- 디오니 헨브리지(Dionne Hanbidge, 보마더리 공립학교 교장): 학교 부지 내 유치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유치원이 학교 부지에 있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함.

2025년 11월 14일

출처 : <https://education.nsw.gov.au/news/latest-news/historic-regional-public-preschool-build-officially-underway>

13. ‘돌봄 및 발달 정책 파트너십(ECCPP) 12차 회의’ 결과 보고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12~13일, 캔버라
- 주최: ‘조기 아동 돌봄 및 발달 정책 파트너십(ECCPP)’
- 의장: 캐서린 리들(Catherine Liddle, SNAICC 의장), 카일리 크레인(Kylie Crane, 교육부 차관보)
- 주요 의제: 아동 발달 지연과 장애, 원주민 아동 지원의 중요성 강조. 정부 부처(교육부, 사회서비스부 등)와 원주민 기구(SNAICC 등) 간 협력을 통한 발달 격차 해소 진행 상황 공유.

■ ECCPP 최우선 과제 추진

- 목표: 아동의 안전·발달·복지 증진 및 ‘Closing the Gap(격차 해소)’ 국가 협약 목표 달성 촉진. (※ Closing the Gap: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건강·교육·고용·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호주 국가 장기 정책)

■ [최우선 과제 1A] 아동보호체계 내 원주민 아동 비율 고려 및 예산 배분

- 방향: 아동·가족 서비스 예산 중 ‘원주민 커뮤니티 통제 조직(ACCO, Aboriginal Community Controlled Organizations)’에 배분되는 비율 확대.
- ACCO의 역할: 지역 원주민 가족의 필요에 맞는 문화적으로 안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
- 정부 대응: 사회서비스부는 2024-25년 검토에서 제기된 ‘포용성 부족’ 피드백을 반영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 중이며, 이는 ACCO 지원 확대의 기회로 평가됨.
- 원주민 대표 협의체 요구: 재정 전환 비율에 대한 구체적 목표 설정 및 ACCO를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시스템 설계의 핵심 주체로 인식할 것을 강조.

■ [최우선 과제 1B] ACCO를 위한 충분하고 조정된 재정 모델 개발

- 현황: 현재 재정 구조는 분절적이고 비원주민 중심이라 지속가능한 인력 구축에 한계가 있음.
- 필요성: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인프라, 임금 형평성, 문화적 기능 등)을 반영한 모델 필요.
- 진행: SNAICC가 연구를 수행 중이며, 결과는 향후 가족·아동 프로그램 개편에 반영 예정.

■ 주요 논의 및 향후 계획

- Closing the Gap 이행: 각 주·준주 정부의 이행 계획에 ‘최우선 개혁 과제’를 내재화하는 것이 핵심.
- Thriving Kids 개혁: 0~8세 발달 지연·자폐 아동 지원 체계 구축 (가족 통합 지원, 문화적 안전성, ACCO 전용 재정 모델 등).
- 평가 및 전략: 2026년 초 ECCPP 평가 보고서 공개 예정. 2026~2028년 제2차 전략 계획 수립 워크숍 진행.

2025년 12월 08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early-childhood-care-and-development-policy-partnership-meeting-12-outcomes>

14. 국가품질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의 2025년 연간 평가 보고서

■ 개요: 국가품질체계(NQF)

- 목적: 아동의 건강·안전·복지 및 교육적·발달적 성과 제고.
- 현황(2025.6.30. 기준): 약 18,000개의 운영 승인 서비스 존재.
 - 종일보육(Long Day Care): 9,465개
 - 방과 전·후 보육: 5,061개
 - 유치원/프리스쿨: 3,077개
 - 가정보육(Family Day Care): 412개
- 성과: 국가품질기준(NQS) 7개 영역 전반에서 ‘충족(Meeting)’ 이상 등급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주요 챕터별 성과 요약

1장: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 조치: 사고 보고 신속화, 디지털 기술 보호, 전자담배(Vape) 금지, 전국 CCTV 평가, 교사 등록부 개발 등 추진.
- 성과: 서비스의 95%가 건강·안전 영역(QA2)에서 ‘충족’ 이상 달성 (NQF 도입 후 최고치).
- 과제: 중대 사고 보고율 증가 (100곳당 160건, 전년 148건). 약 8%는 규정 위반 관련.

2장: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실천

- 성과: 94%가 교육 프로그램(QA1)에서 ‘충족’ 이상 달성. 가정보육(FDC) 부문의 품질 향상이 두드러짐(82% 충족).
- 상관관계: 교육 프로그램의 질은 ‘리더십(QA7)’ 및 ‘아동과의 관계(QA5)’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임.

3장: 취약 아동 및 장애 아동

- 우려사항: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었으나, 아동의 발달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함 (2024 아동발달조사).

*1개 영역 이상 취약: 23.5% (2021년 22%)

*2개 영역 이상 취약: 12.5% (2021년 11.4%)

- 격차: 사회경제적 취약 지역의 품질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유한 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특히 ‘초과(Exceeding)’ 등급에서).

4장: 인력(Workforce)

- 현황: 서비스의 7.4%가 ‘인력 기준 면제(Staffing waiver)’ 상태이나, 최근 3년 대비 개선됨. 면제의 90%는 영유아 교사(ECT) 부족 때문.
- 개편: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교사 양성과정 평가 기준 시행 (만 3세 미만 영아 대상 실무 경험 확대, 안전한 수면 등 안전 교육 강화).

5장: ‘품질’에 대한 가족의 이해

- 인식: 품질 등급 인지도가 59%로 2017년 대비 19% 증가함.
- 선택 요인: 숙련된 교육자, 평판, 위치, 프로그램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함.

2025년 10월 13일

출처 : <https://www.acecqa.gov.au/sites/default/files/2025-12/NQF%20Annual%20Performance%20Report%202025%20-%20Report%20summary%20FINAL.pdf>

❖ 아동·청소년 지원

1. 남호주, '수리 능력 보장제' 도입...곤스키 협약 이행의 첫걸음

- 남호주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모를 위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수리 능력 보장제(Numeracy Guarantee)를 도입하기로 했음.
 - 이 보장제는 2026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리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체결된 곤스키(Gonski) 자금 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곤스키 협약은 2012년 호주 정부가 발표한 교육 개혁안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음. 특히 취약 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교사 교육 강화, 학교 성과 향상을 중심에 두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통해 모든 학생이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음.
 - 남호주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수학 성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음.
- 2025년 1월 발표된 해당 협약에 따라, 남호주 주 정부와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총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증액될 예정임.
- 연방 정부는 공립학교 자금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으며, 주 정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교 자원 기준(SRS)의 75%를 부담하기로 했음.
- 양자 간 협약은 '더 나은 공정한 학교 협약(Better and Fairer Schools Agreement)'이라는 명칭 아래,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완전하고 공정한 자금 지원(Full and Fair Funding) 체계를 목표로 시행되며, 이는 올해 1월 정식으로 서명되었음.
- 이 협약을 통해 남호주 내 공립학교는 곤스키 모델에 따라 100% 자원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으며, 이는 남호주 교육 재정 구조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음.
- 정부는 향후 10년간 모든 공립학교에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이러한 협약의 이행 조치로 수학 성취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개선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그

핵심이 바로 ‘수리 능력 보장제’임.

■ 남호주는 해당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1학년 대상 수리 능력 점검 시험을 도입한 데 이어, 호주 최초로 문해력과 수리 능력 점검을 모두 시행하는 주가 되었음.

■ ‘수리 능력 보장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들이 포함되었음:

- 모든 초등학교 수학 커리큘럼 리더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학교 전체의 수학 성취도를 높이기로 했음.
- 예비 교사들이 수학 교육의 효과적 지도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음.
- 유치원부터 고학년까지 전 학년을 아우르는 수학 전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음.
-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수리 학습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음.
- 수학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수학 지식을 더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음.
- 모든 공립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리 능력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음.

■ 이 보장제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세계적 수준의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교사들에게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수학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게 되었음.

■ 이번 정책 방향은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 『The Maths Guarantee』에서 제안한 방향성과도 일치했음. 해당 보고서는 교사 훈련 개선, 수학 교육에 대한 학교의 제도적 지원 강화, 수학 교육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음.

■ 곤스키 협약은 또한 남호주 공교육 전략을 심화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음. 해당 전략은 교육의 형평성과 우수성, 학생의 웰빙, 지속가능한 교육 인력 확보를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학생들이 성취와 성장의 기회를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 이에 따라 확보된 추가 자금은 다음과 같은 교육 개혁 과제와도 연계되었음:

- 학교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교사 확보를 위한 유치·유지 전략, 멘토링 및 재교육 프로그램

- 소규모 튜터링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생 출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전환 프로그램 시행

2025년 04월 17일

출처 : <https://www.education.sa.gov.au/department/media-centre/our-news/south-australia-to-introduce-a-numeracy-guarantee-as-first-action-under-new-gonski-funding-agreement>

2.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 아동 안전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과도 밀접히 연관됨. 따라서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 AI 사용 시 위험과 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음.

■ 아동 학습과 발달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정부 승인된 학습 프레임워크 영역
 -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세계 속에서 생활하며, 디지털 기술을 탐색함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 이는 정보 접근, 아이디어 탐구, 자기표현, 협력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됨.
 - 디지털 기술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성이 확대됨.
- 통합 AI 영역
 -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짐.
 - AI 활용 시 아동과 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AI의 작동 방식
- AI의 장점과 잠재적 위험
- AI가 아동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

■ 아동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서 AI 사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 기본 규칙 설정
 - 정부 승인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AI 사용에 관한 기본 규칙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AI 사용이 가능한 상황과 불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 규칙은 센터 직원·아동·가족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수립되어야 함.
- 정책 및 절차 반영
 - AI는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안전 정책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함.
 -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 AI를 사용할 경우, 교육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함.
 - 아동은 항상 적절한 감독하에 있어야 하며, 특히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보다 긴밀한 감독이 요구됨.
-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 AI가 수집한 아동 데이터가 해킹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존재함. (예: 호주 아동의 사진이 인터넷에서 무단 수집되어 AI 학습에 활용된 사례 등)
 - 개인정보는 반드시 비식별화 조치가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 제작 시 아동의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서는 안 됨.
- 참고자료
 - 호주정보위원회: 상업용 AI 제품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제공
 - eSafety 위원회 'eSafety Early Years' 프로그램: 온라인 위험 인식 및 정책 개발 지원
 - 국가품질프레임워크(NQF) 온라인 안전 가이드: AI 관련 정보, 자기평가 및 위험평가 도구 제공

■ 전문지식의 중요성

■ AI 활용 가능 영역

- 행정 업무의 간소화: 학습 문서 제작에 도움이 되고 아동의 향후 학습 경험에 관한 제안이 가능함
- AI는 교육자의 기술 보완은 할 수 있으나, 교육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아동과 가족에 대한 이해 부분은 AI로 대체 불가함

■ 교육자의 역할

- 아동 및 가족과 협력하여 AI를 통한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제공
- AI 사용 시 고려사항
 -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 제공에 있어 교육자 자신의 지식과 기술 적용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 아동 학습과 관련되어 생성형 AI 활용 시 부정확하거나 제한된 분석이 제공될 수 있음을 인지
 - AI를 통하여 맞춤형 학습 설계와 평가 부분에서의 어려움 인지

■ 대면 상호작용의 중요성

- 신뢰 기반 관계와 존중적 상호작용 필수
-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핵심
- AI 도구는 고품질 교육의 대면 상호작용 대체 불가

2025년 09월 28일

출처 : <https://www.acecqa.gov.au/latest-news/use-artificial-intelligence-ai-education-and-care-services>

❖ 기타

1. 호주 아동 초기 발달 전수조사(AEDC): 조기 개입을 위한 국가 단위 발달 모니터링 체계

■ 개요

- 호주에서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달 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아동 초기 발달 전수조사(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 AEDC)’를 시행해왔음. 본 조사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 수준을 국가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AEDC는 2009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었으며, 매회 약 30만 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현재까지 누적 150만 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 조사 목적 및 구성

- AEDC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시점까지 어떻게 발달해왔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임. 조사는 담임교사를 통해 수행되며, 아동의 발달 수준을 다음의 5개 핵심 영역에 따라 평가하도록 구성되었음.
- 신체 건강 및 웰빙, 사회적 능력, 정서적 성숙, 언어 및 인지 능력(학교 기반), 의사소통 능력 및 일반 상식
- 교사는 약 100개의 항목에 응답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발달 수준에 따라 ‘정상’, ‘위험’, ‘취약’으로 분류되었음.

■ 2024년 AEDC 개요

- 2024년 AEDC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 기간: 2024년 5월 1일 ~ 7월 31일
- 수행 기관: 사회조사센터(Social Research Centre, SRC)가 호주 교육부와의 계약 하에 조사 수행을 담당함.
- 참여 규모: 전국 약 288,000명의 아동, 7,400개의 초등학교에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음.
- 활용 현황: 2024년 결과는 이미 공개되었으며, 기관 및 개인이 관련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주요 결과(2024년)

- 5개 전 영역에서 정상 발달 아동 비율 감소: 2021년 54.8% → 2024년 52.9%로 소폭 하락했음. 다만, 2009년 기준치(5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발달상 취약한 아동 비율 증가:
 - 1개 이상 영역에서 취약한 아동 비율: 2021년 22% → 2024년 23.5%
 - 2개 이상 영역에서 취약한 아동 비율: 2021년 11.4% → 2024년 12.5%
- 이러한 증가는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코로나19의 영향,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음.

■ 정책적 활용 및 시사점

- AEDC 결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 정책 수립과 자원 배치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었음. 특히 아래와 같은 정책적 의의가 있음.
-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에 기여했음.
- 학교 준비도 평가를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음.
- 원주민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전략 수립에 활용되었음.
- 보편적 유아교육 접근 확대와 조기 투자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음.

2025년 06월 13일

출처 :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bout/data-and-reports/australian-early-development-census>

2. 유아교육·보육(ECEC) 및 유아 시력검사(StEPS) 프로그램 검사 인력 대상 ‘아동 관련 업무 자격 확인(WWCC)’ 지침 발표

■ 배경

- 2025년 7월 4일, NSW 보건 및 사회정책부(Health and Social Policy)는 주 전역 보건구(Local Health Districts)와 지역사회 보건센터에, ECEC(조기아동교육·보육) 프로그램과 StEPS(주 전역 유아 시력검사) 프로그램에서 건강·발달 검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 Working With Children Check(WWCC) 절차를 적용·관리하는 지침을 배포했음.

■ 적용 대상

- 아동·가족 건강 간호사, 관련 보건 인력, 행정 담당자, 임상 인력

■ 지침 목적

- 지역 보건구에 ECEC 및 StEPS 프로그램 내 건강·발달 검사 인력의 WWCC 자격 확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법적 의무 준수와 아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 고용주는 아동 관련 업무에 대해 WWCC 자격 확인을 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법임.
- NSW 보건부는 법적 고용주로서, WWCC 자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함. (NSW 아동보호법 2012 제9A조)
- ECEC 서비스 기관도 법적 고용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NSW 보건부 직원의 WWCC 상태를 확인·기록할 의무가 있음. 불이행 시 벌금 부과 가능.

■ ECEC·StEPS 내 검사 절차 관련 권장 사항

- ECEC 기관이 NSW 보건부 직원의 WWCC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 권장 정보: 직원 이름, 생년월일, WWCC 번호, WWCC 유효 만료일
- ECEC 기관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복사·기록·저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며, 직원 동의 시에만 가능.

■ StEPS 프로그램 개요

- NSW 보건부 주도로 만 4세 아동 전원에게 무료 시력검사 제공
- 학교 입학 전 시력검사 권장
- 2018년 외부평가 결과: 효과적인 운영과 아동·가족의 높은 혜택 확인
- StEPS 프로그램 안내
<https://www.health.nsw.gov.au/kidsfamilies/MCFhealth/Pages/steps.aspx>

■ WWCC란?

- 아동과 일하려는 사람의 범죄 이력, 부적절 행위, 아동 대상 폭력·성적 접근 여부를 확인해 아동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
- 승인 거부 시 유치원, 보육원, 학교, 아동기관 근무 불가
- 근무 중 승인 결격 사유 발견 시 즉시 업무 중단 조치

■ WWCC 안내

- WWCC를 신청하면 정부가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동과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거절함. WWCC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원, 보육원, 학교, 아동 기관에서 일할 수 없으며, 일하던 도중에 발견이 될 경우, 일자리에서 나가야 함.

2025년 07월 04일

출처 : https://www1.health.nsw.gov.au/pds/ActivePDSDocuments/IB2025_024.pdf

3. 빅토리아주, 정보공유 제도와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MARAM) 체계 개혁

■ 빅토리아주는 정보공유 제도(Information Sharing Schemes)와 다기관 위험평가 및 관리(MARAM, Multi-Agency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개혁을 통해 유아 교육 서비스가 아동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개혁 내용

- 이해관계자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보공유·가정폭력 대응 지침과 도구를 업데이트했음.
- 서비스 기관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 복지와 안전을 강화함.

■ 새롭게 포함된 자료

- 서비스 리더, 전 직원, MARAM 담당자용 책임 지침.
- 모든 직원이 가정폭력을 식별하도록 돕는 도구.
- MARAM 담당자가 선별·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규 템플릿 및 도구.
- 정보공유 제도 실행 관련 개정 내용.

■ MARAM 담당 직원 제도

- 서비스 규모에 따라 최대 3명의 MARAM 담당자를 선정해야 함.
- 담당자는 가정폭력 선별, 안전 계획 수립, 의뢰·보고를 담당.
- 신규 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교사 등록을 위한 전문 학습 시간으로 인정됨

■ MARAM 직원 교육 세부사항

- 기간: 2026년 2학기 말까지 제공.
- 시간: 4시간 과정.
- 방식: 대면 및 온라인 옵션 제공, 유아교육 전용 세션 포함.
- 비용: 무료, 대체 교사 인건비 환급 가능.

■ 정보 공유 및 Child Link

- 아동 정보 공유제도(CISS, Child Information Sharing Scheme): 교육 전문가가 아동 복지·안전을 위해 다른 기관과 정보를 요청·공유할 수 있는 제도.
- Child Link: 아동과 주요 유아교육 서비스 참여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도구로, CISS의 핵심 지원 도구.
- 두 체계는 전문가가 아동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조기 지원과 연계를 가능하게 함.

■ 지원 효과

- 아동 복지·안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 향상.
- 위험·취약성 조기 식별 및 피해 확대 예방.
-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전인적 지원 제공.
- 서비스 연계를 통한 아동 전이 과정의 공백 최소화.

2025년 08월 08일

출처 : <https://www.vic.gov.au/early-childhood-update-august-2025/information-sharing-and-maram-reforms>

4. 호주 국가 아동 조기 개입 최선 실행 지침 관련자용 가이드라인 발표

■ 지침 개요

- 호주 정부는 9세 미만 아동 중 발달 지연·장애·발달 우려가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최선 실행 지침서(National Best Practice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이하 ECI)를 마련함.
- 본 지침은 「호주 장애 전략(Australia's Disability Strategy) 2021-2031」의 유아기 중점 실행계획(Early Childhood Targeted Action Plan) 일부로 추진됨.
- 목적은 모든 아동이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 실무자, 아동 관련 종사자, 가족·양육자 대상의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각각 제공됨.

■ 지침 구성

- 보편적 원칙, 핵심 원칙, 실전 지침으로 구성됨.
- 아동 발달 및 가족 참여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측정 방법 포함.
-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적 도구 및 자료 제공.
- 호주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위탁하고 멜번대학교(Melbourne University)가 주도함.

■ 지침의 중요성 및 지원 원칙

- 조기 개입은 아동의 건강, 학습, 웰빙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장애나 발달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결정적 시기의 지원이 될 수 있음.
- 지원 원칙
 - 1) 가족 중심(Family-centred)
 - 2) 안전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Safe and culturally responsive)
 - 3) 포용적이며 서비스 접근이 용이(Inclusive and accessible)
 - 4) 병원 외 일상생활 속에서 제공(Delivered in everyday environments)

■ 대상별 핵심 목표

- 아동: 생애 초기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양육자: 가족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아동 지원에 대한 자신감·역량 강화.
- 지역사회: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 조성, 모든 아동과 가족이 접근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자·실무자: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 체계적이고 접근 가능한 일상기반 서비스 제공.

■ 협력기관 및 참여자

- 연구 주관: 멜번대학교 산하 연구팀
 - Healthy Trajectories Child and Youth Disability Research Hub
 - Melbourne Disability Institute
 - Strong Kids, Strong Future
- 주요 협력 단체:
 -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CYDA)
 - Murdoch Children's Research Institute
 - SNAICC (Secretariat of National Aboriginal and Islander Child Care)
 - ACD (Association for Children with a Disability)
- 참여자 범위: 실무자, 가족, 청소년, 전문가, 지역사회 단체, 국내외 자문단

■ 실무자(Practitioners)용 가이드라인

- 대상: 정부, 비정부, 비영리, 민간 등 모든 ECI 실무자
- 주요 내용: ECI 서비스의 목표, 성과, 원칙 제시, 실행 지침 및 도구 제공, 의사결정 가이드 포함 (목표 설정, 전략, 팀 구성, 서비스 방식·장소·강도 등), 14개 핵심 원칙별 실천 가이드, 안내자료(fact sheet), 성과 측정 도구 제공
- 효과 확인 지표: 안정적이고 신뢰 기반의 가족 관계 형성,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결정, 소속감·정체성 발달, 학습·놀이·건강습관·행동 조절 능력 향상

■ 아동 관련 종사자용 가이드라인

- 대상: 유아교육·보육기관, 학교, 지역사회 서비스, 정부 기관
- 주요 내용: 정책·프로그램·규정이 지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도록 안내, 정책입안자, 프로그램 설계자, 규제기관을 위한 실행 기준 제시
- 효과 확인 지표: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지역사회 형성, 참여와 포용의 환경 조성, 명확한 의사소통 및 협력 촉진, 지식·기술·자원 습득 기회 확대, 아동과 가족의 놀이·교류 활성화, 아동의 발달 및 복지 향상에 대한 공동 책임 강화,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의료·교육·여가 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가족·양육자용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ECI 서비스에서 기대 가능한 사항 안내, 가족을 아동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가족의 우선순위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명확하고 신속한 정보 접근 보장, 가족용 가이드, 아동 성장·학습 지원 가이드, 용어집 제공, 의사결정 지원 도구 및 서비스 목표·전략·팀 구성·서비스 방식·강도에 관한 안내 포함
- 효과 확인 지표: 긍정적 사회적 지원망 형성, 아동의 강점·발달·기능 향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립, 경험과 기회 제공에 대한 부모의 자신감 향상, 근거 기반 ECI 서비스 선택·결정 역량 강화, 가족을 위한 적극적 옹호 및 자기결정 강화, 가족생활과 통합된 맞춤형 지원 유지,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역사회 속 생활 보장, 추가 필요 서비스 접근 용이성 확보

2025년 10월 02일

출처 : <https://www.health.gov.au/our-work/national-best-practice-framework-for-early-childhood-intervention/about>

2025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TEL. 02-398-7700 FAX. 02-398-7798